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3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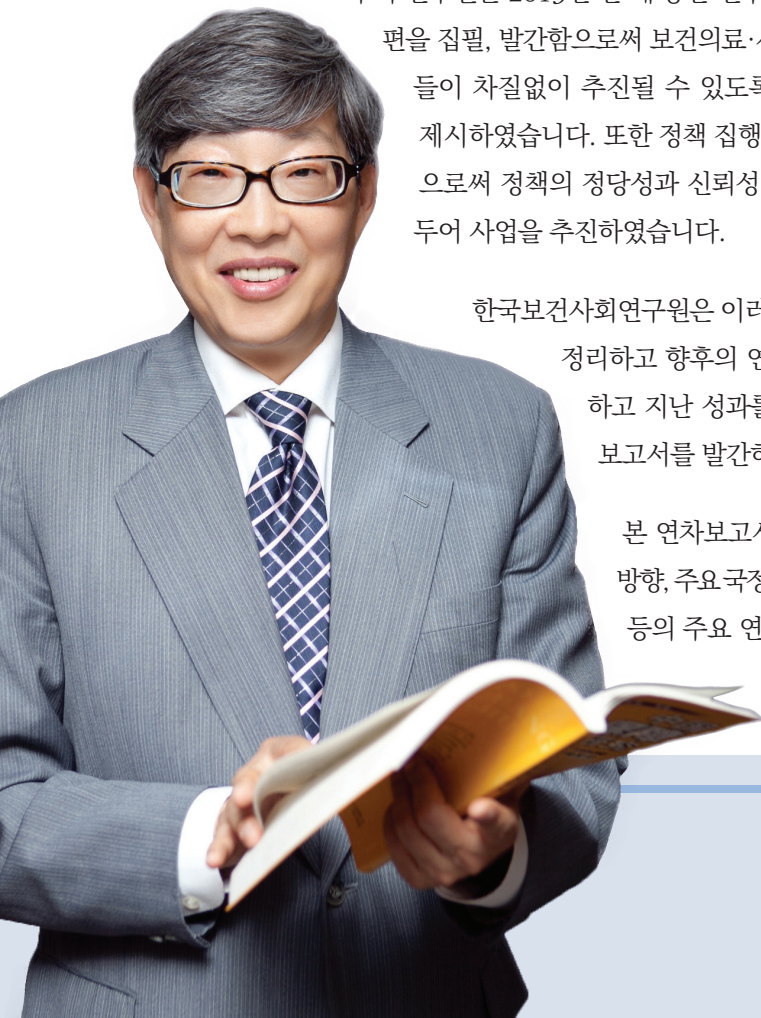
발 간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3년에는 미래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 선도를 목표로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80여편, 정책보고서 130여편을 집필,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부문의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집행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2013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3년의 연구목표 및 운영방향, 주요 국정과제 관련 연구성과, 2014년 연구사업 등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담았습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능동적이며 근거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및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CONTENTS

발 간 사

002

Chapter I

KIHASA 현황

설립목적, 연혁, 주요 기능	030
조직도, 인원 현황	031
비전 및 경영목표	032
조직별 주요 업무	033

Chapter II

2013년 연구사업

2013년도 사업목표	040
2013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040

Chapter III

2013년 연구성과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46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48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50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54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7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5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62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6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67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69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71
	건강영향평가 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73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76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83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 한국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86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89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92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94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96	

Chapter III

2013년 연구성과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선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100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기준 연구	103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106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추진과제	10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110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1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116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121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124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127
	취약 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차년도)	130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35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	138
	2013년 빈곤통계연보	141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144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147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149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15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15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159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161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164
	복지재정DB구축과 지표분석	16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169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172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175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78

Chapter III

2013년 연구성과

	의(醫)-한의(韓醫) 공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180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182
	국민대통합 및 추진전략 연구	185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188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19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	19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195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198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206
	출산·보육 연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209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11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214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1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220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 방안 모색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224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227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23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232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234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237
10. 국민안전 보호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42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245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248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251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254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25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261

Chapter IV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264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7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269

2013년 연구활동

2013 주요행사	274
정기간행물	284

Chapter V

2014년 연구사업

2014년도 사업목표	294
연구사업 운영방향	294
2014년도 사업개요	296

Chapter VI

부록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기본연구/수시연구/일반사업/협동연구/수탁연구)	304
기타 간행물	311
연구위원 현황	312
도서관	315
KIHASA 웹사이트	316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3



KIHASA 2013 VIEW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1월		-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 토론회(1.16)		- 2013년 사무식(1.2)
2월		-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지향적 건축모형 관련 정책토론회 (2.14)		- 제1차 기초보장모니터링 포럼 (2.13) - 1사1촌 마을 정월 대보름 행사 (2.24)
3월		-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3.5)		- 서울대학교 간호대생 단체견학 (1차) (3.7) - 경영전략워크숍 (3.15~3.16) - 미래사회포럼(3.29)
4월	- Bruno Salzmann 교수 초청 간담회: 한국의 출산율 변화 및 대응정책(4.18)	- 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4.5) -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역할정립방안 세미나 (4.17)		- 복지포럼(4.9) - 서울대학교 간호대생 단체견학 (2차) (4.11) - 제2차 기초보장모니터링 포럼 (4.18) - 미래사회포럼(4.24) - 명사초청 특강(이규식 명예교수) (4.25) - 전직원 춘계 북한산 등반 (4.26) -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4.30)
5월	- A Perspective for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in Korea 세미나(5.24) - 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 (5.30~5.31)	-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 선별검사 및 정책과제 세미나(5.9)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개토론회(5.16) -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관련 정책 토론회(5.23)	- 인제대학교(5.24) - 국민건강보험공단(5.24)	- 1사1촌 마을 파종기 일손돕기 (5.9) - 제1차 고령사회포럼(5.14) - 보사연 건전흔레문화모델 개발을 위한 무료예식장 시범운영 (5.25) -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5.28) - 서울대학교 간호대생 단체견학 (3차) (5.30) - 미래사회포럼(5.31) - 제1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5.31)
6월	- Bryan S. Tuner 교수 초청 세미나-저출산, 신말서스주의의 딜레마와 사회적 다양성(6.4) - The Fourth EWC-KIHASA Joint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ocio-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Change"(6.17~6.18)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과위원회 공개토론회 (6.12) - 제4회 복지재정DB 학술대회 (6.18) - 인구교육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공동학술심포지엄(6.2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6.28)	- 미국 오래근주립대학교(6.3) - 경남발전연구원(6.13)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6.13) - 대전복지재단(6.13) - 경북행복재단(6.13) - 부산복지개발원(6.13) - 인제대학원대학교(6.14)	- 미래사회포럼(6.4) - 미래사회포럼(6.11) -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워크숍 (6.20~6.21) - 제2차 사회서비스발전 포럼 (6.28) - 42주년 개원기념식(6.28) - 명사초청특강(김용하 원원장) (6.28)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교육훈련 프로그램(6.30~7.7) -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7.2) - Brian Breuhaas (주한미국 대사관 서기관) 초청 세미나(7.3) - 싱가포르 NPTD(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대표단과의 정책간담회(7.10) - 201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학회(APEA) 제9회 학술대회(7.27~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원가분석을 위한 패널 병원제도 도입방안 워크숍(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제2차 고령사회포럼(7.9) -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워크숍(7.25)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정책에 관한 워크숍(8.22) -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 지원(8.26~8.31) - 2013년 고령화에 관한 한·일 공동학술대회(8.29~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청년교육(8.5) - 제1차 민·관 복지포럼(8.28) - 제3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8.30)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8.27~9.9) - 아시아 10개국의 건강보장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국제워크숍(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 공동컨퍼런스: 복지의 미래-복지와 기술의 융합(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제3차 고령사회포럼(9.10) - 2013 은퇴전략포럼: 인구고령화와 연금의 미래(9.26)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M 기금운용 국제컨퍼런스(10.8~10.9) -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 회의(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10.11~10.12) -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심포지엄(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10.16) - 1사1촌 추계 농촌 봉사활동(10.25) - 명사초청 특강(노연홍 부총장)(10.29) - 제2차 민·관 복지포럼(10.30)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국제회의(11.21~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11.4) - 한국보건행정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11.7~11.8)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11.26) -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공간연구소(11.20)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고령사회포럼(11.12) -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11.13) - 추계 체육대회(11.15) - 제5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11.22)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세미나(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12.5) - 국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공청회(12.6) - 위험사회 정책 세미나: 한국 사회의 안전 및 위험(12.18) - <벼랑끝의 사람들: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촌 자매결연 8주년 기념식(12.3) -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워크숍(12.4~12.5) - 2013년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식(12.6) - 송년 합창대회(12.26) - 2013년 종무식(12.31) 	12월

국제회의



국제학술대회 삶과 인류의 후기근대적 대전환: 동서양을 넘어

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

| 일시 | 2013년 5월 30-31일 (목-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 주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학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가족학회, 경향신문
| 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학교

1. EWC-KIHASA 공동 세미나(2013.6.16.~6.19.)
2. 국제학술대회 삶과 인류의 후기근대적 대전환: 동서양을 넘어 (2013.5.30.~31.)
3. Bryan S. Turner 교수 초청 세미나(2013.6.4.)

2



3

4. Brian Breuhaus(주한미국
대사관 서기관)초청 세미나
(2013.7.3.)

5.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
(2013.7.2.)

6. 싱가포르
NPTD(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2013.7.10.)



4



5



6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7



8

- 7. 제27차 IUSSP 세계인구 총회지원(2013.8.26.~8.31.)
- 8. 보건정책관리 중간관리자 연수(모잠비크, 탄자니아) (2013.8.27.~9.9.)
- 9.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 (2013.10.31.)



9



10



11

- 10.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 보장 국제회의 (2013.11.21.~11.22.)
- 11. OECD SOCX 담당자 간담회 (2013.10.31.)
- 12.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세미나(2013.12.17.)



12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세미나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일시: 2013. 3. 5(화), 14:20~17:3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망의 숲



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복지기관의 포지셔닝

일시 | 2013. 4. 5(금) 13:00 ~ 21:30 / 4. 6(토) 09:00 ~ 15:00
 장소 | 여수 히든베이호텔

2

1.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2013.3.5.)
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지역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3.4.5.~4.6.)
3. 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4.5.)





4.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3.5.16.)
5. 고령사회포럼(4회 개최 /2013.5.14., 7.9., 9.10., 11.12.)
6.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2013.5.23.)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7



8

- 7.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5회/2013.5.31., 6.28.,
8.30.,10.16., 11.22.)
- 8. 제4회 복지재정DB 학술
대회(2013.6.18.)
-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2013.6.28.)



9



10



11

- 10. 보건정책관리 중간관리자 연수(모잠비크, 탄자니아) (2013.8.27.~9.9.)
- 11. 민·관 복지포럼(2회, 2013.8.28., 10.30.)
- 12.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 (2013.10.31.)



12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 13.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2013.12.5.)
- 14. 국민행복을위한 국민대 통합 비전과 과제 (2013.12.6.)
- 15. 벼랑끝의 사람들: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 (2013.12.27.)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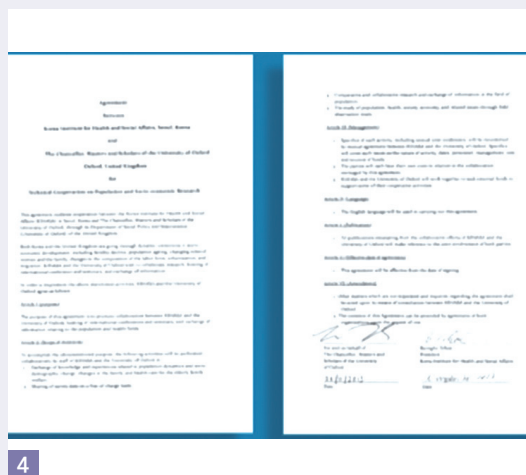


15

연구·학술교류 협약



1. 인제대학교(2013.5.24.)
2. 경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대전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부산 복지개발원 (2013.6.13.)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11.20.)
4. 옥스퍼드대학교 (2013.11.26.)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연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원내 활동

정치·사회 부문 조사 결과						
순위	순위 변동	평가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총합 점수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	243	248	672
2	-	한국교육개발원	120	153	158	431
3	↑5	한국행정연구원	100	109	174	383
4	↑8	한국학중앙연구원	58	111	124	293
5	↓2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49	69	64	282
6	↓1	희망제작소	107	80	74	261
7	↑3	동북아역사재단	97	79	73	249
7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156	39	54	249
9	↑14	한국법제연구원	45	88	113	246
10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1	57	71	219
11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	73	98	208

1



2

- 1 환경비즈니스 100대 싱크 탱크 정치사회분야 3년 연속 1위
-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2013.4.9.)
- 3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경영전략워크숍 (2013.3.15.~3.16.)
- 4 2013년도 연구자문위원회의 (2013.4.30. / 11.13.)



3



4



5



6



7

- 5. 전직원 통계교육 (2013.2.22.~2.27.)
- 6. Refwork 신입직원 교육 (2013.5.28.)
- 7. 명사초청 특강-노연홍 부총장(2013.10.29.)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 8. 춘계체육대회: 북한산 등반 (2013.4.26.)
- 9. 개원 42주년 기념식 (2013.6.28.)
- 10. 추계 체육대회 (2013.11.15.)





11

- 11. 송년회 (2013.12.26.)
- 12. 보사동우회 송년회 (2013.12.17.)
- 13. 종무식 (2013.12.31.)



12



13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봉사활동 등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단체 견학 (2013.3.7., 4.11., 5.30.)
2.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돕기 (2013.5.9.)
3. 봉사활동-모자쉼터시설 흔들희
4. 봉사활동-노인요양시설 성우회



- 5. 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박물관
- 6. 봉사활동
-서울SOS어린이 마을
- 7. 봉사활동
-성산지역아동센터



5



6



7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

KIHASA 현황

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 조직도 / 인원현황
3. 비전 및 경영목표
4. 조직별 주요 업무

설립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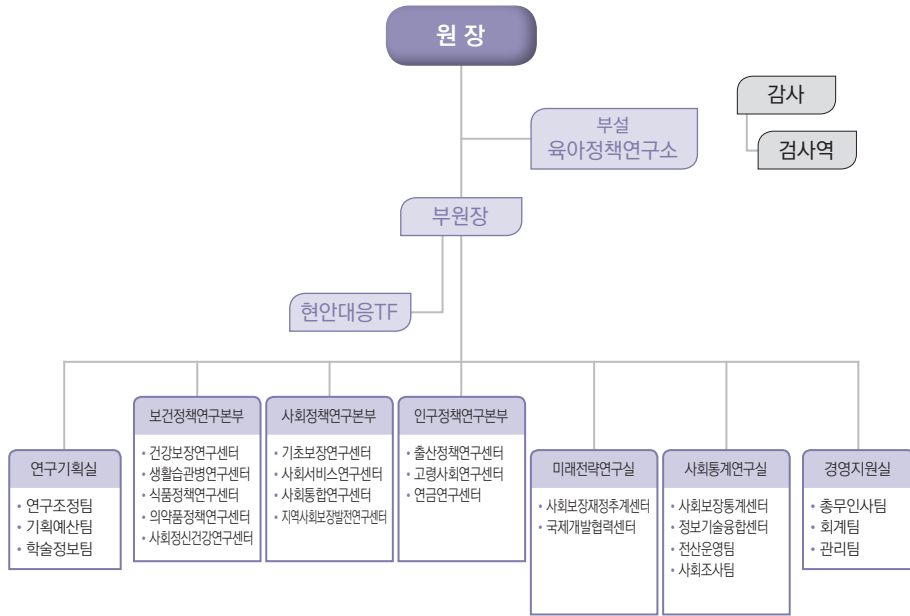
연혁

- 1971. 7. 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 (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 1976. 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 (법률제3417호)
- 1989.12.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 1999.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 (법률 제5733호)

주요 기능

-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도



인원현황

(2014년 3월 31일 현재)

구분	현원	계
임원	원장 1	1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6	93
	연구위원 39	
	부연구위원 27	
	전문연구원 21	
전문직	책임·선임전문원 7	8
	전문원 1	
행정직	책임·선임행정원 12	18
	행정원 6	
계		120

※비정규직 제외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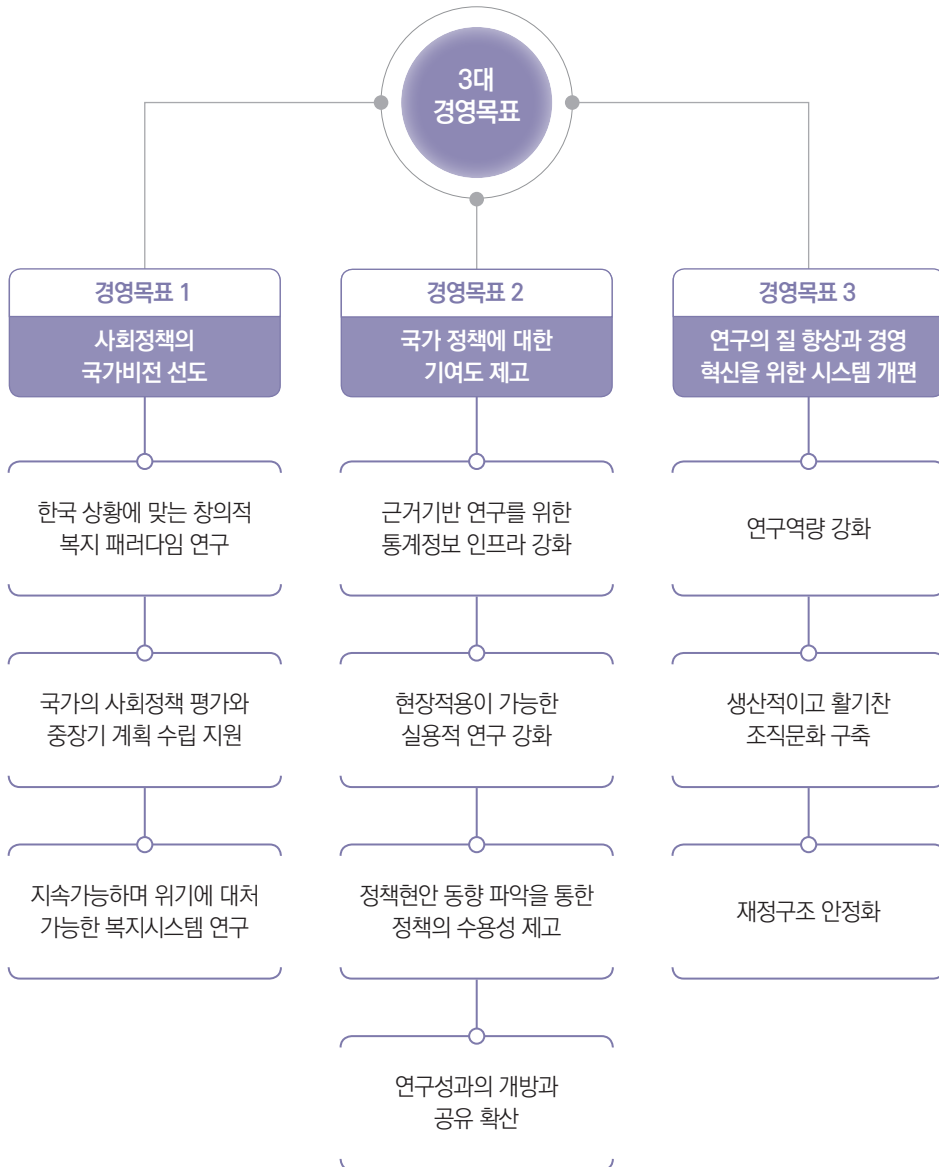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비전 및 경영목표

VISION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



조직별 주요 업무

보건정책연구본부

- ▶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

• 보건정책연구본부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건강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관련 연구
- 식·의·약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 기타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 건강보장연구센터

-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
- 의료급여제도 관련 연구
-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관련 연구
- 건강보험 약제비 및 약가제도 관련 연구
- 기타 건강보장 관련 연구

• 생활습관병연구센터

-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모자보건, 구강보건 등에 관한 연구
- 기타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 식품정책연구센터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 정책에 관한 연구
- 공중위생 및 공중보건 정책에 관한 연구
-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식품안전 및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

• 의약품정책연구센터

- 의약품·의료기술·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의약품 등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정책연구
- 의약품 등의 가격 및 품질관리 제도 연구
- 의약품 등 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의약품 등의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 사회정신건강 실태 조사·분석
- 사회갈등 및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 사회병리현상 해소와 사회정신건강증진 연구
- 기타 사회정신건강 관련 연구

사회정책연구본부

- ▶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 연구 및 발전방안 제시
- ▶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

• 사회정책연구본부

- 다양한 빈곤정책 및 서비스정책 관련 연구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관련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관련 연구
- 현금 및 현물지원제도의 연계방안 연구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분석 및 연구
- 지역사회 복지실태 및 평가 연구
-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및 연구

• 기초보장연구센터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연구
- 빈곤 및 소득불평등 연구
-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 현금 및 현물의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연구센터

-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제3섹터,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 및 산업 육성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민관협력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 관련 품질 및 평가 관련 연구
-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 사회통합연구센터

- 분야별, 집단별 사회적 갈등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
- 국민의식조사 등 사회통합의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 사회통합관련 제도 개선 발전방안 연구
-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정책적 대응 관련 지표 연구
- 기타 사회통합 관련 실태분석 및 제도 연구

•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 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균형발전 관련 연구
- 지역사회내 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지자체 복지통계 수집 및 분석 연구
- 기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연구

인구정책연구본부

- ▶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기반 구축

• 인구정책연구본부

- 중장기 국가 인구전략 연구
- 인구동태분석: 출산, 사망, 이동, 혼인 등 인구변동요인 추이와 원인, 향후 변화 예측 등
- 인구정태분석: 인구규모, 구조 및 분포의 추이와 원인 분석 등
- 인구·가구 추계, 안정인구 및 적정인구 추정 등
- 인구현상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
- 인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인구현상(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인구정책 평가 연구
- 인구관련 교육·홍보 연구 및 효과 평가
- 기타 인구 관련 연구

• 출산정책연구센터

-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
- 저출산 극복 정책 평가 연구
- 저출산 극복 정책 국제비교 분석

• 고령사회연구센터

- 고령사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분석
- 고령사회 관련 지표 개발
- 고령사회 관련 국제비교 분석

• 연금연구센터

-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실태를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방향 연구
-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 평가 연구
- 중장기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금운용정책 연구

미래전략연구실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재정 및 공적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 미래전략연구실

- 보건복지정책동향분석 및 정책아젠다 개발
- 보건복지와 타분야 학제간 융합연구
-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제도비교 연구
- 세대간 회계 및 세대간 이전 연구

• 국제개발협력센터

- 국외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결과의 국외 홍보
- 영문저널 발간
- 국외 관련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해외전문가 교육
- ODA 관련 업무
- 국제기구의 보건복지동향 파악

•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추계센터 기능 수행
- 사회보장 재정평가 연구
- 재정추계결과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회통계연구실

▶ 보건복지부문의 사회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와 국가차원의 보건복지지표를 생산해 정부, 정책입안자, 학계, 국제기구 국민 등에게 제공

• 사회보장통계센터

-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사회보장통계 구축
- 사회보장통계 품질관리
- 사회보장통계연보 발간
- 사회보장통계의 동향 및 심층분석
- 신규통계 발굴 및 확대
- 사회보장통계전문위원회 지원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 정보기술융합센터

- 보건복지 정보화전략 연구
- 보건복지 정보화 수요 및 성과분석
-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
- 보건복지와 정보기술의 융합 연구

• 전산운영팀

-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기획·운영
- 정보보안 업무 수행
- IT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기획·운영
- 연구과제 정보화사업 지원

• 사회조사팀

- 조사예산, 조사일정 계획수립 및 조사 계획 수립지원
- 면접 및 전화조사원 관리
-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
- 조사 사후검증
- 조사품질 진단 및 관리
- 조사자료 에데팅 및 데이터 크리닝

연구기획실

▶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5개 연구본부(실)의 연구업무를 기획·조정 및 사업 통합관리

• 연구조정팀

- 장단기 연구계획 및 경영목표 등 기획
- 연구사업 조정·관리 및 사업평가관리
-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직원 근무평정 총괄
- 연구결과의 대외홍보

- 연구용역 관리(수탁, 위탁용역)

- 자금 및 운영재원 관리
-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관리

• 학술정보팀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업무
- 지식정보자료 수집·조직·축적 및 보존

• 기획예산팀

-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경영지원실

▶ 신속적 조직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물적자원의 적정관리,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혁신적 경영관리

• 총무인사팀

-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 규정관리
- 임직원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 관리팀

- 물품구매·제조·공사·수리 및 계약 업무 (연구용역계약 제외)
- 시설 및 장비관리
- 연구원 행사 기획 및 지원
- 청사 경비·보안 및 비상계획

• 회계팀

- 지출관리
- 예산집행실적 종합 및 기업회계처리

I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사업

1. 2013년도 사업목표
2. 2013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1. 2013년도 사업목표

총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 선도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2. 2013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정책의 개발·결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생산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수행
- 의료수가 항목별(기본진료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12가지 항목)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 등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른 약제처방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평가
- 우리나라의 건강 및 의료영역에서의 계층간·집단간·지역간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의료의 질과 관련된 대표지표의 생산과 국제비교를 실시함과 아울러, 의료의 질 관련 법적 체계, 면허 및 재면허 제도, 요양기관 인증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질 관리 체계, 진료가이드 라인, 재정적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가족·학교·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발생빈도(prevalence), 갈등의 정도, 유형, 갈등요인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연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및 취업지원을 위한 활성화 정책 연구
-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
- 복지정책의 효과성 측정과 제고를 위한 심층 연구
- 빈곤실태 및 빈곤정책 관련 기초 자료의 생산
-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의 주요 요인 심층 분석
-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이슈의 상세분석 및 대응 모색
- 실질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집행,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지역의 복지 실행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 및 관련 복지주체의 지역복지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
- Data에 기반한 evidence-based 연구의 인프라 구축
- 사회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정책 진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새정부 국정방향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완 내지 강화
-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기초적인 사회시스템 진단 및 정책방안 마련
- 장기적인 인구변동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인구,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II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성과

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6. 사회통합방안 모색
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만들기
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 방안 모색
10. 국민안전 보호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the Korean Creative Welfare

연구책임자 | 최병호
 공동연구자 | 남상호·이규식·이삼식·이윤경·이재열·양재진·서상목·이재원
 이영·안상훈·신영석·한준

I. 연구목적

- ▣ 경제·사회적 불평등,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차원적 위험요인의 부상은 국민행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새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사회공동체 구성원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로의 지향을 위해 ‘창조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념과 방향의 제시는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최근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였고,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형 복지모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향후 미래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하고, 사회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복지모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천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한국형 창조복지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전략,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미비

 - 경제, 고용·노동,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형 창조복지 탐색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연구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형 창조복지의 방향성 모색과 전략
 - 한국형 창조복지의 위치와 전망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보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III. 정책제언

- ▣ 재정 인센티브를 통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동기화하는 개입 전략은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나타내며, 약가인하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질환의 주 치료제의 처방양상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에 의해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동 제도 시행 후 약품비의 감소추세가 적어도 주 치료제의 사용량 감소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약품비 감소가 처방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Healthcare Market Competi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대중
공동연구자 | 이난희·오영인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구조와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통해 현재 의료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증명과 정책적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와 사회적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학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배분 정책, 병원관련 경쟁 정책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환자의 병원선택 모형 분석
 - 환자의 특성변수와 병원특성변수가 환자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nested logit model의 2단계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분석
 - 종별내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이 낮았던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설명력은 높게 나타남. 또한 환자의 병원종간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 대조집단인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Big5 병원의 선택과는 차별성을 보임.
- ▣ 병원경쟁과 공급자 형태 분석
 - 환자조사자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흐름방법에 의한 병원의 경쟁수준을 측정 및 경쟁이 의료장비의 중복투자(Medical arms race)에 미치는 영향 추정

- 2010년의 의료기관 종류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HHI지수는 55.43, 종합병원이 277.42, 병원이 268.50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수준이 종합병원, 병원 보다 높게 나타남.
 - 병상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0~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302.82로 가장 높았으며, 1000병상 이상에서 42.81로 가장 낮았음.
 - 설립구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HHI=256)과 민간부문(HHI=229)간 HHI지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10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에서 가장 높았으며(HHI=875), 경기남부권이 가장 낮았음(HHI=87).
 - MRI와 CT 보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MRI의 경우 군비경쟁(medical arms race) 현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 병원 경쟁과 경영효율성 분석
-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자료를 가지고 DEA 분석을 통해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측정

III. 정책제언

- ▣ 병상자원이나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공급과 관련한 규제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편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공급측면에서 자원에 대한 적절한 배분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 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됨.
- ▣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정확한 가격과 질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함.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Study on the R&D Systems in Health Care

연구책임자 | 박은자
공동연구자 | 김진수·윤시문·윤희미·이예슬·곽노성·김현철

I. 연구목적

-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생명복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이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함.

▣ 선진국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 미국

-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의 종합·조정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담당함.
- 2014년 연구개발예산 1,428억불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320.5억불로 22.4%를 차지하며 이 중 국립보건원 비중이 약 95.1% 정도임.
- 2014년 연구 우선순위는 기초연구, 중개과학의 선진화,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 발굴 등임.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은 유럽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총 예산규모는 870억 유로임.

– 일본

- 과학기술예산 중 생명과학분야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예산대비 약 9.0% 수준임.
- 2013년 8월 2일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가 설치되었으며,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일원적인 예산 요구, 배분, 조정 등을 통해 전략·중점적인 예산배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2014년 초를 목표로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와 목표를 결정할 예정임.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현황

- 2009~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실시한 연구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0.1%임.

- 연구비 기준으로 교과부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28.5%), 지식경제부(24.2%) 순이었음.
- 의약품·의약품 개발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생명과학(14.1%), 임상의학(10.4%), 치료·진단기기(10.3%), 기능복원·보조·복지기(6.3%) 순이었음.

III. 정책제언

- ▣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인 연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예산배분 및 조정 기전이 필요함.
 -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연구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동시에 충족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명확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화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 의약품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 건강영향평가 TWG 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Knowledge Translation for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남순

공동연구자 | 최지희·오영인·이희영·서현주·김명희·이진용

I. 연구목적

- ▣ 근거중심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근거를 생산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정책과 관련된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국내외 보건영역 지식확산 현황을 조사하여,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II. 연구내용

- ▣ 지식확산(knowledge translation) 이론과 방법
 - 지식확산은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며, 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의 합성·확산 및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역동적이며 반복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식확산체계를 갖추려면 ‘어떤 유형의 근거를 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보건정책의사결정에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연구합성이 중요하고, 이를 활용한 ‘evidence based policy briefs’ 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연구합성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은 중재의 효과에 대한 일차연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리뷰방법임. 한편, 복합적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맥락과 기전을 탐구하는 실재주의적 고찰이 적절함.

▣ 외국의 지식확산에 대한 활동 분석

- 영국은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연구생산 및 확산, 활용을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NIHR)은 응용연구와 연구정보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 또한 연구합성,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NICE는 'Evidence Service'와 같은 웹 기반 포털에서 연구근거를 제공하거나 확산함.
- 캐나다 역시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연구 확산 활동이 매우 활발함.
 - 보건연구의 생산, 합성 및 확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CIHR)이 있으며 기초, 임상연구를 함께 관리함. 근거중심정책에 필요한 전략으로 지식확산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이론과 방법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또한 연구근거의 확산활동과 방법론을 담당하는 기구가 다양하고, 확산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국내 일반적 보건정책연구 현황

- 최근 3년간의 국내 보건정책 연구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건정책연구의 수량과 재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정책연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재하였음. 그러므로 보건정책담당자의 연구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수준임. 또한 국내 연구기관에서 보건정책 연구 확산을 전담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적었음.

▣ 담배관련 보건연구 현황 및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인식

-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근거를 체계적으로 검색한 결과, 총 803개 연구논문과 76개의 연구보고서를 파악하였음. 담배관련 보건연구 중에서는 체계적 고찰문헌과 정책 혹은 중재프로그램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적었음.
-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정책: '간접흡연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근거는 일반화 가능성이 크고 이미 국외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은 작다고 할 수 있음. '효과적인 노출방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 근거의 일반화 가능성은 보통으로, 국내·외 근거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음. '금연구역 설정이 건강과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가능성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국내·외 근거가 모두 필요함.

-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국내에서 담뱃갑에 표시해야 되는 경고문구, 그림경고 등에 대한 방법, 효과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내용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연구자의 인식

- 담배관련 보건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는 99명이 응답하였고,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는 각각 12명, 139명이 응답하였음.
-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일반적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연구자는 전체 응답자의 34.1%만이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방정책담당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74.7%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음.
- 담배관련 보건정책이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책담당자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과 ‘데이터 인프라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연구자는 ‘정책결정자와 연구자의 연계 부족’, ‘관련 연구의 부족’ 혹은 ‘연구 결과 확산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III. 정책제언

- ▣ 국내 보건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Knowledge translation’을 중요 전략으로 채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건영역 응용 연구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임.
- ▣ 보건영역 ‘Knowledge translation’에 대한 전략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전체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합성과 확산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고려해야 함.
- ▣ 근거중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합성과 ‘evidence based policy brief’ 생산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연구근거 확산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함. 현재 생산된 보건정책 연구의 확산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보고서
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연구책임자 | 김혜련
공동연구자 | 여지영·정애숙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I. 연구목적

-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질병부담에 대한 관심증가로 질병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더불어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기금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시급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 자원배분과 활동, 평가와 활용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과 활동 사례를 비교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국내외 건강증진기금 운영현황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기금 운영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함.
 - 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기금 심의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의 배분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권한과 기능은 매우 미흡하며, 운영관리체계가 미비함.
 - 기금 조성과 기금의 자원배분 비중: 전체 기금 중 건강보험재원으로 과다한 기금사용, 200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건강증진기금이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사업의 높은 기금 의존성, 건강증진 고유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지출 등의 지출구조를 가짐.
 - 기금 예산 사용 범위와 기금사업활동: 법에 명시된 기금사용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고유한 건강증진사업 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금사용이 증가하여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기금사업 평가, 활용 현황: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모니터링이나 평가체계가 미흡하며, 건강증진 연구나 평가에 대한 자원 배분이 미약함.
- 법제도 측면: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반영 미흡하며, 기금사용 범위의 명료성 부족, 기금 관리운영규정이 부재함.

III. 정책제언

- ▣ 건강증진기금 운영의 개선발전을 위해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함.
 - 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현행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회 역할 강화 및 위상 격상을 통해 기금관리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 기금 조성과 기금의 자원배분 비중: 기금사용의 범위와 기금사업 지원 우선순위의 명확한 규정
 - 기금 예산 사용 범위와 기금사업활동: 건강증진사업 확산을 위해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기금사업 평가, 활용 개선: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확립, 건강증진사업과 연구결과의 활용과 확산 강화
 - 법제도 측면: 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의 확립, 기금예산 및 사업 우선순위 설정, 건강증진사업 성과 확산 및 평가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지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Consumer Rights in Healthcare Service

연구책임자 | 윤강재
공동연구자 | 최지희·조병희

I. 연구목적

-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변화 등을 통해 양적 확충 중심·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질적 수준·소비자 중심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위상 변화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소비자 권리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공급자-소비자가 상호신뢰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

II. 연구내용

- ▣ 보건의료 분야 소비자 위상 변화에 대한 고찰
 - 보건의료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과 소비자 무지(consumer ignorance)로 인해 고전적인 ‘합리적 소비자’가 가정되기 어려운 영역임.
 - 또한 치료효과와 의료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자율성이 매우 높고, 면허 제도 등을 통해 공급 독점이 발생하는 분야임.
 -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은 생의학 모형(biomedicine model)을 바탕으로 한 의료전문가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그러나 질병구조의 변화와 건강증진 강조, 정보통신기술(IT) 발달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 의료의 시장화와 소비자 권리 의식 증가 등으로 인해 전문가주의와 소비자주의가 병존·충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 소비자 권리 현황

- 국제적으로 국제소비자기구(CI)는 소비자 권리로 진료권, 정보접근권, 선택권, 참여권, 존엄권, 비밀보장, 불만제기 및 보상을 제안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상에 건강권(제10조), 알권리(제11조),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보장(제13조) 등 4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외형적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입법적 선언 단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의료소비자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 건강권: 접근성 및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 및 산정특례, 진료비 대불제도 등의 개선과 지역간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개선
 - 알권리: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료의 질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개선
 - 자기결정권: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불만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의 내실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
 - 비밀보장권: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틀 마련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 지역별·연령별로 비례할당된 1,00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국제소비자기구(CI)의 7가지 권리를 기반으로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 등을 조사
-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나, 건강권과 불만제기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음. 참여권, 안전권, 비밀보장권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유사하였음.
 -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자원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자유로운 기관 선택 양상, 의료전문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적 이용기회 제공과 소비자로서의 불만을 제대로 해소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
- 선택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병원평가정보, 의약품안심정보, 진료비 정보 등)에 있어서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정보 제공 사실의 홍보에서부터 전문적·제한적인 정보 전달방식의 이용자 편의적 개선이 필요함.

- 의료소비자들이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로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필요없는 처방이나 검사'가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음. 향후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수동성을 개선하고 전향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설정이 필요함.

III. 정책제언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종합계획 수립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의료소비자 권리 영역을 별도로 '종합계획'으로 특화시켜 추진할 필요성 제기
- 의료소비자종합계획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종합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위 영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알권리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을 15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립할 것을 제언

▣ 의료소비자 역량 강화

- Health Literacy의 측정과 정책 활용: 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차이를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 및 측정결과와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료인 교육 및 관리제도 개선: 의사-환자 관계 개선을 위한 의학교육에 인문학·윤리학적 과정을 강화하고, 국가고시에도 해당 내용의 포함을 검토
- 정책결정과정의 의료소비자 참여 강화

▣ 실질적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량 및 접근성 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의 질적 수준' 관련 정보량을 확대함.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 제공방식 역시 소비자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과 가독성 높은 표현 등이 개선되어야 함.

▣ 의료소비자 피해 구제 내실화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료소비자의 피해 영역, 즉, 약화사고와 불법·사이비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개인의료정보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Effects of Pharmaceutical Cost Containment Policies on Physician Prescribing

연구책임자 | 박실비아
공동연구자 | 김남순·채수미·한은아·류지영

I. 연구목적

- ▣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약품비는 쉽게 통제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효과 평가가 중요함.
- ▣ 2010년 10월 시행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2012년 4월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따른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태와 약품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약품비 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처방량 변화를 목표로 하며 일괄 약가인하는 약가 통제를 목표로 하므로, 최종 목적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정책의 대상은 상이한 두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여 약품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II. 연구내용

- ▣ 2009~2012년 의원 건강보험 외래 진료내역 및 의약품 처방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외래 다빈도 질환에서 건당 약품비와 진료비, 주 치료제의 처방행태-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를 분석함.
 - 대상 질환: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급성 상기도감염(소아/성인), 급성 하기도감염(소아/성인), 중이염(소아/성인), 비뇨기계감염, 관절증
-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행은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 일괄 약가인하는 모든 질환에서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다수의 질환에서

이후 약품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화하였음.

- 건당 진료비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일괄 약가인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약품비 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진료비가 상승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 질환별 주 치료제의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은 두 정책에 의한 일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III. 정책제언

- 재정 인센티브를 통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동기화하는 개입 전략은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나타내며, 약가인하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질환의 주 치료제의 처방양상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의해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동 제도 시행 후 약품비의 감소추세가 적어도 주 치료제의 사용량 감소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약품비 감소가 처방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Organizing Primary Care i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연구책임자 | 황나미
공동연구자 | 채수미·이재호·정현진

I. 연구목적

- ▣ 우리나라 의료 선진화를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일차의료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제도화에 따른 쟁점이나 문제점을 도출,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에 실행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의 표준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음.
 - 일차의료의 개념 파악 및 속성의 지향점 도출
 - 일차의료 분류에 따른 선진국 일차의료 공급체계 특성 및 시사점 도출
 - 보건의료체계 하부요인별 우리나라 일차의료 인프라 및 잠재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질병구조에서의 일차의료 목표대상자인 중고령층의 일차의료 반응성 규명
 - 저출산·고령사회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개발 및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전략 제시

II. 연구내용

- ▣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파악
 - 일차의료의 정의와 개념 분석을 통해 일차의료의 추구하는 가치 확인
 -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규명하고, 일차의료기관이 표방하여야 할 목적과 운용방향 도출
- ▣ 선진국 일차의료 현황 및 평가와 시사점 도출
 - 국가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따라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각 국가의 현황 및 그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점 도출

- ▣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 진단 및 의료 특성 파악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환경 진단을 통한 의료공급자측, 이용자측 일차의료 도입의 장애요인 도출 및 제도적 필요기반 규명
- ▣ 일차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도입 경과와 이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여 공급자측 일차의료 구축 저해요인 규명
- ▣ 고령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차의료 및 주치의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파악
 -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질병구조의 특성을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차의료의 핵심 구현 과제와 필요 기반 제시
- ▣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및 운용전략 제시
 -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목표달성을 위해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부구조 요소별로 일차의료 도입 모형 제시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의 운용을 위한 전략 제시

III. 정책제언

- ▣ 기존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한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실시
 - 시, 군(취약) 지역별로 개발된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의사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운영이 필요함.
- ▣ 일차의료의 포괄적 지속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 초기에는 100% 행위별 수가제에서 장기적으로는 인두제 40%, 성과급제 20%, 수당 10%로 행위별 수가제를 감소시킴.
- ▣ 일차의료 전문교육 수련과정 개정
 - 여러 임상분야의 전문가, 지역사회 개원의, 보건학 및 예방의학 전문가가 참여한 일차의료 수련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질 평가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함.
- ▣ 의과대학 교육에서의 일차의료 실습 경험기회 확대
 - 일차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함께 일차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선진국과 같이 최소 1개월 이상의 일차의료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함.

▣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 강화

- 의료의 유인수요를 포함한 상업화를 지양하면서 국민의 형평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initiative)와 리더십(leadership)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연구보고서
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in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Quality in Korea

연구책임자 | 선우 덕
공동연구자 | 최정수·유근춘·장숙량·김세진

I. 연구목적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인프라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규모나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소규모 민간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미흡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현행 시설평가제도도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임.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측면을 검토해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관리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II. 연구내용

-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였음. 아울러, 각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시설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현장의 시설관계자가 생각하는 시설평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 또한,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평가에 대한 경험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III. 정책제언

- ▣ 장기요양서비스평가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즉, 단순한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운영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급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유도에 목적을 둘 필요가 있음.
- ▣ 양질의 케어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설치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장기요양평가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됨.
 - 즉, 평가도구 및 절차의 재검토, 표준적인 서비스지침의 개발, 평가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평가결과의 공개발표 강화, 평가결과를 통한 서비스보상지원방식의 개발 등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3-31-19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연구책임자 | 정영호
공동연구자 | 고숙자·김은주

I. 연구목적

- ▣ 만성질환으로 인한 역학적, 경제적 부담 분석
- ▣ 복합건강위험요인의 유형 파악
- ▣ 복합만성질환자의 특성 파악
- ▣ 만성질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시사점 도출

II. 연구내용

- ▣ 65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분포를 보면,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4.7%이었으며 만성질환을 1개보유한 경우는 14.1%, 2개를 보유한 경우는 20.7%, 3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60.5%이었음.
- ▣ 복합만성질환자의 복합만성질환 구성을 보면, 고혈압+만성요통+관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복합만성질환자 중 19.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고혈압+만성요통+당뇨병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5.94%이었으며, 고혈압+관절증+당뇨병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02%임.
- ▣ 상위1위에서 15위까지의 복합만성질환은 전체 복합만성질환 구성의 50.30%를 설명해 주고 있음.
 - 상위 15위의 복합만성질환 구성을 보면, 고혈압이 11개, 만성요통이 10개, 관절증이 8개, 당뇨병이 5개가 포함됨.

III. 정책제언

- ▣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단일질환, 단일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만성질환관리모형에서 연속적, 통합적, 환자 중심적인 웰니스(wellness) 모형 접근을 통해 질병발생이전, 질병유지기간, 질병악화 기간의 모든 시점에서 연속적인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연계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wellness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연계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근거 생산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보유하고 있는 건강 및 의료 관련 자료를 만성질환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환자들의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심도있고 다양한 인간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Health Impact Assessment on Local Government and Operatio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Data Base

연구책임자 | 서미경
공동연구자 | 여지영·강은정

I.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도입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영향평가지범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친 건강 정책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건강영향평가 사후평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지범사업 중 사후평가가 가능한 14개사업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음.
 - 건강영향평가는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여부를 추적한 결과, 추적가능한 10개 과제 중 9개의 과제는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였음. 특히 9개 중 3개의 과제는 모든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여,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영향평가지범사업이 건강영향평가의 범위의 확대와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줌.
- 중앙단위 건강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건강영향평가지범사업인 ‘2010년 실시한 농어촌연중돌봄학교’와 ‘2012년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중 예술강사지원사업,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음.
 - 네 건의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평가한 결과 절차 및 방법상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건강영향평가 결과도 전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건강영향평가가 실제 의사결정, 즉,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향후, 통상적인 건강영향평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침서들을 참고로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제안사항들이 실제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건강한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평가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켜 건강영향평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용성이 높은 건강영향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시킬 기반조성의 목적으로 지난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을 구축하였음.
- 지식포털에 관한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 활용가능성이 많으며, 관련 의사결정시 지식포털의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자료의 최신성, 디자인 구성의 편의성, 상호의견 교환의 공간의 부재 등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논의되었음.

III. 정책제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정부단위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역량 강화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적 도입 지원의 두 가지 목적 하에 건강영향평가연구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진행된 건강영향평가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향후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첫째, 법적으로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단계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해소의 도구로 활용하고, 사업 또는 정책수행 담당행정가와의 협조체계로 활용하여야 함.
- 셋째, 건강영향평가 전문가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이들이 활용할 가이드라인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 넷째, 평가방법에서 현재의 사업단위의 평가기준에 지역단위의 총량평가기준을 포함 시켜야 하며, 정확한 분석에 되도록 분석기기의 관리가 필요함.



건강영향평가 TWG 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Evaluation of the Action Plan of the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Strategies to Lessen Social Economic Disparities of Smoking Behavior

연구책임자 | 최은진
 공동연구자 | 오미애·이난희·오혜인·진경인·김진희·Esther Jungmee Choi·Peter Gry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연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연

I. 연구목적

-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의 건강영향평가TWG의 활동계획의 성과를 분석함.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TWG의 활동계획을 분석함.
- ▣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평가하고, 격차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개발함.

II. 연구내용

- ▣ 건강영향평가 TWG의 3개년 추진계획의 성과 분석
 - 2010~2013년간의 Workplan개발과 활동지원
- ▣ 흡연과 음주행동의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 성인 남녀별 교육수준과 흡연율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012년도에 흡연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12년도에 질문문항이 달라졌기 때문임. 이는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교육수준별 음주율은 3차년도(2008)을 제외하고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이하 졸업자 순으로 높았음.
 - 본 분석은 건강행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와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시간에 따른 흡연율, 음주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연령표준화율(포아송 분포 가정)을 계산하여

IRR(incidence rate ratio)를 산출하였음. 또한 흡연과 음주의 불평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상대 불평등 지수(RII)를 측정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RII는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구 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의 격차를 상대위험도로 표시한 것으로 선형성을 가정함. 기준변수는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이상, 직업에서는 화이트칼라,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는 정규직, 소득수준에서는 상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하였음. 다른 논문에서는 직업과 경제활동 참여상태 지표에서는 계층 간 서열을 정하기 어려워 RII 값을 구하지 않았으나 본 분석에서는 불평등 정도를 참고하기 위해 RII값을 구하였음.

-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로 교육수준, 직업, 경제활동 참여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흡연율, 음주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III. 정책제언

▣ 건강의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의 기법개발

-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가 사업의 시작 이전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거기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의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지식개발이 필요함.

- 대기질, 물, 독성물질, 기후변화, 위기대응, 폐기물 등 환경적 문제와 관련된 건강위해성 평가 기법과 국제적 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협력해야 할 것임.
-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서 직면하는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국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됨.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임. 다양한 형태로 인구집단의 이동 및 관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만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집단의 흡연율 관련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각 수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흡연예방, 흡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취약 성인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확대보급, 금연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등이 필요함.

- 우울감 경험집단에 대한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지원체계가 확대보급되어야 할 것임.
- ▣ 부문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들의 협력, 공공 및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여야 할 것임.
- ▣ 참여적인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영향평가의 확대
 - 취약계층의 건강행태에 대한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고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특화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확대적용해야 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 웹사이트를 확대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시범사업이 필요함.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The Effects of Price Policy on Smoking and Drinking

연구책임자 | 고숙자
공동연구자 | 정영호·김은주·오혜인

I. 연구목적

- ▣ 국민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담배, 주류와 같은 건강위해품목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실질담배가격의 하락과 실질 주류가격의 하락은 건강위해품목인 담배소비와 주류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피해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담배가격인상과 주류가격인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조진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금연의 가치와 절주의 가치를 분석함.

II. 연구내용

- ▣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금연 의향
 - 금연할 의향이 있는 담배가격은 8,943원~ 8,965원이었음.
 - 소득수준별로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 8,497원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 9,660원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금연할 의사가 보이는 담배가격은 더욱 높아져,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욱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 금연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 지불의사액
 - 금연치료 지원의사액을 분석한 결과, 72,282원~74,429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금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 다시 말해서 금연치료제가 월평균 10만원이 소요된다면 약 70%는 국가에서 부담을, 나머지 약 30%는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주류 소비감소의 편익 측정

- 주류 소비로 개인의 건강상 편익이 수반될 경우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액은 저함량 알코올(맥주) 96.4원, 고탐량 알코올(소주) 76.6원이었음.
-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해 주류가격에 추가의 인상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폐해 감소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지불의사액은 저함량 알코올(맥주) 96.1원, 고탐량 알코올(소주) 80.3원이었음.
-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해 주류가격에 조금의 인상분을 허용하는 응답자만을 포함하였을 경우에 사회적 폐해 감소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지불의사액은 저함량 알코올(맥주) 412.8원, 고탐량 알코올(소주) 426.0원이었음.

III. 정책제언

- ▣ 금연 및 절주를 위한 경제적 정책방안
- ▣ 금연을 위한 담배가격인상
- ▣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 주세 또는 주류부담금을 소액으로 인상시키더라도 확보된 세수로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연구-연계방안을 중심으로
-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Healthcare Delivery in Line with NHI Coverage Enhancement

연구책임자 | 신영석
공동연구자 | 강희정·김남순·정영호·김동진·황도경

I. 연구목적

- ▣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한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변화 요소를 제안함.

II. 연구내용

-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외래 내원일수, 진료비에서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증가하나 의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현 상태의 보장성 강화는 Big5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고착화시키고 대기열을 증가시킬 것임.
 - 환자쏠림은 의료제공체계의 총체적 비효율성이 발현된 문제로 단일정책으로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다차원적 정책 kit 시행 필요
 - 종별,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유도를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등 협력 진료 환경 조성
 - 동네 병의원 신뢰도 제고 위한 의료의 질 향상
 - 의료자원 균형 배치
 -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 ▣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대책
 -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만성질환 관리 관련 그간의 논의 검토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향 제시

- 만성질환자가 대도시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관리체계 구축, 지역체계 내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방안 제시
 - 지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네트워크 구축
- ▣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 인구구조와 의료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 필요
 - 고비용 진료기관의 급성기 중증치료 후 보다 저렴한 대체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로서 아급성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필요
 - 한국형 아급성 서비스 제공 모델 제시
 - 급성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회복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동을 위한 의뢰체계 개발
 -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환자의 위험 기능 평가와 퇴원환자계획서 작성 후 회송
 - 한국형 아급성 서비스 제공 위한 정책 과제 제안
 - 중증질환자의 만성화 예방을 위한 퇴원환자 관리제도 도입
 - 아급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브(subacute delivery hub) 구축
 - 일반병원을 아급성 전문병원으로 전환 유도
- ▣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 의료체계 개편에 있어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자단체와 공급자 단체를 대상으로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한 입장 확인
 - 환자 단체는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찬성하지만,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급자 단체는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것이라는 우려와 기존의 저수가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III. 정책제언

- ▣ 부적절한 환자쏠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제공체계 개편 필요
 - 고가의 대형병원 이용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선호하도록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환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 정책 킷의 구성과 시행이 필요함.
- ▣ 의뢰-회송제도 개편, 지불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
- ▣ 지역사회 기반 의료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시키고 아급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3-08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Healthcare Costs and Long-term Spending-control Strategies

연구책임자 | 신현웅
공동연구자 | 윤장호·김현정·하솔잎·이슬기

I. 연구목적

- ▣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진료비 지출구조에 대한 현황 파악
 -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제기된 증가요인 이외에 최근 진료비 증가율의 둔화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
- ▣ 진료비 증가요인분석을 통한 중장기적(거시적) 관리모형 제시
 -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적절한 목표진료비 산정방식 개발

II. 연구내용

- ▣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를 통해, 진료비 증가요인을 크게 수요자 측면의 증감요인과 공급자 측면의 증감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봄.
 - 먼저 수요자 측면의 증감요인으로는 인구의 (건강한)고령화, 소득수준, 건강위해 요인, 적용대상자의 증가를 들 수 있었고,
 - 공급자 측면의 증감요인으로는 공급자 유인수요, 의사 수의 증가, 제도적 측면(행위별 수가제 등)을 들 수 있었음.

▣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 최근의 진료비 지출 동향 분석을 위해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출 추이를 분석

- 약제비 절감요인 및 계절적 요인 : 2012년 6월 급여비 절감액은 2,864억원으로 4월 약가인하와 황사가 적었던 계절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건강한 고령화 : 인구의 고령화가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50~60대의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도 고령화가 진료비 증가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음.
- 만성질환 관리 수준의 향상
- 위생상태 개선 및 질병구조 변화(감염성 질환 발병률 감소) : 질병별로 진료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았을 경우,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증가율이 2010년 11.16%, 2011년 7.02%, 2012년 1.14%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신종플루 이후 손 씻기 등 위생상태 개선과, 독감 예방접종률 증가 등으로 인해 2011, 2012년 유행병의 발병률이 떨어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됨.
- 경기 침체
- 건강 증진(건강행태 변화)

– 전통적 진료비 분해 방식 및 진료비 지출 구성요소별(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수료 등 13가지 의료수가 항목) 증가 추이 분석

▣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변화의 영향

-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행태에 대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연도별 변화양상 분석
 - 건강관리 및 건강투자행태의 변화로 인한 건강수준의 변화가 의료이용량(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과 서베이 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 거시적 진료비 증감요인 분석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패널 분석 및 거시적 시계열분석을 시행

- 분석 결과, 개인패널분석 결과는 연령, 소득수준, 규칙적 운동행위, 고가 의료장비(CT, MRI)의 빈번한 사용 등이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었음.

III. 정책제언

- ▣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진료비 지출의 관리 방안으로 첫째로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방안 제시
 - 진료비의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한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 필요
 - 각 의료기관 종별 실제 진료비 증가율 및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비교, 이를 환산지수에 반영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총액관리 개념의 수가결정구조 마련
- ▣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제시
 - 사후 치료에서 사전적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본인부담 경감을 통한 단골의사제도 도입방안 제시
 - 의료공급자 측면의 관리방안 제시(장기입원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 등 모니터링 강화)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Policy Issues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across Korea:
Designing a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1)

연구책임자 | 강희정
공동연구자 | 윤석준·하술잎·고슬기·서혜영

I. 연구목적

- ▣ 국가수준에서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는 매개체로서,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의료제공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의 설계와 작성
 -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연구는 2개년도 연구로 진행
 - 일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본 틀을 설계하며, 작성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인 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제안

II. 연구내용

- ▣ 국내 의료의 질 향상 정책의 변화 및 국가수준 의료 질 측정의 외국 동향과 관련 연구 검토
 - 국가단위와 민간단위에서 다양한 의료 질 평가 활동의 변화 검토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OECD의 국가단위 의료 질 평가 범주 비교
-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질 측정의 개념적 틀과 구성 제안
 - 변이 감소를 통한 질 향상 유도 위해 범주별 불평등 분석 포함
 - 미국 의료의 질/불평등 보고서의 측정 틀과 지표 구성 벤치마킹,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
 - 의료제공과정에서 질 향상과 국민건강수준 향상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측정되는 질병범주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동일하게 함.

교차측면	의료 질의 요소	의료의 유형		
		예방적의료	급성 치료	만성 질환 관리 (생애 말기 지원)
형평성 (equity) 가치 (value)	의료 효과성			
	환자 안전			
	적시성			
	환자/가족 중심성			
	접근도			
	효율성			
	의료 연계-조정			
	보건시스템 인프라 역량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관련 지표 현황과 작성 가능성 검토

- 의료효과성의 예방과 치료 범주를 중심으로 국내 지표 산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환자중심성, 의료연계조정,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국내 산출 가능한 지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보고서 작성을 통해 새로운 자료원 발굴과 유관기관의 정보생산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 보고서 작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III. 정책제언

■ 지금까지 의료의 질은 일부 질병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임상적 성적을 공개하는데 집중해 왔으나, 이는 임상 전문가, 의료인, 관련 정책 전문가들에게만 중요한 잣대이고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웠음.

- 의료제공시스템 전반에서 국민이 접하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질 향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질 향상 관련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의 정보를 모자이크처럼 조합하여 국가 의료제공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과 발표는 의료 질에 대한 국민, 전문가, 정책 결정자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질 향상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보고서 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의 추진이 요구됨.
 - 질 향상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
 - 의료 질 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기전으로 보건복지부의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이 필요함.
 - 한국 의료의 질 측정과 보고를 위한 자료원 구축
 - 국내 질 향상 관련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자료 및 생산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보고서에 사용되는 지표의 목적, 내용, 산출 방식을 공개하여 생산기관이 보고서 양식에 맞게 지표 정보를 작성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원자료 교류로 인한 자료보안(security)의 부담 없이 많은 유관기관의 참여 유도
 - 질 측정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임상적 의료효과성 외에 의료연계(care coordination), 환자 안전 등 새로운 시스템 성과 범주에 대한 자료원 개발
 - 행정자료 기반 평가 외에 환자경험 조사 확대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제도화
 - 보고서 작성의 연속성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 질 향상 전략의 수립
 - 의료제공시스템의 모든 개별적 질 향상 활동들의 공통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 수준으로 결과를 통합시키기 위한 국가 수준 질 향상 전략 수립 필요



연구보고서
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동진
공동연구자 | 이소영·기명·김명희·김승섭·김유미·윤태호·장숙랑·정최경희
채희란·이정아

I. 연구목적

- ▣ 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 해소를 개별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러한 권고를 가장 잘 실천하는 국가들로 잘 알려져 있음.
 - 국가단위에서 인구집단 간 혹은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과 형평성 지표의 생산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1차 년도 연구로서 지표 영역 및 세부 지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임.
 - 2013년도에 개발된 전체 지표에 대한 생산은 2014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3년도 연구에서는 일부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산출함.
 - 개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표와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 설정 및 세부 지표 개발시 정책적 개입 가능성에 중점을 둬.

II. 연구내용

- ▣ 우리나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틀과 건강불평등 지표와의 연계를 위해 WHO CSDH(2008)에서 제안한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을 도출하였음.
 - 도출된 지표영역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건강행태, 건강결과(건강수명, 유병, 사망),

그리고 의료이용의 5개 분야이며, 각 지표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제안함.

-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특별한 합의 없이 연구자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대해 재검토 하였고, 지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결핍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박탈 지수, 경제적 박탈 지수, 그리고 지역박탈 지수로 구분하여 산출함.
- ▣ 건강행태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별로 건강불평등 현황 지표를 산출 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집단 간 흡연율이나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등에 인구 집단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건강수명의 경우에도 성별, 지역별 건강수명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총 사망률은 물론 사망원인별 사망률에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격차가 나타났음.
-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있어서도 교육수준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일부 인구집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III. 정책제언

- ▣ 건강불평등 지표 생산 체계와 관련된 문제
 - 영국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하여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 및 지표 생산을 국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단위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주무부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건강불평등 지표산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지역과 관련된 내용
 - 현재 건강 및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대다수의 지표는 행정구역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하여 생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건강형평사업이나 건강마을 사업 등은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되는 자료의 단위와 실제 사업과의 단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읍면동 단위에서의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지표 산출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생산된 지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 영국은 지표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및 정책과 연계시켜 정책 전달과정이나 정책결과 평가를 위해 건강불평등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건강불평등 지표를 과정지표, 중간지표, 최종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 다시 정책에 환류되고 반영된다는 것은 향후 건강불평등 정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inforcing Medical Service Linkage between Nursing Home Facilities and Health Care Institutes

연구책임자 | 김진수
공동연구자 | 선우 덕·이기주·최인덕·이호용·김경아

I. 연구목적

- ▣ 노인대상의 의료적 치료와 요양서비스는 분절적 서비스제공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분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가 분절되고 중복된 상태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 보니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급속한 요양병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입소자에게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차원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II. 연구내용

-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급여실적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요양시설만 이용한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총 요양비는 11,705천원, 본인부담금은 1,677천원으로 나타났고, 2012년 기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입원환자의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14,695천원, 1인당 본인 부담금은 2,979천원으로 요양병원만 이용한 경우가 총 진료비나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 설문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는 의료적 처치가 가장 많았지만, 가족들이 요양 시설에 대한 불신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인력의 부족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단발성 응급성 질환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시설로 복귀해야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형태임.

- 이에 요양시설에서 처치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양시설 조치 가능 행위(안)을 제시함.

III. 정책제언

▣ 요양시설 내에서 조치 가능한 행위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인지 구분하여 요양시설에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 이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이지만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시설로 이송하고,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관련 기준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여서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전원 상병, 급성기 상병,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용자를 구분해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전문간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자 당 인력 비율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혹은 시설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숙련된 간호사의 활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편하는 것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내에서 기초적인 의료 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 및 자원 확보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서 급여 실적 분석, 입소자 및 관리자 설문조사, 요양시설 심층 면접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서 기초적이거나 욕구 파악 및 연계 기준안을 마련함.

- 향후 의료적 처치 관련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 연구를 제안함.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1

연구책임자 | 최정수

공동연구자 | 최성은·염아림·정혜란·서남규·안수지·황연희

I. 연구목적

- ▣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행의 기초정보로서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복용, 의료비지출 및 지출원, 건강관련 인식 및 행태 등 건강과 의료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구축됨.
- ▣ 한국의료패널 데이터가 정책기여도 높은 연구와 통계생산에 활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함.

II. 연구내용

- ▣ 2011년 연간 의료이용조사가 완료된 5,741가구 17,035명(표본가구 유지율 68.9%, 표본 가구원 유지율 69.2%)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기초분석보고서(I): 응급·입원·외래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의료관련 지출 부문
 - 기초분석보고서(II): 만성질환, 임신·출산, 일반의약품 복용, 건강관련인식·행태 부문

III. 정책제언

- ▣ 만성질환 관리
 - 만성질환자 가구는 3세대 이상 동거가구, 기초보장수급가구, 연간가구소득 최하분위(5분위 중 1분위)가구에서 높은 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가구의료비지출은 만성질환자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뚜렷이 드러냄.
 - 주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은 임상검사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 건강통계와 비교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의사진단율과 의료이용률은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질환의 자가인식율이 낮음을 시사함.

- 만성질환에 대한 연간 병의원이용률은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이들 계층에서의 연간 의약품복용률과 복약순응률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18세 이상의 전년도 대비 흡연과 음주상태의 변화로서 비흡연에서 흡연으로, 비음주에서 음주로의 변화는 남자와 여자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았음.
-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효과적 대처를 위한 예방·관리 노력이 20대 연령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함.

■ 임신 및 출산 관리

- 분만의료비(본인부담)는 2009~2011년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저체중아와 조산아에서 정상체중아와 만기아에 비해 높으며 지역(광역시도)별로 차이를 나타냄.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09~2011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산후조리원과 출산후도우미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의 증가추세 속에서 지출비도 연차적으로 증가함.
- 저체중아·조산아 발생률과 출산 후 도우미이용률의 증가추세 속에서 임신·출산관련 지출비의 증가가 예상됨.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Health Care Policies toward Universal Coverage in the Selected Asian Countries

연구책임자 | 홍석표
공동연구자 | 한창근·박형준 외

I. 연구목적

- ▣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에서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로서 역내 다른 국가들에 정책적 영향력을 서서히 발휘하고 있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분야에서의 정책적 영향력 전파는, 기타 분야에서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매우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정책 일반에서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임.
- ▣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중에서 건강보장정책,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선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한 아시아 복지국가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됨.

II. 연구내용

- ▣ 세계 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1년 현재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도네시아는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써 2014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강보장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 ▣ 필리핀의 경우 2010년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음.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 전략은 사회건강보험 보장을 확대/개선하여 재정 위험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자본을 통해 정부 시설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며, 빈곤층과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 의료 노력을 집중하여 건강 관련 MDG를 달성하는 것임. 2011년 현재 필리핀 국민의 48%가 국가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 중 520만 빈곤 가구 즉 약 2,000만 명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가입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의 의료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말레이시아 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며, 대중의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경제 발전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현실, 국가의 경제 발전, 사회적 행동, 사회 보장, 대중의 생활방식은 모두 말레이시아의 의료 정책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국민의 95%가 현재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 덕분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음. 빈곤층과 사회정책의 수혜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음. 2011년 현재 5,702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64.9%에 해당됨.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인구의 70% 이상, 20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시아국가 중에서 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태국은 2002년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Coverage; UC)제도를 도입 하였음. UC이전에는 태국 인구의 대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UC는 다양한 대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대시켰음.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 이러한 태국의 성공담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지역 저개발국가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음.

III. 정책제언

- 긍정적인 태국의 경험담과 더불어 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음.

-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은 단일보험자가 아닌 여러 개의 의료보험제도로 실행되고 있음. 의료보험들의 전체적인 재정 및 성과관련 책임을 관리할 총 권한을 갖고 있는 단일 기관이 없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히 단편화되어 있음. 서로 다른 의료보험들의 단편화된 운영은 의료 불일치 (health discrepancies)와 비용의 비효율, 불공평한 혜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차이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차이에 대한 정당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보장보험(SSS) 가입자들은 그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입으로 완전히 재정이 충원되는 UC 가입자들과 유사한 의료혜택만을 받는다는 사실에 점차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동시에 공무원의료제도(CSMBS)의 혜택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아시아국가들은 태국의 성공담과 더불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입안을 하여야 할 것임.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기준 연구
-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추진과제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 사례관리 연구(4차년도)
-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신규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 2013년 빈곤통계연보



수시보고서
13-06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In Search of Korea's Welfare Regime

연구책임자 | 신영석
공동연구자 | 윤강재·강지원

I. 연구목적

- ▣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복지 정책의 확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제안하였음. 이는 복지논쟁을 촉발하였으며,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물꼬를 틔. 이러한 때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의 복지정책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상당히 높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II. 연구내용

- ▣ 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OECD 주요 10개국에 대한 기준지표와 부수지표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준지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 분석 결과 한국과 스웨덴은 재정적자 3% 미만, 국가채무 60% 미만이라는 기준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부수지표는 국가부채의 해외의존도, 국가경쟁력과 경상수지
 - 분석 결과 국가부채 중 해외비중이 10% 이하이며, 국가경쟁력이 상위 30위 이내며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로는 일본과 영국, 미국, 독일이 포함됨. 이들 국가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복지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주요 10개국에 대한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함.
 - OECD 평균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높고낮음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
 - 고복지-고부담유형(A)에는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포함되었으나 이탈리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임.
 - 저복지-고부담유형(B)에 포함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저복지-저부담 유형(C)에는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복지-저부담 특성을 지님.
 - 고복지-저부담유형(D)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이 포함되는데, 일본을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임. 즉,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수준은 높는데, 부담 수준은 낮고, 국가부채가 많은 특징이 있음.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보다 경제성장을 더 선호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뒷받침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나, 증세 이외 복지재원의 마련(정부의 다른 지출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기부금 활성화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한국은 저복지-저부담 국가유형에 포함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건전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정 수준 복지를 확대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임.
 - 다만,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직성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재정전망에 근거한 복지지출의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함.

-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함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령과 근로무능력, 보건분야 지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회보험의 성숙과 박근혜정부 보장성 강화 노력에 따라 노령과 보건분야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제도의 확대 등에 따라 노령과 근로무능력 분야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도입되거나 운영 중인 한국의 복지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수립시 일본과 독일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
 -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있음.
 - 최근 도입되는 소득보장제도(예: EITC, CTC)는 영미국가의 조세지출 형태임.
- 장기적인 복지모델을 모색함에 있어 선진국의 발전경로를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의 정책 환경과 재정제약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는 추가적인 심층분석 연구가 요구됨.
 -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서 벗어난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수시보고서
13-05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기준 연구

A Study on the Coordination and Evaluation Methodology on Social Security Programs

연구책임자 | 원종욱
공동연구자 | 고제이·연가연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의 협의·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체계(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총괄·조정제도가 마련됨.
 -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13.1월 시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 법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신설·변경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함.

II. 연구내용

- ▣ 지자체의 자체복지사업 중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평가'의 평가틀을 준용하여 기존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복지사업을 평가함.
 - 평가 결과 '목표산출근거' 항목의 평가결과 수준이 가장 열악한 상태임.
 - 목표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에서 발견됨.
 - 많은 사업들이 개요나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성과목표 부문에서는 우수 이상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이 협의조정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 성과목표 부문에 대한 점검이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행,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 결과

– 협의조정체계는 '유사·중복의 방지', '수혜자에 대한 편중 지원 방지', '전달체계 효율화', '선정기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협의조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과 관련된 사업조정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함.

▣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안) 및 평가결과

– 현행 협의조정체계는 점검항목을 나열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함.

• 따라서 협의조정과정에 사업의 예상되는 성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평가틀이 필요함.

– 평가부문을 사업구성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개요', '추진과정', '예상되는 성과'로 구성함.

• 세부평가항목은 총 11개이며, 1단계는 '사업목적' 및 '자체복지사업의 당위성'이고 2단계는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3단계는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로 구분함.

– 각 평가항목을 5분위로 나누어 매우미흡은 1, 미흡은 2, 보통은 3, 우수는 4, 매우우수는 5로 구분하여 평가함. 그리고 100점 환산하여 20점 이하는 매우 미흡, 40점 이하는 미흡, 60점 이하는 보통, 80점 이하는 우수, 80점 이상은 매우 우수로 평가함.

• 전체 사업의 평가점수는 42.3점으로 '보통'이지만 '미흡'에 근접하고, 전체 평가 사업 중 30.8%가 '보통'으로 평가됨.

•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63점이고 전체 사업 중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11.5%에 불과함.

• 항목별로 '예상되는 성과'의 '성과지표'는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이 6.8점이고 '성과평가'는 평균이 6.5점으로 모두 '미흡'으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며 평가항목별 계량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 체계(안)을 제시함.

- 사업계획 수립시 피상적인 사업목적 및 필요성만 인정하여 협의조정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함.
- 사업시행 초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큰 사업후반까지 고려한다면 성과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조정평가를 마련이 필요함.
- ▣ 협의조정평가들의 개선과 함께 외부 연구기관 및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Evaluation Tools for Social Welfare Programs: Analysi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연구책임자 | 정홍원
공동연구자 | 정해식·김정은·이정은

I. 연구목적

- ▣ 사회복지 영역의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인 정리
- ▣ 사회복지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평가제도의 유용성 분석
- ▣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영역별 대상기관별 정책평가를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통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평가제도의 간소화와 정책평가의 실효성 제고라는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II. 연구내용

- ▣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에 대한 법령 분석
 -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복지 및 정부업무의 평가와 관련된 법률 분석
 - 평가의 개요, 목적, 시행주체, 주기, 영역, 기준, 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현황 파악
- ▣ 사회복지 정책평가 현황 파악
 - 계획평가, 성과평가, 기관평가,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등 각종 평가 제도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현황을 정리
 - 평가 시행 결과보고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평가관련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제 평가 운영 사례 파악

▣ 평가제도의 유용성 분석

- 평가의 목적, 시행 주체, 대상, 지표, 결과 활용 등을 기준으로 주요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재해석하고,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제도 자체의 적절성 검토

▣ 사회복지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과 제시

- 개별평가제도의 분산적 속성을 최소화하고 개별 평가의 역할 분담의 적정화를 통해서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모색

III. 정책제언

▣ 사회복지 영역의 각종 평가제도를 체계화 필요

- 기존의 각종 평가를 통·폐합하여 종류를 축소하고, 개별 평가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

▣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를 총괄하는 법령의 제정을 검토

- 평가 목적, 대상, 내용, 지표, 방법·기법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을 확보

▣ 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복지제도의 개선을 정례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결정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추진과제

A Current Issue and Theme in Social Welfare Policy

연구책임자 | 정홍원
 공동연구자 | 강은나·정해식·최새은

I.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음.
- ▣ 분석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집중해야 할 영역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사회복지를 소득, 고용, 건강, 가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지표를 선정
- ▣ 영역별 사회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과 복지정책의 장단점 파악
- ▣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들의 낮은 취업 등 인구 구조 변동, 노동시장 격차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원인의 결과
 -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와 고용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 반면에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 낮고, 이는 저임금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 확대의 원인
- ▣ 노인 계층의 의료와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 부각

- 노인의 만성 질환, 치매 유병률의 증가 등의 노인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 노인진료비 증가와 노인수발 또는 장기요양이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제도적 개입이 요구
- 자살의 증가는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증대
- ▣ 가족 규모 축소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증대
 - 가족 구조의 변화는 소규모 혹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적합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III. 정책제언

- ▣ 소득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
 - 노인 빈곤문제는 사회복지 급여 확대와 노인일자리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혹은 빈곤 인접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사회복지 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
- ▣ 정책의 대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한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 근로장려세제가 단순한 소득보조제도가 아닌 빈곤 탈출을 위한 메카니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 ▣ 자살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보건의 관점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
- ▣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음.
 - 가족 형성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 부담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
 -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취약집단의 파악과 각 집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Mid- to Long-term Modelling for Financial Projections of Social Security

연구책임자 | 신화연
공동연구자 | 선우 덕·양찬미·이성국

I. 연구목적

-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방법에 대한 국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최근에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사회보장재정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지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범주는 인구가정과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급여지출인 사회보험제도와 공적연금제도뿐 아니라 현금급여 중심의 일반정부지출을 주로 다루고 있음.
- ▣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보장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추계방법론 모색
 -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OECD 주요국 및 EU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서 시사점 도출

II. 연구내용

-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출전망 및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재원부담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추계방법론 검토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재정추계 모형개발 및 평가지표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 top-down 방식을 적용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방법론 검토

- 장기재정전망시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는 현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시 bottom-up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추계기간이 길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보장재정추계와 GDP 추계간 연계성을 높여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정추계와 GDP 추계가 별도로 이루어져 양자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BO와 세대간 회계방식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되, 추가적인 작업 필요
 -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에 의해 재정상태에 대한 일정제약조건하에서,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지출 삭감이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연도별로 가능한 삭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별 지출전망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재량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한 후 항목별 삭감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III. 정책제언

- ▣ 조세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장기재정추계는 향후 복지지출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
- ▣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동일하게 가정하여 재정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함에 있어 인구와 거시변수가정, 그리고

제도변수가정 변수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협의회 등 국가차원에서 대표 거시경제변수를 기준으로 하되,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변수 가정과 실적자료간 차이 등은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재정추계 소위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및 재정방식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세대에 걸쳐 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top-down 방식에 의한 장기재정추계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간 균형 및 평가지표개발 등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계 방법론 모색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구조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코호트별 조성법 등 bottom-up 방식으로 접근

- 조성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상태를 전망할 경우 제도관련 기초율 가정에 따라 향후 전망결과가 큰 폭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기초율 가정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Analyz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Cash and In-kind Benefits of
Low-Income Families

연구책임자 | 김태완

공동연구자 | 김문길·윤상용·송치호·김성아·이주미

I. 연구목적

- ▣ 최근 많은 복지제도들은 새로 도입시 현금보다는 현물성 급여에 대한 확대가 늘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를 OECD국가 중 복지지출예산에서 현물급여와 관련된 복지예산이 많은 국가로 분류
- ▣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의 확충과정 속에서 현금·현물성 복지지출 증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
 -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복지제도 확대 속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

II. 연구내용

- ▣ 총사회지출과 1인당 실질 GDP성장과의 관계에서는 고정효과, 동태적 패널모형, 도구변수 모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
 - 고정효과 및 동태적 모형에서는 총사회지출과 음의 관계를, 도구변수법에서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현금 및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분석시 1인당 실질 GDP 및 총실질 GDP와 현금 및 현물 급여 모형 역시 고정효과, 동태적 패널 및 도구변수법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 주고 있음. 분석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유의성 검정에서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금과 현물급여의 성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 총사회지출, 현금 및 현물급여와 불평등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불평등과 음의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총사회지출, 현금 및 현물급여가 증가할수록 불평등도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1인당 실질 GDP 증가 역시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과 현물급여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영향

-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에서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 평균금액은 중간계층인 5~6분위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지니계수를 활용한 현금 및 현물급여의 불평등 개선효과

- 현금 및 현물급여 모두 지니계수에 대한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금액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현금급여의 빈곤개선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에 따른 특성 및 빈곤실태

- 가구주 연령이 20~39세인 경우 저분위(1~3분위)에서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현물급여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4분위 이상에서는 나머지 모든 분위에서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현물급여의 비중보다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즉, 연령대별, 분위별로 현금 및 현물급여의 수준이 차이를 보임.

III. 정책제언

▣ 국내 사례 분석시 복지급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물급여에 대한 예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통해 보면, 가구의 대부분은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반면,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고 응답하는 금액도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낮았음.

- 현물급여에 대한 금액이 현금급여의 약 20% 내외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 급여수급자도 10분위를 기준으로, 중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현물급여를 많이 받고 있음. 반면에 현금급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지원대상자에 있어 차이를 보임.

-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현물급여가 이전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 40~64세는 중간소득 계층 이상에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음.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2013)

연구책임자 | 김미곤
 공동연구자 | 염주희·정희선·최준영·권지성·이은미·정선욱
 정혜숙·조준용·이현주

I. 연구목적

- ▣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결과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함.
- ▣ 이러한 배경에서 일회성 횡단면 조사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중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양적 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가능함.
- ▣ 본 연구에서는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론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합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저소득층 중심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 목적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II. 연구내용

-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로서 금년 3차 연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1차 및 2차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1차 연구는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구축하는 기초보고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차 연구는 질적 패널가구 20가구를 추가하고, 1차조사 자료와 2차조사 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였음. 이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6개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 금년 3차 연구에서는 2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는 중이고,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함. 질적 패널 분석의 경우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 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질적 패널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적 조사자료 모두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3차 자료(주로 1~2차 자료 이용)를 바탕으로 주요 5개 영역에서 심층분석 연구 결과만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함.
- ▣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
 -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계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 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 내기 역부족임.
- 복지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 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III. 정책제언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수급제도가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만성·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Focused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연구책임자 | 김성희
공동연구자 | 황주희·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정희경

I. 연구목적

-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포함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이 부족하고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임.
 - 타 장애유형에 비해 중증장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다수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가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제도 등 주요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II. 연구내용

-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검토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 ▣ 국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시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검토
- ▣ 국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현황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검토
- ▣ 자립생활 관련 실태분석 및 FGI 분석결과 제시
 - 자립생활 실태분석: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생활 영역별 실태 및 욕구 파악

- 전문가 FGI: 발달장애인 부모,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지원방안을 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지원 등 영역별 제시

III. 정책제언

-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 및 선택권 강화
-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돌봄지원, 고용지원, 후견인지원 제도 등 통합적 지원

① 돌봄지원

- 활동지원제도

-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성인발달장애인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산정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활동지원서비스(급여) 개발
- 발달장애인 전담 활동보조인력의 교육과 관리, 전담기관 선정
- 장애정도와 욕구에 의한 지지적 개별화된 자립지원서비스제공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가족지원제도

-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제도 구비
-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지원제도 수행을 위한 센터 및 가족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성인기 이전 전환기 반복서비스 지원 강화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로 전문가 방문서비스 활성화

② 주거지원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주거실태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욕구 파악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거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정도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자립생활 주거유형 개발과 지원
- 지역사회 재가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 기회 활성화
- 대규모 생활시설의 자립생활지원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검토

③ 고용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 현장중심 평가 필요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시설 확충 필요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지원고용서비스 예산 및 인력 점진적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합직종 개발사업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④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인지원제도의 내실화
-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인프라 구축
- 후견인 이용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 완화
- 성년후견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원실시 및 서비스 내용 확대 필요
- 성년후견제도와 타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이용자 중심 접근
- 성년후견인제도의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A Study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nd Effect of Provider Characteristics on Service Quality

연구책임자 | 박수지
공동연구자 | 정은희·김가희

I. 연구목적

-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품질 연구는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본격화 됨. 그러나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공급자 측면의 시각에서 공무원이나 기관운영자가 지각하는 품질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과는 거리가 있음. 그러므로 이용자 중심의 품질을 개념화하고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 본 연구는 첫째,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시각에서 품질을 개념화하고 인식과정을 분석하여, 둘째,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품질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 서비스의 품질현황을 제시함과 동시에 품질에 대한 서비스 기관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이용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quality contents analysis)
 - 이용자가 인식하는 좋은 서비스는 ① 동료교류와 자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② 인권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서비스 ③ 이용자가 선택하고 참여하는 서비스 ④ 내 집과 같은 서비스로 개념화됨. 한편 좋은 서비스의 방해 요인으로는 ① 기관의 효율성 추구 ② 전문가 중심의 접근 ③ 경험과 이해의 부족 ④ 부적절한 대우, 방임이 도출됨.
- ▣ 이용자의 품질 인식 과정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으로 분석
 -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태도, 인식, 환경, 그리고 서비스 인력 및 기관과의 관계 등의 상호작용방식을 분석함.

- 품질 인식과정의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로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며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정하기>가 도출됨.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급자 생산물로 서비스 품질의 인식>, <서비스 이용 초기의 갈등>, <공동생산의 노력>, <공동 생산물로 서비스 품질의 인식>의 네 단계로 구조화하여 분석함.
- ▣ 질적연구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의 개발
 - 현재 서비스 품질척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SERVQUAL 모형을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의 품질 인식을 고려하여 SERVQUAL 수정모형으로 제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함.
 - SERVQUAL 수정모형이 서비스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품질을 측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결과품질'을 추가하여 SQDA(service quality for severely disabled adults) 모형을 제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
- ▣ 장애인서비스 품질현황을 조사하고 공급기관의 영향력 분석
 - 조사결과를 이용자(level1)와 기관(level 2)의 다층자료로 구축함. 그리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함. 아울러 공급기관의 영향력 및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분석함.
 - 그 결과 품질이 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p < .001$). SERVQUAL 수정모형으로 측정된 품질의 경우 공급기관의 영향력은 약 19.36%로, 그리고 SQDA 모형으로 측정된 품질의 경우는 약 20.35%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관요인으로는 서비스유형(-), 서비스 인력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이 유의미하게 나타남($p < .1$).

III. 정책제언

- ▣ 첫째,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서비스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성과(outcome)가 아닌 과정(process)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현재 정부의 품질관리 자료는 서비스의 결과 즉 만족도 혹은 삶의 질 등의 서비스 성과나 기관차원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음.
- ▣ 둘째, 정부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의 이용자 중심 품질관리의 핵심은 서비스 기관 간의 '경쟁'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촉진하는 것임.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경쟁과 선택보다는 ‘참여(participation)’ 즉 공급자(정부, 서비스 기관)측과 좀 더 원활히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 셋째, 서비스 이용자의 자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자조’를 인식하고 있었음.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 서비스로써 서비스 대상자의 자조(self-help)그룹 형성과 지역사회 내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 넷째, 체계적으로 개발된 품질측정도구를 품질현황 파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현장 활용이 가능한 품질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음. SQDA모형은 3개 영역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전의 SERVQUAL 모형이 5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측정 문항이 적음.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기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의 편리성이 증가한 모형임. 특히 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 문항 수가 적은 품질 측정도구의 개발은 더욱 의미가 있음. 한편 SERVQUAL 모형의 구성차원이 서비스 과정(process)에 치중되어 있어 정책적 함의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SQDA 모형은 품질의 구성차원을 정책 관심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과정(process), 서비스 참여(participation), 서비스 성과(outcome)로 구성함. 즉 SQDA 모형은 SERVQUAL 모형 보다 장애인서비스 품질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
- ▣ 다섯째, 장애인서비스의 품질현황을 개관한 결과 장애인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수준은 만족도 점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됨.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선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자체보다 품질 현황 수준의 제고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함.
- ▣ 여섯째, 장애인서비스 품질에 공급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직요인의 영향력이 타 서비스산업의 연구와 비교하여 크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서비스의 품질을 연구함에 있어 조직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 접근에 있어서도 서비스 기관의 특성을 이용자 중심 품질관리의 주요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수시보고서
13-10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A Case Study on the Incidents Related with Extreme Hardships

연구책임자 | 이현주

공동연구자 | 김성희·신영석·이상영·정경희·오신휘·이민경·전지현·진달래

I. 연구목적

- ▣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그 제도적 지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과 취약집단이 적지 않게 잔존해있음.
- ▣ 결국 생활상의 각종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한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져 이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잠복한 우리 사회의 생활위기를 시사함.
-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생활위험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유형과 원인,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주요내용

-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구성원이 위기에 처하는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유형화하고 그 양상을 파악함.
-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현 제도의 대응 잠재력의 검토와 한계를 고찰함.
- 생계형 사건·사고의 경향을 기초로 할 때, 향후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함.

▣ 연구방법 개요

-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공식집계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분석함.

- 검색대상 기간은 지난 3년간으로 201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보도된 사건·사고를 검색함.
- 그 결과 검색·추출한 기사의 수는 총 141건이며, 분석에 사용한 사건의 수는 총 167건임.
- 주된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하나는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한 양적분석임. 보도된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유형화의 기준을 마련 및 적용하여 통계데이터 형식으로 코드화하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함.
 - 다른 하나는 핵심 사례에 대한 심층적 내용분석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사례선정 기준 및 사례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의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분석·종합함.

III. 정책제언

- ▣ 고용불안정과 제도 사각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숙고 필요
 - 기존의 사회정책이 취약인구집단으로 주 대상을 한정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지원 외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고용이 불안하여 소득이 낮고 가족의 부양과 간병, 돌봄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능력자의 현 주소임.
- ▣ 가족주의의 명에에 대한 재고 필요
 - 가족의 부양책임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타의 생활 전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극단적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우리사회에서 이는 가족 동반자살과 가족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
 - 현실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는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고 있음.
- ▣ 노인, 장애인, 질환자의 부양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
 - 노인에 대한 부양과 돌봄 지원 제고: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수발환경 관련 정보 추가 수집·반영 필요함

- 장애인 돌봄과 간병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과 서비스 시간 등 확대, 지역사회 기반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장애아동 대상 공공·민간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돌봄시설 및 장애아 전문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

▣ 의료비 지원의 확대 및 현실화

- 추진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구간 세분화 및 지원 강화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대응 모색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과 의료비지원 사업의 연계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의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 이후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은 물론 서비스 수혜 방법 등을 연계하는 밀착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핵심적 과제임.

▣ 위기 발굴 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적 인력만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협력이 절실함.

- 노인이나 장애인의 다수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가까운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함.

▣ 사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의 보충적 설계 필요

-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획일적이고 부족한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각 사례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 있음.

- 정책기준의 엄격성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서 공공과 민간의 지원과 연계가 일선의 복지 전문가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정책구조가 필요함.



취약 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차년도)

Establishing a Preventive Welfare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Program for Vulnerable Families, Families in Crisis, and Multiculture Families: Fourth Year

연구책임자 | 정은희
공동연구자 | 박수지·김보영·안혜영·이기연·정익중·김효진

I. 연구목적

- ▣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는 매우 다양함.

 - 빈곤, 실업, 장애, 질병, 보육, 가정폭력 및 학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 및 가족은 개별적인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연계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없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분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 이러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 개인과 가족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효과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 사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제기되어 왔음.
- ▣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경기도의 '무한돌봄사례관리', 여성가족부의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사례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임. 이러한 다양한 사례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 실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정립 및 사례관리 수행주체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사례관리 사업간에 중복된 요소들이 존재

- 다양한 사업주체가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례관리 제공기관간 역할분담 모호
-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
-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탐색하고 다양한 사례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간 통합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례관리 사업의 중복요소 제거 및 사례관리 사업주체간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건이 무엇인지를 밝혀 사례관리 주체간 역할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사례관리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Gläser와 Laudel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수행하였음. 분석결과 사례관리의 개념은 공공과 민간위탁 영역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간의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가는 사례관리의 목적을 개인의 역량강화, 전달체계의 효율성,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민간위탁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가는 사례관리의 목적을 개인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사례관리 개입 차원은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자원개발과 연계와 같이 환경에 대한 개입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공공과 민간간 차이점이 있음.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문가는 조정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위탁 사례관리 사업 전문가는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에 대한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사례관리 개념을 구분하는 틀은 공공 통합 사례관리와 민간 전문 사례관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혼돈을 줄이고 명확한 역할분담과 연계관계속에서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 제한된 자원으로는 증대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음. 그러나, 공공의 통합사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현 통합사례 유관기관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임. 이는 통합사례관이 운영이 영역별 대상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분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안을 동북 지허브화 모형 중 통합형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음. 통합형 형태로 조직 개편한 이후에 통합복지 행정센터를 구성하고 동통합센터에서 복지대상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임.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 장애인 사례관리 등을 동단위에서 통합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영역에 위탁 되어있는 사례관리유형은 인력을 센터에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제시되어 질 수 있음.
- 이상적인 체계운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센터 복지민원 '수요' 특성 파악 및 규모 분석, 업무조정/부서/인력 재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 개편되는 주민센터는 ① 일반민원, ② 지역복지민원, ③ 복지신청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창구, ④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같이 전문적인 상담영역으로 분리 하여 운영을 제안하였음.

▣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례관리 사업은 다양한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과 사례관리 사업들간 중복성이 존재함. 중복성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돌봄교실간 연계가 강화되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장기적으로는 생애단계별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방과후 돌봄 사업간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요추정과 공급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방과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인력교육 및 종사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조정방안 또한 필요함. 방과후 돌봄 사업의 연계 조정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범부처간 협력을 위한 기반들이 조성되어야 하며 방과후 아동의 현황파악을 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또한 기관간 정보공유나 공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동일기능을 가진 돌봄서비스들은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부처별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관별로 일률적이지 않은 기준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통합사례회의의 실적을 그 지역의 공동성과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기관간 이동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해야 하며 돌봄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방과후돌봄간 상호 연계를 위해 예산상의 유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적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함.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은 그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장 및 담당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상벌체계를 고안해내는 것 또한 중요함.

■ 노인·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 노인·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가 일원화된 접근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위임의 주체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한 노인·장애인 사례관리 체계 모형으로서 현재 노인부분에서 이원화된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통합 사례관리기구 구성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통합사례관리기구를 통해 공적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인과 장애인 대상 급여와 서비스의 신청과 접수를 일원화하고 이 기구에서의 한 번의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 필요한 모든 급여와 서비스가 신청되어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모형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직 통합의 문제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 분절된 중앙부처의 조율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성인가구대상 사례관리

- 성인대상 가구 사례관리 사업간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업 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은 먼저 정신보건 욕구나 인구 대비로 인력과 예산의 적정투입규모 확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적정투입규모의 확보가 어렵다면 중증정신질환자사업을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중증정신질환자사업을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통합운영은 의료적 접근이 주이므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회서비스로 개발되어 운영되는 정신 장애인 토달케어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사례관리 인력을 전문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핵심 성과와 목표를 재규명 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함. 성인대상 사례관리 사업 중 정신보건사업과 다문화사업, 취약한부모가족지원 사례관리사업이 유사한 성과영역을 공유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이 간에도 유사한 성과영역을 공유함. 고용-복지-보건을 연속선상에 본다면 각각의 성과가 다른 차원이 아닌 세 영역 모두가 단일 차원

에서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사업간 통합성을 위한 제고방안은 사업들의 분명한 성과목표를 개발 혹은 재규명하여 핵심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선택이 필요함.

III. 정책제언

- ▣ 사례관리 개념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사례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영역에서 사례관리실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공공역역의 사례관리와 아동·청소년대상의 사례관리, 노인·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성인대상 사례관리 영역별 사업의 실태 및 영역별 통합적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방안들과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 사례관리사업 영역별 사업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정책의 실효성 및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연구보고서
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연구책임자 | 이현주·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자 | 노대명·오미애·전지현·신재동·정희선·박형준·박나영
김태성·구인회·안상훈·이상록·정원오·변금선·김희선·이혜림

I. 연구목적

- ▣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 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때문에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 그동안 생산된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여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고 있음.
- ▣ 한국복지패널의 구축목적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연령, 소득,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집단별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조사표는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이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의 순서로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순환 주기에 따라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세 번째 부가 조사를 수행하였음.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 표본가구 확충: 8차 조사에서는 약 1,800가구의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앞선 2차 조사와 5차 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이번 8차 조사에서는 부가조사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추출 하였음.
 - 8차 조사의 부가조사 표본은 동일 가구에서 성인 가구원 전원이 조사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었음. 대표적으로 동일 가구 가구원 사이에서 복지인식이 유사한지 등도 분석이 가능함.
- 종단분석 결과의 소개: 2013년 기초분석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완료된 8차 조사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에 더해, 일부 핵심변수를 선정하고 종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

- 조사기간: 2013년 1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62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완료가구: 7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5,271가구 중에 5,104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원표본 5,104가구에 더해 기존 신규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신규가구를 포함한 515가구, 신규 조사대상 가구인 1,800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1,693가구까지 총 7,312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III. 정책제언

- ▣ 한국복지패널(KOWEPS)은 현재까지 8차 조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복지 관련 패널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복지 욕구와 경제활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함. 특히 경제, 사회적 행태변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 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통계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서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분야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복지 분야는 양적 데이터 활용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음.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자료를 학술대회 등의 방법으로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An In-Depth Analysis of KOWEPS-Combined Database

연구책임자 | 최현수
공동연구자 | 오미애·손창균·임병인·정희선

I. 연구목적

- ▣ 한국복지패널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표본 탈락을 최소화하여 적정 규모의 원표본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음.

 - 2006년 원표본 7,072가구로 시작된 한국복지패널은 6차 조사까지 5,000가구 이상의 원표본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원표본 유지율 약 75% 수준을 유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자연손실 등으로 인한 원표본 감소와 표본 탈락에 따른 표본가구 분포 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최초 구축 당시 표본 규모와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2년 7차 조사 수행과정에서 신규 패널표본(KOWEPS_2) 1,8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7차 패널조사 완료 원표본 5,271가구(분리 가구 포함 5,732가구)에 신규표본 1,800가구를 통합한 전체 원표본 규모는 7,071가구(분리 가구 포함 7,532가구)로, 최초 원표본 7,072가구와 유사한 수준을 회복함.
-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 추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7차 원표본과 신규 표본 가구 분포가 지니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및 빈곤·불평등 지표를 심층 분석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규 표본가구를 포함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및 가중치 조정과정을 제시하고, 원표본과 신규 표본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표본의 대표성 유지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국복지패널 구축 기반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함.

II. 연구내용

- ▣ I 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신규 패널표본 추가 조사 및 구축 과정을 제시하며, 표본추출 및 가중치 조정,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동질성 및 안정성 등을 확인함.

 - 2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표본 유지 및 탈락률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신규 표본 가구(KOWEPS_2) 추가의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봄.
 - 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KOWEPS_2) 조사 구축을 위한 표본추출 및 표본 배분, 가중치 부여 및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에 대한 가중치 조정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함.
 - 한국복지패널 7차 원표본(KOWEPS_1)과 신규 표본가구(KOWEPS_2) 간 분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4장에서는, 주요 변수 중심으로 명목변수의 경우 상대빈도를, 연속변수의 경우 밀도함수를 활용하여 두 표본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통계적 동질성 및 안정성을 확인함.
- ▣ II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KOWEPS_Combined)를 중심으로, 7차 원표본과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포를 살펴보고,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심층 분석함.

 - 5~7장에서는 7차 원표본(5,732가구)과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7,532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조사영역 중 가구·가구원 특성, 가구 소득·지출·재산 및 주거 관련 핵심 변수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
 - 8장에서는 7차 원표본과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빈곤·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심층 분석하여 빈곤 및 불평등 지표의 경향성과 유사성 등을 비교하여 제시함.
 - 9장에서는 각 장별 주요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2006년 한국패널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2년 7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신규 표본가구 추가 구축 성과 및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통계적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복지패널 활용 제고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함.

III. 정책제언

- ▣ 7차 조사에서 구축된 신규 패널표본 가구는 8차 조사부터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 때 기존 패널 종단면 가중치와 병합하여 가중치를 산출할 경우 기존 패널 가중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8차 조사 이후 종단 가중치 산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함.

-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반영하여 조사한다는 한국복지패널의 중요한 목적과 관련하여 이번에 추가된 신규 표본은 그 동안 원표본에서 탈락한 표본가구를 고려하여 추가한 것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원표본에서 저소득 및 단독가구의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을 신규 표본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기존 패널과 통합 분석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음.
- ▣ 한국복지실태조사의 주요 조사영역별 변수에 있어 원표본 및 신규 패널표본 통합 DB에 대한 분석결과,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나타난 분포의 특성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신규 표본 통합 DB를 중심으로 산출한 빈곤·불평등 지표 추정치는 원표본에 대한 측정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표본가구인 1,800가구가 1차 웨이브 당시 표본 추출 설계를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것은 향후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최초 원표본(KOWEPS_1)가구와 신규 패널표본 통합 DB(KOWEPS_Combined)의 표본구성 및 분포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가급적 단순히 횡단면 분석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보다는, 패널자료 구축의 취지에 맞도록 한국복지패널 조사연구의 목표 집단인 저소득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는 연구에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 지난 8년 동안, 한국복지패널 구축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 목표를 기초로 표본 유지율 제고와 표본 탈락 감소를 위한 표본 관리체계 구축, 신규 표본 추가에 대한 기본원칙, 가중치 부여체계, 데이터 관리·제공의 기본원칙, 조사원 선발 및 교육과 추적조사 등 조사수행 체계,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한국복지패널이 다양한 정책 수요 및 사회조사 수행 관련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 간 비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패널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 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연구보고서
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3

연구책임자 | 임완섭
공동연구자 | 노대명

I. 연구목적

- ▣ 선행된 빈곤통계연보(2006~2012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여건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 생성
 -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불평등의 심화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등 범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로 상대빈곤 및 근로빈곤층 문제 등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앞에서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득분포 및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제고함.
 -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통계지표 제공

II. 연구내용

- ▣ 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층 및 중간소득계층 분포 그리고 불평등지수를 산출
- ▣ 자료의 공신력, 표본의 적절성, 시계열의 풍부성 그리고 분석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
 - 연간자료(2000~2012년)를 활용하여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 그리고 불평등지표를 구하였음.
- ▣ 주요 빈곤 및 불평등 지표 산출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가구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갭비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갭비율
- 중위소득 50~150% 소득분포
- 여성가구주 빈곤율, 여성가구주가구의 가구빈곤율
- 아동 빈곤율
- 노인 빈곤율
- 불평등(지니계수)

III. 정책제언

- ▣ 본 연구는 통계지표를 생성하지만 그 해석 및 인과관계는 독자 및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음. 따라서 주요 결과만 제시
- ▣ 절대적 빈곤율
 - 1인가구를 포함한 전가구를 기준으로, 2012년 절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1.1%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9.1%로 전년대비 0.5%p 하락하였음.
 - 2009년을 정점으로 절대빈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상대적 빈곤율
 - 2012년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6.3%로 전년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4.0%로 역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음.
 - 최근 3년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경상소득 기준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불평등
 - 2012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0.329로 전년대비 0.002 하락하였으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0.300로 전년대비 0.002 하락하였음. 반면 경상소득과 지출의 경우 불평등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III: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nd Growing Inequality in Korea

연구책임자 | 강신욱
 공동연구자 | 강두용·홍민기·정현상

I. 연구목적

- ▣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
 -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탐색
 -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한 후,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간 소득분배 두 측면에서 각각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
 -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한 검토

II. 연구내용

- ▣ 1990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 (생산측면)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 환율 요인과 중국 효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재공업화라는 특징이 나타남.
 - (고용구조 측면) 탈공업화 내지 서비스화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부가가치 측면) 제조업과 여타 부문(특히 서비스)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격차가 큼.
 -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하락세가 이를 시사하고 있음.
 -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 간에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관찰됨.
 - 산업간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지니계수 혹은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해보면 제조업의 불균등도 상승 추이로 제조업내 업종간 규모의 불균등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 변화가 기능적 소득분배(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친 영향

- 국민계정 상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와 요소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 다만, 국민계정 상의 자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 분배율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비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는 방법을 위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함.
- 198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4.8%p,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10.0%p 낮춘 반면, 산업 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크게 증가함.
- 이러한 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함.
-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와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함.

■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적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상의 가구주 노동소득과 종사산업 등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산업구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전체 산업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8개로 구분
- 취업 가구주의 종사 산업의 분포는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여 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8개 산업별로 가구주의 평균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별 격차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불평등의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본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수준 및 특정 시기 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산업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씩 설명하는지를 분석
 - 산업 요인은 불평등 심화 요인 가운데에서는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만을 본다면 산업은 교육수준 다음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III. 정책제언

- ▣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만큼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함.
- ▣ 산업측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로부터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가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양적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함.
- ▣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줌.
 - 금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저소득 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Work and Welfare Reconciliation Policies in Korea, Japan and China

연구책임자 | 노대명
공동연구자 | 김태완·요건평·김병철·고이시 노리미치·임원섭

I. 연구목적

- ▣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이 세 국가의 복지레짐이 제도형태나 지출수준 등의 측면에서 갖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규명
- ▣ 한·중·일 각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각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
- ▣ 최근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편, 특히 근로빈곤층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시사점 도출

II. 연구내용

- ▣ 한중일 복지정책 비교분석방법의 모색: 한·중·일 3국의 경제사회환경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방법 제안
- ▣ 한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정책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황진단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정책방안 제안
- ▣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환경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비교분석하고, 최근의 제도개편동향과 정책과제 제시
- ▣ 중국은 농민공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제도개편 동향은 가까운 장래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

- ▣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비교는 이 세 국가가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저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저성장과 복지수요 증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

III. 정책제언

- ▣ 지금까지 서구 복지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지배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 ▣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제도형태 등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과 발전방식, 그리고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 등의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짐. 이는 일본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중국으로부터 후발주자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연구보고서
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연구책임자 | 이현주
공동연구자 | 강상경·김수완·이선우·전지현

I. 연구목적

- ▣ 과거 20여 년 동안 사회정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근로복지 및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면서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주목하게 됨.
 -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기획·설계하는데 기본임.
-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복지의식으로 다루어져왔던 의식의 범주를 확대하여 근로와 관련된 의식을 포괄하고 사회정책 관련 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즉, 본 연구는 사회정책 및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그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특성과 지형
 -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영역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기본적인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
 -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범주화된 의식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신뢰도분석을 통해 의식의 각 항목이 전체적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경향을 대변하는지를 파악함.
 -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을 집단 구분하기 위해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복지확대 반대와 지지, 잔여복지 지지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됨.

▣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쟁점이 되었던 요인들의 조작화를 보완하고 재산과 같이 그간 도외시되었던 영향요인에 대하여 주목함.
-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계급의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계층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재산의 영향이 더 강력하였음.
- 이해관계 요인 중 복지수급경험은 친복지적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잠재적 복지수혜자인 여성과 노인은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음.

▣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정책이 빠르게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 복지의식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살펴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은 평균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복지의식 궤적은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가 낮았으나 그 하락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복지의식이 다소 높았지만 빠르게 낮아짐.
-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소득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복지경험변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 보임

▣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정책의 주 대상 집단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봄.
- 분석 결과, 노인은 비노인과 비교하여 복지에 대하여 덜 지지적이었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복지의식은 친복지적이었으나 총자산은 증가할수록 반복지적으로 나타남.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증세에 더 지지적이었으며, 장애인은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에 부정적으로 나타남.
- 지지하는 정책영역을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은 자기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복지증세에 대한 요인의 영향분석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에 대한 의식 국가비교

-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의식의 영역으로서 근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태도를 국제비교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사회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을 금전적 보상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해 서로 방해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하여 일-가정 양립에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본격적인 연구문제로서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석 국가 전체로 보면,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는 계급적·구조적 요인보다 개인 취향에 의한 것인 반면, 실제 근로시간은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 뿐 아니라 계급의 영향도 나타남.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경향이 뚜렷하게 유의미하지 않아 이와 관련 좀더 숙고할 필요 있음.

III. 정책제언

- 첫째,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지수화하는 과정은 체계적이고 정교해야 함.
 - 지수화에 앞서 신뢰도분석 등 필요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집단에 따라서도 의식의 주요 범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둘째,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이 매우 다양하며 각 내용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함.
 - 복지의식을 정책설계에 반영할 때 의식의 내용 중 무엇을 고려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임.
- 셋째,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면, 그리고 고택력의 지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과 복지수급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사회적 공감 기회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정책의 확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복지확대가 미래 복지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것만은 자명함.
-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인구집단별, 재산수준별, 그리고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이 상이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문길
공동연구자 | 김태완·박창철·여유진·우선희

I. 연구목적

- ▣ 개인의 성과와 분배의 결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불평등의 공정성과 관계되는 문제임
- ▣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인과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공정성이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실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II. 연구내용

- ▣ 윤리·철학적 기초
 - 롤스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이 존재. 전자의 입장에는 흄스, 로크, 스미스 등이 있고, 후자의 입장에는 루소가 있음.
 -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
 -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음.
 - 기회균등은 특정수단에 대한 균등한 이용가능성 또는 특수한 장벽이나 제약조건의 균등한 적용가능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셴의 능력개념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자원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또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은 16.8%(2012년)에 불과하고, 성공을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가족배경과 사회자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ISSP, 2009).
-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의 높은 연관성이 나타남. 이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의 큰 격차로부터 설명이 가능함.

▣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 부모가 가진 물질 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의 향유 수준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음.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및 4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는지,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자본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화자본 변수를 도입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 어떤 변수도 학생의 독서향유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학생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주로 학력변수로 나타남.
- 그리고 가구의 독서환경과 문화향유 변수는 모두 학생의 독서향유와 문화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자본 중 독서환경과 독서향유는 학생의 수능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이것은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음.
- ▣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사전적 분배정책은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꼽히고 있음.

- 사후적 재분배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보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비인지 능력을 계발하는 정책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임.
- ▣ 사전분배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책대상 선정과 관련한 과제로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존의 사회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남게 됨. 전자의 경우는 세계은행의 인간개발지수(HDI)를 참고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Supply and Demand for Social Services at Localities

연구책임자 | 박세경
공동연구자 | 이정은·신수민·양난주

I. 연구목적

- ▣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급 체계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로부터 파악된 정책적 쟁점과 문제점을 간과한 상태에서 서비스 공급량을 무조건적 확대는 오히려 공급 체계 전반의 상황을 악화 우려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 관한 문제 중심적 접근은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 비용, 공급방식이나 과정(전달체계),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 등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포착하고 있음.
- ▣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쟁점을 논의

 - 사회서비스의 수요 규모를 특정지우는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차원에서 서비스 공급 규모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 재정 관련 변수를 기저에 두고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측면 논의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편의성 등의 제 측면을 고려하였음.
 - 이로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의 구체적 대상과 지역적 범위를 확인 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연구내용

- ▣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논의를 주요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제 측면 고찰

- 사회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쟁점에 착안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기반과 공급 분포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
 - 접근성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자 중심 접근의 핵심 요소로 간주됨.
 -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설의 입지기준으로서 이용하는 공간적 형평성과 공간적 효율성이 접근성에 의해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현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서비스 공급의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요건에 대한 수요변수를 산정하여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요 분포 현황을 표출
 - 서비스 공급량에 대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취약지의 특성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 집단으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급 수준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확인
 -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 아동, 등록장애인, 노인 인구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지역간 인구분포의 차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음.
 - 시군구 단위의 고령화 비율, 노령화 지수 또는 등록장애인 분포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7세 이하 아동인구의 분포를 볼 때, 각 지역단위 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 상존
 - GIS 공간지리정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수요 인구계층의 공간적 분포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본 바, GIS ArcMap 결과물 지도로 제시된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지역적 분포는 우선 수요 밀집 지역과 매칭 되지 않는 사례를 빈번하게 확인

III. 정책제언

- 특정 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지역에서 서비스 수요 분포나

인구 구조적 특성 및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분석 없이, 정치적으로 시설 설치 논의가 촉발되는 것은 절대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 수급의 지역 격차와 관련된 쟁점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과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협력적 연대와 효율적 관리 기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 전통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정부역할을 위임·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방식에 익숙한 복지부로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정책 총괄 기능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음.
 -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만큼이나 절실하게 요청되는 영역은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의 협력, 소통을 위한 시스템 정립 필요
 - 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을 우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범사회서비스의 영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판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서비스 확충과 조정 등 양적(量的) 개입은 물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적(質的) 통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사회서비스 유형화의 준거 마련
 -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논의의 전개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광범위로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운영 방식의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함.
 -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운영 방식을 포함,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화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은 향후 정책 설계의 밑바탕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될 것임.
- 중장기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의 수립
 -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의 사회서비스 정책 지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유형화된 주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기간별, 시기별, 지역특성별 정책 활용 기제를 구체화 가능
 - 거시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 프레임 안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대



연구보고서
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The Study of Women's Employment Activation Pl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Rends, Determinants and Impact)

연구책임자 | 여유진
공동연구자 | 김수정·김은지·최준영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와 참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연구내용

-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임.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역시 'M자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 골이 깊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임.
 - 둘째,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특히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셋째,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낮은 반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산층 여성의 경우 64.4%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음.
 - 넷째, 아동의 존재는 여성 경제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도는 여성의 소득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와는 달리 유배우 여성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평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비경활인구에 대한 대표성있는 조사 실시, 시간제 일자리의 유연안전성 확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여성 독립성 고취 교육 등이 요구됨.
 - 둘째,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취업맘 중심적인 보육시설의 인센티브 강화, 직장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책 설계시 여성의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 지형 자체를 Orloff(2006)가 말하는 바의 '친여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정서 및 감정 노동에 대한 안전규범 강화, 노동 시장 내 남녀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는 또 다른 주요한 사회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격차 축소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추구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임금, 근로조건, 안정성,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점검, 직무표준과 전문성 제고, 감정노동 일자리에 대한 대응 강화, 남녀 임금격차 축소 노력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는 또 다른 주요한 사회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격차 축소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추구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임금, 근로조건, 안정성,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점검, 직무표준과 전문성 제고, 감정노동 일자리에 대한 대응 강화, 남녀 임금격차 축소 노력 등이 필요함.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III :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Strategies for Increasing Social Service Jobs III : Linking the Social Service Industry with Employment Creation

연구책임자 | 이철선
공동연구자 | 박세경·권소일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I. 연구목적

- ▣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고령화 등 인력구조의 변화로 인한 복지재정 증가와 국내 고용창출력 감소라는 국가적 명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로써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됨.
 - 제3섹터란 정부중심의 공공영역인 제1섹터와 영리기업 중심의 민간영역인 제2섹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들로서 사회적경제라고도 불리움.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12.12)된지 1년 만에 약 3,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사회적 기업은 사업 개시 5년 만에 약 1,000개를 돌파함.

II. 연구내용

- ▣ 본고에서는 국내사회서비스 산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선진 4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과 연관된 제3섹터 기관 육성정책 및 고용효과를 살펴본 후 국내외 제3섹터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상의 경쟁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사례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함.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안)에 따라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분석
 - 국내외 제3섹터기관의 경쟁력 비교분석의 경우, 경영학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기반 하에 해외100여개 제3섹터기관의 사례분석 결과와 국내 약 3,000여개 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III. 정책제언

-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효율성과 고용창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등 거시적 관점의 정책 추진과 제3섹터 기관의 경쟁력 강화하는 미시적 차원의 정책 병행이 요구됨.
 - 산업 등 거시적 관점의 경우, 제3섹터기관에게 사회서비스 시장 위탁에 대한 우선권 부여,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개발, 근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 등 질적기반 확보, 제3섹터 기관 중심의 중간지원기관 육성, 그리고 국내 제3섹터 기관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
 - 기관 경쟁력 강화의 경우, 제3섹터기관유형 중 협동조합 법인의 집중적 육성과, 지역기반의 상향식 사회서비스 R&D 개발, 전국단위 연합회나 협회 구축 간접지원, 제3섹터 기반의 금융시스템 구축 니드에 관한 정책이 필요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 복지재정 DB 구축과 지표분석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의-한의 공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국민대통합 및 추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Net Tax-Burden in Korea

연구책임자 | 남상호
공동연구자 | 권혁진·유진영

I. 연구목적

- ▣ 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재정지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장단기에 걸친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지, 또 지출규모는 적절한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여기서는 조세부담과 사회수혜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의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음.
 -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첫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음.

II. 연구내용

- ▣ 시장소득은 전체 평균이 월 343만원이며, 1분위는 21만원, 5분위는 283만원, 그리고 10분위는 892만원이었음.
 - 사적이전은 소득분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위에서는 10만원, 5분위에서는 11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공적이전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분위는 38만원, 2분위 22만원, 3분위 13만원과 같이 점차로 낮아져서 10분위에서는 6만원에 불과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에 힘입어 1분위의 총소득은 월 8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분위도 161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은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세 부담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한 가구당 13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계층별로는 제 1~4분위에서는 전혀 없거나 1~2만원으로 미미하였지만 10분위에서는 월평균 4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음.
- 사회보험부담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는 월 3만원, 2분위는 6만원, 5분위에서는 17만원을 부담하며, 10분위에서는 4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으로는 연간 35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 가치분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는 월평균 75만원, 2분위는 153만원, 5분위는 292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857만원이었고, 전체 평균으로는 3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살펴보면 1분위는 월평균 8만원, 2분위는 11만원, 5분위는 17만원, 그리고 10분위에서는 3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음.
- 현물급여로 인한 수혜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월평균 32만원, 2분위에서는 29만원이었으나, 5분위 이후에서는 51~57만원으로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III. 정책제언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에는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이나 관련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현물급여는 역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제한적이었음.
- tax-benefit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혜택은 지대하므로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복지재정DB구축과 지표분석

KIHAS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Developing Indicators

연구책임자 | 고경환
공동연구자 | 강지원·정창수·김선희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KIHASA 복지재정DB)를 구축하고, 복지수준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기초통계를 생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2012년에는 세입자료의 구축을 통해 세입-세출을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2013년에는 세출자료의 정교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 및 통계기반 구축
 - 국고보조사업의 기초자료 입수를 통해 KIHASA 복지재정DB 구축 확대
 - 자체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예결산서를 통해 얻지 못하는 정보 확보

II. 연구내용

- ▣ KIHASA 복지재정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세출은 28.2조원
 - 복지재정DB 일반지표는 기초자치단체별 기능*회계*정책사업*재원별 자료로 구성됨.
 - 기능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30.2%), 노인·청소년(25.3%), 기초생활보장(18.2%) 순으로 나타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98.1%), 특별회계(1.5%), 기금회계(0.4%)순으로 나타남.
 - 정책사업별로는 보조사업(88.2%), 자체사업(9.8%), 기타(2.0%)순으로 나타남.
 - 재원별로는 국비(44.2%), 시도비(22.1%), 시군구비(32.1%), 분권교부세(1.6%)순으로 나타남.
 - 복지재정DB 분석지표는 17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16개 지표가 생산되고 있음.

- 자체사업 비율과 지방정부부담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중위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재원(36.2%)보다 의존재원(67.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증가
-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매칭비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심화

-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자체사업의 다양화로 특징임.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2012년 기준 201개 24.6조원으로 추정,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97%에 달함.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부담 비중이 크며(67%), 일반회계사업이 많고(97%), 법정사업(99%)과 경상보조(9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복지분야 자체사업 설문조사 결과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실제 자체사업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체사업 운영은 대상 확대(79%)가 급여확대(21%) 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실제로 운영 중인 자체사업(2,378개)은 주로 노인복지사업(454개), 장애인복지사업(376개), 보육사업(265개), 빈곤정책(153개), 전담체계(95개)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방정부 복지재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및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의 부담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
- 시·군·자치구의 세수구조의 특징은 세입의 제약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복지세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체장의 성향과

협상 능력은 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지역 주민들의 예산 감시 능력 역시 최근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III. 정책제언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및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함.
 - 새로운 법 및 제도의 제안 및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의견수렴과정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의 정상화 필요
 - 중앙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함.
 -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시·도) 혹은 40일전까지(시·군 및 자치구) 차년도 예산을 편성수립하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시·도) 혹은 10일 전까지(시·군 및 자치구) 이를 의결해야 함.
 -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정이 12월 말경에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정부의 차년도 예산 수립에 차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원칙적인 검토 필요



연구보고서
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defining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김재호·이근재·이상호·조성규·최병호

I. 연구목적

- ▣ 지방교부금 확대나 국고보조율 인상 등 이전재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래의 미시적 제도 개편은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사회보장과 관련한 재정사업이 갖는 하방경직적이며 규모확장적인 지출 특성과 함께 다층적 정부구조에 따른 공급주체간의 복잡한 재정이전관계는 상호간의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요인임.
 - 지방자치 고유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고 사회보장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적절한 사무권한의 배분과 재정분담의 제도화가 요구됨.
 -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구체화된 배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잡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운영체계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빚어지고 있는 재정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 틀 내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국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별 예·결산 자료에 기초하여 각 행정주체의 사회보장지출 현황과 분담수준을 검토
 -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지출의 문제는 도시지역(특·광역시 자치구)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소년(기초노령연금 등)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 부문이 쟁점임.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비중-광역시도 본청 16.6%, 자치시 24.9%, 자치군 18.1%, 자치구 48.3% (13년도 예산개요)
 - 일반회계 세입의 사회보장지출 부양비율, 자치구 43.3%
 - 순지방재원의 사회보장지출 부양비율, 자치구 80.3%
 - 자치구의 사회보장기능이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는데 비해 자치구의 재원조달 능력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산정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세출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
- 실증분석결과 재정의존도가 높은 저개발지역(군단위)일수록 경제개발비 지출승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사회복지비 승수가 경제개발비 승수보다 높음.
 - 재정의존도가 낮은 도시지역은 경제개발비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에 비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SOC를 포함한 일정수준의 경제개발 관련지출이 요구됨.
 - 군과 같이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사회복지비 부담수준이 낮아 사회복지비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음.
 - 반면, 인구가 집적된 도시지역은 재정의존도가 낮고 사회복지부담수준이 높아 사회복지비 확대 여력이 적고, 세출구조조정의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임.
- ▣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실정법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법규범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분담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책임관계의 중첩성과 재정관계의 복잡성에 기인함.
-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보장사무의 성공적 수행과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기능배분과 이에 따른 개별법제의 정비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방분권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무배분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그 누구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형평’한 분담상태의 달성이 가능

- 집행책임과 재정책임의 주체가 동일할 때 그리고 그 사무가 정부 간 서로 독립적일 때 최종수혜자인 국민 또는 주민들은 그 전달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견제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 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제3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담구조 틀을 조성하는 지방분권이론의 실천적 한계를 살펴 보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합리적 기능배분 원리와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동책임영역을 최대한 축소, 국고보조사업 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현존하는 사회보장사무의 급여제공 형태별 사무조정 기준을 도출
 -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상 현금보조와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 보호시설 서비스는 국가책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시설) 서비스는 지자체의 책임영역이며, 그 밖의 현물보조와 보건의서비스는 공동책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효과를 시사함.
 - 정책효과 시사결과
 - 2013년도 보건복지부소관 144개 국고보조사업 17개 시도별 내역 기준 100% 국비 지원 사업 제외 128개 사업에 대한 책임영역 조정결과,
 -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1.1조원에서 1.7조원 감소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III. 정책제언

-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지원 대책은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을 전제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깊은 논의와 명확한 기준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Intergenerational Equity Problem in Seoul Welfare Financing and Its Improvement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황남희·김태은·김선희·김경민

I. 연구목적

- ▣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부담 및 수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넓게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좁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 그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의 내용을 밝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세대 간 형평성과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세대 간 형평문제의 철학적 탐구는 세대 간 의무 존재여부, 그 근거, 그리고 구체적 의무의 내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가 지난 몇 십 년에서야 활발히 되기 시작한 분야로 아직 확고한 기반을 못 세우고 있음.
- 기존의 세대 간 의무 존재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차별성에 입각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의 연구가 서구에서는 활발하나 동양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차별성에 강조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공동체나 선조의 유산에 대한 의무로서 접근하는 방향이 더 쉬울 수 있음.
- 구체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밝히는 방향으로 개인에 대한 영향을 근거로 하는 개인-영향 원칙의 방향이 있음.
-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논란점이 있지만 앞의 여러 근거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의 의무는 존재하고,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는 입장이 가능하겠음.

- 사회보장에서의 순기여라는 세대 간 형평성 척도와 비형평성최소화, 최대비형평성최소화, 순기여최소화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형평성의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이에 따르면 기존의 통상적인 재원조달에서의 형평성 연구문제를 직접 적용 못하고 먼저 사회보장에서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의 상태를 찾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내용을 밝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야 함.
 - 본 연구는 선형모형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함.
- 기존 사회보험의 이론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발생의 조건을 부과방식의 재정, 노년인구로의 소득이전 구조, 출생률이나 출생수의 감소로 명확히 밝히고,
 -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해 세대 간 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함.
-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모두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의 현황과 전망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 <현황> 공적이전 순기여, 사적이전 순기여, 전체 순기여가 모두 음수로서 현재세대 모두 순혜택을 보고 있음. 이는 세대간회계의 제로섬원칙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불균형 상태임.
 - 현재 세대에서 사적이전은 줄어들어 왔고 공적이전은 증가해 왔음. 전체적으로 공적이전의 증가가 사적이전의 감소보다 커서 전체 순기여는 음수임.
 - <전망 여건> 미래로 갈수록 주요 사회보장 공공제도의 급여와 공공부분의 연령별 순기여는 노년층에 유리하게 발전하여 세대 간 형평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사적 순기여의 연령별 전망에 있어서도 양인 사적순기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음수인 순기여 부분에서 유아청소년 쪽은 커지고, 노년층 쪽은 작아지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미래 전망> 전망을 보면 공적 순기여, 사적 순기여, 전체 순기여 모두 음수로서, 현황과 함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제로섬원칙에 의하면 현세대와 2111년까지의 세대까지는 모두 순기여가 음이므로, 이후의 세대에서 이러한 부담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시나리오의 민감도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사회보장에 대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본 연구의 추계자료에 적용해 보면 현재의 불균형은 기존의 자료에 입각한 장기간의 완만한 시나리오로는 전혀 회복이 안 되는 수준임.
 - 비현실적인 규모의 지출에 대한 삭감과 부담에 대한 증가를 동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한

시나리오에 한해서 불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음.

III. 정책제언

- ▣ 전체적인 시사점은 비형평성최소화, 최대비형평성최소화, 순기여최소화 등의 형평성의 개념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의적인 우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택은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임.

 -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요시 한다면 비형평성최소화가 보다 적합함.
- ▣ 재원조달 정책변수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적립금> 적립금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각 목적함수의 기능을 더 잘 실현시킴.
 -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불변보다 가변의 경우가 형평성을 추구하는 각 목적함수의 기능을 더 잘 실현시킴.
 - <보험료> 보험료(혹은 조세)는 선형모형 최적화로 나타내지는 형평성의 개념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됨.
 - 대부분 형평성의 개념에 상응하는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명확함.
 - 지출증가는 순기여의 악화와 함께 보험료를 더 급격히 증가시키게 함.
 - 순기여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이 증가하면 보험료는 낮아짐.
- ▣ 기타 종합적으로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

 - 최소비형평성최소화는 고통분담을 통해 최약자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외에 그 외의 세대들의 처지를 가능한 개선시키는 작용을 함.
 - 적립과 본인부담을 같이 사용하여 형평성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음.
- ▣ 정책수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방향

 - 연구에서 밝힌 조세의 연령별 프로파일을 보면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강한 유자의 모양을 보여 노년예로의 소득이전에 의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책 수단으로서 소비세보다 적합하지 않음.
 - 소비세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노년층의 부담이 늘고 있어 세대 간 형평 제고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



연구보고서
13-38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Prevalence of Conflicts and Social Pathologies at Individual Level and
Counter Measures in Korea

연구책임자 | 이상영
공동연구자 | 정진욱·송태민·손명구·김영택·한소현·박형민·채희란·최지희
고슬기·박가영

I. 연구목적

- ▣ 개인 및 사회단위에서의 갈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둬.
 - 갈등 및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양자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함.
 - 가족,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갈등이 자살이나 중독,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갈등 및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갈등 및 사회병리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조사시점 이전 3개월 동안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8.9%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3개월 동안 개별 가족이 평균적으로 경험한 갈등요인수는 3.4개였으며, 4개 이상의 갈등요인을 경험한 경우도 42.5%에 달하였음.
 -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갈등원인은 성격차이로, 최근 3개월간 경험률이 43.9%였으며, 가치관 차이 38.4%, 의사소통상의 문제 34.6%, 경제적 문제 3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가족 내 갈등요인 중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신체적 학대·폭력, 가족 구성원의 외도, 취업·실업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노부모 부양문제 등으로 나타났음.

 - 해당 갈등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 학대·폭력 65.5%, 가족구성원의 외도 63.9%, 취업·실업문제 60.6%, 가족 내 환자간병 문제 53.8%, 가족의 건강문제 51.3%, 노부모 부양문제 42.2% 등이었음.
- ▣ 가족갈등을 많이 경험한 집단일수록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흡연이나 음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행태를 가진 비율도 높음.
- ▣ 직장 내 갈등조사에 따르면, 조사 이전 3개월 동안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직장 내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근로자가 80.9%로 나타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경험하였거나 평소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수는 총 26개 중에서 평균 약 8.7개였으며,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58.7%가 경험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부과 받는 경우로, 근로자의 57.6%가 경험하였음.
- ▣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은 해당 근로자의 우울 증상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울증상 고위험군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는 약 13.2개로서 정상군의 8.3개에 비해 많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는 정상군에 비해 약 3.7개 많음.
 -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갈등·스트레스 요인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군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 갈등·스트레스 요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가족 및 직장에서 갈등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우울증상이나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음.

 -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 없다'는 응답이 61.3%를 차지하였음.

III. 정책제언

- ▣ 갈등은 어느 일방에서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갈등은 상대적 개념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쌍방, 또는 해당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등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우울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 개인을 둘러싼 동료집단, 가족 등과의 갈등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진단을 기초로 특정 개인뿐 아니라 갈등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함.
- ▣ 기존의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문제에 개입할 수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신건강프로그램에 갈등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갈등관리에 대해 일정한 고객이 확보되는 단계에 가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 ▣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단위 갈등관리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민간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따르는 스티그마를 해소하고, 가족 내 갈등이나 이웃과의 갈등은 물론 가벼운 정신적 문제만으로도 주민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함.
- ▣ 갈등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함.

 - 갈등과 관련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가는 물론 일선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ing and Enhancing Local Social Security

연구책임자 | 김승권
공동연구자 | 정민자·김연우·이소라

I. 연구목적

- ▣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균형적 복지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 과정을 고도화하는 목적을 가짐.

II. 연구내용

- ▣ 지역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개요,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현장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분석
- ▣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의 개요
 - 전달체계 개편 모형별 매뉴얼 개발
 -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모형, 부분거점모형(도시형), 부분거점모형(농촌형)
- ▣ 광역 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
 -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
- ▣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역사회보장 관련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나홀로 아동의 가족 현황
 - 유관기관들의 현황,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 내용, 전달체계 분석
 - 아동의 24시간 사례분석
 - 지역사회중심 유관기관 전달체계 구축 방안

III. 정책제언

- ▣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지역사회보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강화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과 확산의 지속화 등
- ▣ 센터 운영의 발전방안
 -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보강
 -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 종합화 등



의(醫)-한의(韓醫) 공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Medical Unification Pla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연구책임자 | 윤강재
공동연구자 | 김동수

I. 연구목적

- ▣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인 한의과(韓醫科)를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면서, 면허 제도에 의해 지역간 상호배타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복진료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영역간 교류·융합 경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의-한의 전문직역간 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한 신뢰하락과 사회적 부담 증가
- ▣ '의료일원화(醫療一元化)'의 관점에서 의-한역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설정과 중장기적 공생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에 기여

II. 연구내용

- ▣ 의료이원화의 역사와 의-한의 업무 영역 구분에 대한 고찰
 -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한 의료이원화 체제 성립 이후, 지역간 면허의 배타성과 업무 한계를 규정
 -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허용된 면허의 범위를 두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
 - 우리 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기준으로 '행위의 학문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CT, MRI 등) 사용 허용 여부, 의사의 IMS 시술, 천연물신약 처방권 등의 문제에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 해외 사례
 - 전통의학의 수용 형태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 연구
 - 중국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중국은 서의사(西醫師)와 중의사(中醫師)가 상대 지역의 행위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통합형(integrated)’ 체계를 운영하며, 중서결합의(中西結合醫)라는 별도의 통합의학 인력제도를 운영

– 일본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일본은 전통 의학을 국가의 공식 의료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되, 의과대학의 교육내용 및 한방전문의(漢方專門醫), 민간 제약업체의 활발한 한약제제 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용인형(tolarent)’ 의료일원화체계를 운영

– 대만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일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학교육 및 면허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완전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중면허, 상대 시술 허용 등에서 유연한 체계로 운영

- ▣ 기존의 의-한의 일원화 방안인 2원적 1원화, 3원적 1원화, 4단계 통합방안 등의 주요 내용과 방안별 장단점 제시

III. 정책제언

- ▣ 중장기적으로 의-한의 직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의료일원화 체계’ 제시

- ▣ 중장기 직역체계 운영의 원칙

- 의-한의 직역간 상호 이해 제고 선행: 의료계, 한의계, 정부의 상시적인 논의구조를 정립하고 제도 부문과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진전문병원’ 지정 및 ‘협진 중점질환’ 지정
- 한의학의 미래지향적 포지셔닝 설정: 과학기술과 현대 의학을 활용한 한의학 성과의 근거 마련과 경쟁력 제고
- 면허체계에 앞서 교육체계의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의료일원화

- ▣ 의료일원화 방안으로서 ‘3원적 1원화’ 제안

- 통합준비기: 공동논의기구 운영, 협력진료 강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상호교육 활성화
-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기: 일종의 과도기를 통해 통합준비기의 정책 성과 평가
- 통합추진기(교육체계 통합): 기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존치하되, 통합의학 과정을 신설하고,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배타성을 일부 완화하여 학술적 목적에서부터 상대 직역의 진료행위를 허용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황나미·이철수·이혜원·유은주·김양희·김병욱·김태은

I. 연구목적

- ▣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아사망률, 아동 영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북한 격차는 점점 증가함.

 -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통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음.
-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방안이 먼저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통일한국사회보장포럼 운영을 통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는 기존 제도중심 연구가 남북한 양자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업을 외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임.
 - 이러한 논의가 남북한 각각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됨.

-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조관할 수 있도록 함.
- ▣ 다음으로 보건분야의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음
 - 먼저 진정한 남북통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남북 통합에 보건의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
 -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남북 간 차이점을 도출하고, 건강수준을 남북 간 비교분석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 될 과제를 제시
 - 다음으로 북한보건의료와 건강을 다루었음.
 - 주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세 가지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 무상 치료제의 퇴색이 다루어진 후 건강과 관련된 낮아진 서비스 질과 모성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가 제시됨.
- ▣ 이어서 구체적 사회보장분야로서 남북한 장애인 정책이 다루어짐.
 - 국제적으로 현재 강조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시
 -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징, 장애인 고용서비스, 남북 장애인 제도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
- ▣ 다음으로 북한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식량관련 주제를 다루었음.
 - 식량난과 복지의 관계를 북한식량전달체계 현황, 북한 식량난과 주민영양실태,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통해 제시하고,
 -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과제와 남북통합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 마지막으로 북한의 신체왜소 문제를 경제적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강제적 보편적 복지 제도 운영의 결과로 보는 '북,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를 다루었음.
 -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발생요인을 제시하고,
 - 북한에서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푸코의 몸에 대한 권력이론을 제시함.
 -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주민건강 문제를 북한과 동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 이러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식품 저소비의식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III. 정책제언

- ▣ 먼저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 및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비교분석을 위한 틀을 사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달성됨.
 - 특히 국가, 기업, 개인 및 가족 삼자 간의 사회복지 책임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북한의 2층체제와 남한의 3층체제
 - 그리고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훈이라는 제도별 구분과 상대적 중요성은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중요한 틀이 된다고 생각됨.
- ▣ 다음으로 상기한 거시-구조적 틀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제와 제도별 운영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제도별, 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필요로 함.
- ▣ 셋째로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 넷째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조치(예를 들면 시장의 역할 등), 교육, 신분이동, 노동, 식량사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 다섯째로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하더라도 전제되는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추진단계에 따라 그리고 선택된 사회보장제도의 커다란 재편 방향에 따라 제도별 재구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을 명시하고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커다란 틀을 고려하여 구성 제도별 연구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 여섯째로 북한의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산주의에서 개방 자본주의로 전환한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수시보고서
13-08

국민대통합 및 추진전략 연구

Social Cohesion in Korea : Vision and Strategies

연구책임자 | 노대명

공동연구자 | 이현주·강신욱·은재호·박재근·전지현

I. 연구목적

- ▣ 사회통합은 지난 십 여년 간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화두이자,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라는 의미를 가짐.
- ▣ 이 연구는 현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통합위원회의 주요 사업과제 등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위원회 등의 발족시점에서도 사회통합정책의 종합계획과 추진전략, 조직구성 등을 제안한 경험이 있음.

II. 연구내용

- ▣ 지난 정부가 운영했던 사회통합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책제안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할 대통합위원회가 참고할 근거자료 제시
- ▣ 우리사회 사회통합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사업과제와 연구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 이는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제안
- ▣ 국민대통합을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안: 그 내용은 ①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치의 생성, ②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관리를 통한 갈등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③ 국민통합을 위한 연구와 정책평가체계 구축, ④ 국민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체계 개선
- ▣ 국민대통합위의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제안: 그 내용은 ① 위원회의 법적 위상, ② 위원회 조직체계, ③ 주요 업무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

- 국민통합위원회는 ① 정책평가분과, ② 통합가치분과, ③ 갈등예방조정분과, ④ 국민공감분과 등 네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

III. 정책제언

- ▣ 현 정부는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사회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단계적인 접근
 - 근거중심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정책평가를 강화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
-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연구책임자 | 정경희

공동연구자 | 염주희·황남희·김정석·이금룡·오신휘

I.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보고, 제한된 제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음.
 - 2010년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50세 이상 7,628명)를 활용하여 4개영역(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에 각각 4개의 개별지표를 확정된 후
 -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삶의 질 점수에 기초하여 5개로 유형화하였음.
 - 두 번째로는 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2009년도)를 분석하였으며
 - 세 번째로는 다양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

II. 연구내용

- ▣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삶의 질이 하위 20%에 속하는 규모가 50대는 5.3%에 불과하지만 60대는 13.0%, 70대 32.0%, 80대 이상 54.4%로 큰 차이를 보임.
 - 경제, 건강, 사회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유형5) 규모도 각 연령

군별로 비교해보면 각각 11.1%, 28.3%, 53.4%, 72.3%임.

- 영역별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시점은 상이하게 나타났음.
 - 『가족·사회관계』는 특히 80대 이상에서 그 수준이 낮은 반면 『경제상태』 영역의 삶의 질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약 10점 정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인 후, 다시 60대와 70대에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70대 이후는 큰 차이가 없음.
 - 『사회참여』의 경우는 50대와 60대의 차이가 10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 후 60대와 70대, 70대와 80대 이상은 모두 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관심을 둔 4개 영역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작동하고 있음.
 - 건강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중·노년층의 경제영역의 삶의 질은 그들의 직업력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중·노년층은 그들이 생활해온 성장기와 청장년기의 누적적인 경험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남녀차별적 문화와 관행으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의 차이가 크며
 - 이들 대부분의 청장년기가 우리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물질적 안전이 우선시 되던 시기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 그 결과 중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낮음.

III. 정책제언

- 정책방향성 설정
 -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또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요구됨.

▣ 3가지 관점의 정책적 개입의 우선 집단 설정

- 첫째, 삶의 질 종합수준이 낮은 대상(삶의 질 하위 20%)을 정책개입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 둘째,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여 유형5 또는 더 협의로 소득, 건강, 사회참여 모두 하 수준인 유형 5-4를 정책적 우선집단으로 설정하거나,
- 셋째, 문제 영역별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음.
 - 소득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적 개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이 경우는 영역별로 그 수준이 저하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A Study of Demand Estimation and Reorganization of Provision System
for Elderly Welfare Service in Response to an Aging Society

연구책임자 | 이윤경
공동연구자 | 염주희·이선희

I. 연구목적

- ▣ 급속한 고령화율 및 노인인구 양적팽창과 같은 인구구조와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안 마련 및 방향성 설정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집단의 특성 변화 및 관련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를 야기
 - 효과적인 공급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및 공급체계 진단과 수요예측 실시

II. 연구내용

-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서비스의 형태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년기 기능악화로 인해 유발되는 보호서비스와 권익보호서비스,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원되는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서비스로 구분 가능
 -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간 세분화 및 전문화에 수준 차이 존재
-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은 노인인구수 및 노인인구 구성 특성에 따라 다르며 향후 15년 내 급속한 양적 팽창 예상
 - 향후 노인인구의 학력수준 상향으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노인인구수 증가와 관련하여 기능제한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노인인구 소득분포와 관련하여 집단간 양극화 경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
 - 정책적으로 베이비부머 욕구에 대한 대응 및 노인인구수를 고려한 보호서비스 확대 필요
- ▣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충분성과 관련하여 노인보호 및 노인 사회참여서비스 영역간 차이 발생
 - 노인보호서비스의 효율성 및 적합성 측면에서 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간 재조명 필요
 -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서비스의 효과성 측면에서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공급량 확대 필요
- ▣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나 지역규모별 상이한 양상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간 존재 및 상호교류를 통한 서비스 조정 실시
 - 농어촌의 경우 취약노인이 밀집하였으나 인프라 구축의 미흡으로 서비스 및 자원제공에 있어 한계 발생

III. 정책제언

- ▣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적 제공과 관련하여 유사서비스 조정 및 통합과 사례관리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포괄지원시스템 시범사업 도입 논의
- ▣ 노인복지서비스 양적확대 및 질적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초기 접촉지점(in-take)구축, 유사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조정 및 통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조정, 서비스 수요전망에 따른 공급확대와 관련한 정부 노력 필요



연구보고서
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

Reform Plans of Public Pension from Perspective of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연구책임자 | 윤석명
공동연구자 | 류건식·우해봉·이정우·Takayasu Yuichi
Ismo Risku·남효정·서희정

I. 연구목적

- ▣ 제도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 제도별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저출산, 인구고령화, 저성장 추세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제시

II. 연구내용

- ▣ 상이한 소득수준 및 연령층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들의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적합성 검토
 - 노후소득보장관련 실태분석 자료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의 연구』의 실태보고서 심층 분석
- ▣ OECD/DELSAC Committee, OECD Social Policy Working Party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관련 논의 활용
- ▣ 개별 제도 및 전체적인 제도 설계상에서의 적정성 검토
 - 개별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를 연관시켜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수준 추정
-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마련
 - 외국 유사 사례에 기초한 공적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제시

III. 정책제언

- ▣ 우리나라 노후준비 실태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획일적인 제도가 아닌 다양한 수단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빈곤층, 그 중에서도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순수 자영자와 일용자 등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함.
- ▣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
 -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하는 새로운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의 틀은 유지한 채,
 - 수급대상자 범위 및 급여수준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정치적·재정적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국민연금의 경우
 - 약 76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할 필요성 제기
 - 적기에 보험료 인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집단은 영원히 ‘저부담·고급여’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후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이미 적자 보전금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는
 -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시하였음.
 - 유용한 해외 사례로 2015년 시행 예정인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음.



연구보고서
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Policies for Poverty of Elderly Women

연구책임자 |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 문미경·최인희·석재은·노혜진·김혜원·정지연·양아름

I. 연구목적

- ▣ 여성노인빈곤의 특성을 파악함.
 -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빈곤이 중요한 이슈가 됨.
 - 이 중 여성노인의 빈곤은 다른 집단의 빈곤보다 더 심각하지만, 여성빈곤노인의 특성은 잘 파악되지 않음.
- ▣ 여성노인빈곤 감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와 같은 다양한 노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실태를 밝힘.
 - 심층면접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추적함.
 - 65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에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
 -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따라 빈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힘.

II. 연구내용

- ▣ 젠더 시각에서 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노인의 소득원으로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 개인연금 등을 파악
 -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사각지대의 격차 발생

- 18~59세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80만명 정도 적음.
-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남녀 각각 79.5%, 59.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7% 낮음.
- 공적연금 적용대상 규모는 남성 1,287만명, 여성 908만명으로 387만명정도 차이가 남.

▣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와 원인 파악

- 여성노인은 연령, 성별, 교육 등에서 배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음.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서 취약한 상태임.
 - 빈곤여성의 경우 전체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낮음.
 - 빈곤여성은 배우자 없이 독거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할 위험이 높으며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역시 남성노인보다 큼.
 - 남성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을 보였고, 여성노인은 45.9%로 남성노인에 비해 약간 높음.
 -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노년층기에 해당하는 75~85세가 가장 높음.
 - 전체 노인의 빈곤률 비율은 15.8%이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3.5%높게 나타남.

▣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여성노인의 내부집단별 빈곤현황을 살펴봄.
 -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일수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
 - 학력, 건강상태 등 인적자본요인이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함.
- 생애과정 중의 경제적 어려움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짐.
 - 저소득 직업, 보증과 사업실패, 가족의 질환, 배우자의 경제 미부양, 경제부양자의 사망, 부족한 노후준비, 가난의 대물림 등이 여성노인빈곤의 원인으로 나타남.
 - 모든 면접대상자들이 최저 수준의 생활만이 가능한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 왔음.
 - 많은 경우 직업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해 왔음.

III. 정책제언

- ▣ 여성노인 관점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 여성의 돌봄노동을 보상하고 성인지적 공적연금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1인1연금 체계를 확립해야함.
 - 저소득 노인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 ▣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빈곤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노노케어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정보에 취약한 여성노인에게 일자리 정책 홍보와 지원강화
- ▣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통해 여가 및 보건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 함.
 - 노인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돌봄 강화
- ▣ 주거생활지원 강화
 -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여성노인의 주거개조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강화



연구보고서
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ituation of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and Policy Tasks

연구책임자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자 | 조미형·한태영

I.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II. 연구내용

- ▣ 농촌 노인일자리의 이론적 배경
 -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 농촌 노인일자리의 개념 정의
 - 노인일자리 관련 이론
- ▣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 노인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
- ▣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
 -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 ▣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 국내외의 우수 사례

- 외국의 우수 사례
- 정책적 시사점
- ▣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과제
 - 기본방향
 - 정책과제

III. 정책제언

- ▣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같은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과 예산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 ▣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 추진
 - 농촌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군) 단위에서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참여 실태, 수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회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촌노인 대상의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면접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 참여자의 급여 인상 및 사업 유형별 급여 차등화
 -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 강도, 근로시간, 전문성 등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음.
- ▣ 농촌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추진
 - 농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전담인력 등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농업의 특수사정을 감안
-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좀 더 개발
- ▣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 농촌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과 홍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신문, 노인 관련 모임, 농업인 교육 및 대회, 이장단회의, 지역소식지 등을 충분히 활용
- ▣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많지 않으나 사업영역이 유사하여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보수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근무기간도 연중(12개월)으로 연장하여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개선과제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중산층의 사회공헌 일자리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처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순위에 따라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남성은 수위나 경비직, 여성은 청소직에 집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장형 노인일자리 경우에는 사업단 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3-31-2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Older Adult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자 | 이윤경
공동연구자 | 염주희·황남희·양찬미

I. 연구목적

- ▣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년교육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
- ▣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 되고 있는 노년교육의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정책검토, 실증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노년교육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해결 방식을 논의하였음.
 - 특히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방식의 노년교육이 전개되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을 예측하였음.

II. 연구내용

- ▣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고령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 중년층(베이비붐세대와 50대 후반)세대의 약50%는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음.
 - 중년층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교육 내용에 여가와 취미관련 교육이 건강관리 교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교육의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평생교육 기관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강사의 질과 교육기관의 수준 및 질과 같은 프로그램 질적 측면이 매우 높게 나타남.
- ▣ 평생교육 미참여 요인은 시간부족, 건강상이유, 욕구없음, 심리 경제적부담, 환경미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 남성의 경우 시간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고령화 연구패널을 통해서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에서 2010년 3.5%로 하락하였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0~79세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결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월평균 용돈,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수준, 취업여부, 단체활동참가 수, 자원봉사 참여여부임. 여성일수록,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하’를 기준으로 ‘중’ 또는 ‘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기준으로 고졸이상), 단체활동 참가 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도 증가함. 한편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함.
 - 거주지역과 종교유무는 고령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중년층에서 평생교육의 참여결정요인으로 확인됨. 중년층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함.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앞서와 동일하게 월평균용돈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는 평생교육 지속참여에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중고령층의 경제수준 및 사회참여는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확인됨. 즉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함.
 - 자녀동거여부도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함.
- ▣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노년교육 관련 시사점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많은 사람이 골고루 노년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상임.

- 둘째, 시간에 따라 노년교육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시대가 바뀌어서 컴퓨터, IT,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기기 사용에 관한 수요가 늘어난 것과 참가자들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관심도가 바뀌었다는 데에서도 기인한 것임.
- 셋째, 고령자들은 더 이상 고령자만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일반성인교육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함. 연령대별로 한정지어 교육을 제공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III. 정책제언

- ▣ 노년교육의 관점 확립: 노년 교육이 전반적으로 다채로워지고 있음. 이때 연령 통합적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아닌 노인에게 주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노년교육을 최적화하여 제공할만한 주체가 특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노년교육에 대한 공급주체가 다양화 되고, 경계가 모호해 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은 복지 또는 교육의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관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 노년교육의 목적 확립: 노인 교육은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을 발견 또는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나타남. 이러한 현행 방식의 인적 자원, 공간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들이 원하는 교육 목적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노년교육 정보의 접근성 확보: 지역사회 내 자원공유가 가능한 평생교육 정보가 제공되면 고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 향후 노년교육의 방향성: 향후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욕구와 특성은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예상할 수 있음.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현 노인세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의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만들기

- 가임기 여성 임신전 출산건강관리 지원 방안 연구
-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 효율화 연구
-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자녀 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The Status of Preconceptional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 | 이상림
 협력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연구목적

- ▣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임신 전 출산건강 지식에 관한 실태분석과 이것이 실제 출산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들의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방안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
- ▣ 더불어 이상결과 출산의 주요 위험군인 고령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 임신부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화의 적절성 및 대응정책 방안 등을 제안
 -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의 출산결과와 질환측면에서의 위험성 여부 및 특이성을 분석하고, 위험 및 고령 임신부의 기준 및 정책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분석

II. 연구내용

- ▣ 임신 및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기존 정책 분석
 - 대부분의 정책 사업들은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후에 대처하는 출산 후 건강 이상아들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임신 전 출산건강 준비행동 실태 분석
 - 임신 전 임신건강 준비 행동은 긍정적 출산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임신 전 엽산제 복용, 임전 건강검진, 그리고 임신 위험요소 노출 회피 등의 출산 준비 행동은 부모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따라 다르게 분포

-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적 자원이 많으며, 비직장생활을 하고, 초산인 경우 임신 준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청소년 및 미혼여성은 부인과 질환과 관련하여 병의원 방문을 매우 꺼리고 있는 상황
- ▣ 임신 전 출산건강 지식 실태 분석
 - 임신건강 지식은 임신준비행동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 요인
 - 임신 전 임신 건강 관련 지식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여, 출산 준비 행동 및 출산결과 악화의 경향을 만드는 주요 요인
 - 임신 전 임신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 습득은 인터넷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상담 기능이 제한된 병의원을 통한 지식습득은 매우 저조
 - 기형출산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임신 이전 및 임신 중 약물 복용과 관련 전문의의 상담 없이 약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 ▣ 임신 전 출산건강 준비행동 실태 분석
 -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임신성 자간증’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관련 질환율이 높음.
 - ‘유산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도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질환율도 높아짐.
 - 출산결과에는 산모의 연령이외에도 출산순위,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지역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고위험·고령 임신부의 기준 및 지원정책 관련 전문의 조사
 -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초산모’를 정의하고, 이들을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78.6%)의 전문의들이 동의
 - 임신부가 고령(35세 이상)이라도 ‘산전 진료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고위험이 아니다’(38.8%), ‘임신 중에 건강관리를 잘하면 고위험군이 아니다’(31.1%)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III. 정책제언

- ▣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임신 건강 관련 지식 및 인식의 개선과, 임신 건강행동 증진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 임신 건강 관련 지식 및 인식의 개선은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 정책을 포함
- 임신 건강 증진행동은 건강행동 장애요인 제거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정책과 자원 지원 정책으로 구성
- ▣ 고령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서 추가적 주산기 관리 지원 정책을 위한 제도 및 의료 환경 개선 필요
- ▣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
 -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생식보건 항목 포함
 - 고위험 고령 임신부 관련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
 - 임신 전(pre) 및 임신 간(inter) 진료 항목 건강보험 조정
 - 지역 산부인과 상담기능 강화 방안
 - 중고교 및 대학 기반 생식건강 교육 실시
 - 청소년 대상 산부인과 이용 바우처 제공
 - 인터넷을 통한 임신건강 정보 제공 및 인터넷 환경 개선
 - 가임기 여성 맞춤형 정보 제공
 - 고위험 고령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 고위험 고령임산부에 대한 고가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연구보고서
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Product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for Fertility and Childcare Statistics

연구책임자 | 도세록
공동연구자 | 오미애·신창우·이난희·신은숙·서문희·손창균

I. 연구목적

-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 연계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저출산 요인의 많은 부분이 자녀양육 부담에 기인함.
 - 출산행태 및 출산조절 파악에 중심을 둔 출산력조사는 보육에 대한 인식 파악에 부족함.
- ▣ 한국건사회연구원은 오랜 기간 수행한 출산력조사를 정리하여 통합 DB를 구축함.
 - 통합 자료를 활용한 지표생산과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
 - 그런데 조사연도별 조사설계 및 추정의 일관성 부족은 통합 자료에 조정이 필요함.
- ▣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4년과 2009년에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시설이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보육과 출산에 대한 인식 파악에 부족함이 있음.
- ▣ 따라서 출산력 통합 DB의 활용성 향상과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조사방법 제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 출산력 통합 DB 내용 검토와 시계열 분석을 위한 표본승수 조정
 - 통계 추정치 정도 향상을 위한 표본추출 방법 제시
 -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조사항목 제시

II. 연구내용

- ▣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조사활동 검토
 - 유럽국가의 출산력 조사와 뉴질랜드 보육조사 방법 및 내용 검토

- 미국의 출산관련 조사 및 조사자료 통합 방법 검토
- ▣ 출산력 시계열 DB 분석 및 조정
 - 출산력 시계열 DB 구성 내용 검토
 - 사후층화를 통한 표본승수 조정
 - 표본승수 조정에 따른 출산력 시계열 지표 변화 파악
- ▣ 출산 및 보육관련 조사 내용 및 방법 검토
 - 출산력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인구동향조사 내용 검토
 - 출산 및 보육 관련 통계지표 검토
- ▣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조사의 설계
 - 마스터 표본에 의한 표본설계 연계
 - 출산과 보육의 연계 조사항목 제시

III. 정책제언

- ▣ 출산력 시계열 통합자료 활용성 확산
 - 통계청 원시자료제공시스템(MDSS)에 탑재하거나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합 자료 제공
- ▣ 출산력 및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관리 강화 필요
 - 표본설계, 조사관리, 승수산출 등 조사관리 내용의 문서화 필요
- ▣ 출산력조사와 보육조사의 연계 방향
 - 두 조사의 물리적 통합은 어려움. 마스터표본을 통한 표본설계 연계, 공통 조사항목 개발, 항목 측정방법 표준화로 연계분석 기초 마련
- ▣ 출산·보육 지표생산 및 관리
 - 합계출산율(TFR), 연령별출산율(ASFR) 등 거시지표와 연동된 세부 지표체계 구축 및 관리



연구보고서
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nalysi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자 | 김은정
공동연구자 | 유재언

I. 연구목적

- ▣ 보육서비스 공급의 양적·질적 적정성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시설유형에 따른 양적 공급 현황과 수요 현황을 지역단위로 분석
 -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 기대수준, 만족도 등 분석

II. 연구내용

- ▣ 보육서비스 수급분석 문헌고찰
 - 보육서비스 시설 공급 추계 및 분석 문헌
 - 양적 시설공급 추계 및 효율성·효과성 분석 문헌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분석 문헌
- ▣ 보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변화 분석
 - 보육서비스 공급 정책 변화
 - 보육서비스 공급 변화
 - 2003~2012년간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 공급의 양적, 규모별 변화
 - 보육서비스 이용률 변화
 - 2003~2012년간 연령별, 시설별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률 변화
- ▣ 보육서비스 양적 수급분석
 - 지역별 공급 현황

- 16개 시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유형별 공급 현황
- GIS를 이용하여 시·군·구 별 어린이집, 유치원 유형별 분포 분석
- 읍·면·동 단위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분석
- 지역별 수급 분석
 -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정원 및 현원 분석
 -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대상 아동 추정 (만0세~만 5세)
 - 각 지역의 대상아동 대비 시설의 정원 및 현원 비율 분석
- ▣ 보육서비스 질적 적정성 분석
 - SERVQUAL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측정 척도 개발
 -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접근성, 적절성 등 7개 영역에 대한 척도 개발
 - 서비스 측정 영역에 대하여 중요도, 기대수준,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기대수준과 만족도 차이에 따른 GAP 분석
 -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따른 Importance-Satisfaction 분석

III. 정책제언

-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 2013년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상당부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국내 보육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시설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
 -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곳은 1.7%에 불과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유치원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5세 누리과정의 시행 및 보육비와 차등 없이 유아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유연성 확대

- 연령별 이용시설에 따른 분석 결과 0~2세의 경우 '운영시간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영아의 시설보육 현황 제고

- 지난 10년간 만 3~5세 유아보다 만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제고 필요함.
 - 가정보육 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시설보육 시 지원되는 보육료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남은 없는지, 보육료 지원정책의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됨.

▣ 교사의 자질 강화 및 처우개선

- 본 연구결과 수요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영역은 상당수가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질강화를 위하여 자격기준의 개선과 함께 자격심사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적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됨. 자격기준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교사들이 공급될 것으로 판단됨.



연구보고서
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n Child Care Support

연구책임자 | 신윤정
공동연구자 | 고제이·이지혜·윤자영

I. 연구목적

-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면하여 국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서 평가함.
 -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파악함.
 - 다자녀 가정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 감면을 가져다 주었는가 평가하기 위하여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비교 분석함.

II. 연구내용

- ▣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함.
 -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수당을 비롯하여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 등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까지 포함하였음.
 - 서비스 지원 정책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와 각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시간 지원 정책은 육아 휴직 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휴직자들의 소득 대체율의 변화를 가지고 평가하였음.
 - 분석 자료로 한국복지패널 2007~2011년도 자료를 활용함.

-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 양육 가구가 실제로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하였으나 세제상의 혜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현금 지원을 받고 있었음.
 - 영유아 1인당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더 높지 않았음.
-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총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 보육교육 시설 이용에 대한 지출 비용은 감소하였지만 영유아 양육 가구가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임.
 - 소득 집단 간 보육교육비 지출 격차는 상당 수준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격차 완화는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구의 순 지출 증가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여 육아 휴직자의 소득 보전에 진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액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으며,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저조한 남성 육아 휴직 사용율, 휴직 급여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음.

III. 정책제언

-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 자녀 보육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 그리고 상업화된 보육교육 시장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임.
 - 현금 혹은 서비스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혹은 맞벌이 부부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 생활 양립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수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수당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 연금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사회 보험 체계 하에서의 급여가 자녀 수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육아 휴직 제도가 실제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수급권 강화 그리고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 2013년도에 보육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체 0~5세 아동으로 확대되었는바 2013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구축되는 대로 분석을 업데이트하여 최근의 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The Changes in the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연구책임자 | 김유경
공동연구자 | 진미정·송유진·김가희

I. 연구목적

- ▣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1970~2010년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가구·가족의 변화가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 등 전반적인 가족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
 -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가구·가족의 변화를 전망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함.
 - 변동추이와 가족영역별 변화 양상, 선진국 사례 및 가구·가족 변화전망을 기반으로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II. 연구내용

- ▣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등의 특징을 보임.
 - 가구주의 고령화, 이혼·별거로 여성가구주 및 미혼 가구주의 지속적 증가로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의 변화가 예상됨.
- ▣ 가구·가족의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함께 초혼연령 상승, 이혼 및 재혼의 확대로 가족주기의 전기단계(가족형성기~축소기)는 단축되는 반면, 후기단계(축소완료기~해체기)는 점차 연장됨.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부부간 성역할 분담이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전통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 사회변화에 신속적인 대응이 어려움.
-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을 비롯하여 재생산 및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로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을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높아짐.

▣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 선진국의 가족변화는 혼인적령인구의 감소, 자발적·비자발적 비혼인구 증가, 혼인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인구증가 등과 관련 높으며, 부부(자녀포함) 및 1인 가구가 4/5를 초과함.
- 선진국에서는 가족·가족변화에 따른 개인화 현상인 지배적으로 가족영역에서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노인에게는 돌봄의 공백을 야기함.

▣ 가구·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분석

- 결혼의 당위성 약화와 함께 동거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허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미래 결혼형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 미래 가족형태는 동거,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 가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분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족 등이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이며, 미래 가족관계는 부부중심에 집중됨.
- 미래 가족기능은 정서적 기능 강조, 자녀돌봄 기능은 유지되는 반면, 노부모 돌봄기능은 축소되어 사회와 정부 부담 증가가 예상됨.

III. 정책제언

▣ 가족변화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마련

-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양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양육자 가족모델 지향의 가족정책을 모색하고, 자녀양육비 담보 및 상담, 통합적 사례관리 등을 확대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함.
- 다양한가족의 욕구와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가구·가족 현상 파악을 위한 통계 및 조사도구를 마련함.

▣ 가족변화관련 법·제도 개선

- 1~2인가구 등 다변화되는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별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관련 인프라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가족형성 약화 및 주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

- 미래지향적 가족문화 모색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보상 확대,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및 생활양식 등을 강화함.
- 결혼의 지연과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정책의 재검토 및 출산 저해요인을 조사·분석하고, 결혼문화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됨.
-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 부양인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 가족주기확대에 대응하여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고,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하는 한편, 가족응집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지원체제 마련,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 가족돌봄 및 부양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안정화 제고

- 소가족·핵가족시대에 자녀양육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돌봄 노동의 성별공유 인식을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노부모 돌봄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요구됨.

▣ 가족해체와 미래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모색

- 가족해체 최소화 및 취약화 예방으로 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해체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을 마련함.
- 소가족·핵가족화에 따른 다양한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공간 구조 개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



연구보고서
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Understanding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dentification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Korea

연구책임자 | 장경섭(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공동연구자 | 성미애·이재원

I. 연구목적

-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사회 문제를 가족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 모색
 - 가족의 부양 및 소득지원, 교육제도, 돌봄과 관련된 정책과 관행을 분석하여 문제점 진단
 - 정책과 관행 안에 제도화된 가족주의 전제나 가정의 문제점 분석
- ▣ 한국가족주의의 다양한 차원을 구분하여 이론 틀을 정교화하여 정치한 분석 시도
 - 가족주의는 이념적 가족주의, 상황적 가족주의, 제도적 가족주의 등 형성적 특질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는 개념임.
 - 다양한 차원의 가족주의가 상호 충돌하면서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힘.

II. 연구내용

- ▣ 한국가족주의의 문제점
 - 한국의 다양한 가족주의는 결과적으로 가족주의 내부적 모순, 개인과 가족 과부하성, 이념과 제도의 부정합성, 젠더와 세대 간 불공평성 등을 배제함.
 - 특히 다양한 정책과 관행 속에 내재된 제도적 가족주의의 문제점은 소득보장, 교육, 돌봄 등 가족의 기본 생활 영역에서 잘 드러남.
- ▣ 부양 및 소득보장 제도 및 관행
 - 제도적 가족주의의 보편성은 가족 부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규범 및 공적 소득지원정책에 반영되어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에게 불리하게 설계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부양책임이 생활유지적 부양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공적 소득 지원정책의 불충분성은 가족 산 사적 이전으로 보충되고 있음.
- 여성의 개인적 수급권 부재,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 갈등, 노인 빈곤, 가족 불안정성 및 해체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함.

▣ 교육제도 및 관행

- 제도적 가족주의의 가족의존성은 의무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학부모지원제도에 반영되어있음.
 -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만 제도화되어있어 그 이상의 교육은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현행 입시제도는 학교나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필수화됨.
 -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봉사, 기부 등이 암묵적으로 요구되어 부담을 가중시킴.
 - 교육제도의 과도한 가족의존성은 교육비 부담, 학부모 역할 부담 등으로 양극화 심화, 자녀교육 부담과 출산 회피, 가족관계의 도구화 등을 초래함.

▣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관행

- 제도적 가족주의의 관행은 아동과 노인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나 관행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음.
 - 아동 돌봄에서는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장애아동 돌봄, 조부모 양육지원, 과학적 육아 관행에서 가족주의적 전제가 발견됨.
 - 노인 돌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정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효행장려 및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서 가족주의적 전제가 나타남.
 - 이러한 정책과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는 돌봄의 과부하성, 젠더관계의 비민주성, 제도적 가족주의의 다원성과 혼란을 초래함.

III. 정책제언

- ▣ 정책과 관행 속의 가족주의적 전제 극복
 - 정책 도입 및 실시 과정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족주의적 전제를 표면화하여 정책수립자들이 문제점을 주지할 수 있어야 함.
 - 제도의 지향점과 제도가 도입되는 토양, 즉 한국사회의 특성인 가족주의의 복합적 다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
- ▣ 제도 개선 및 재설계
 - 국민연금재도를 개인 단위로 재설계하고, 가입지위를 소득지위 중심으로 개편하여 여성수급자나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제도를 개선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극복함.
 - 의무교육기간 연장 및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고려한 사회투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균형적 지향점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 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자질향상 방안: 고령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과제
-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연구보고서
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Improving the Population Quality in Low Fertility and Aging Korea:
Policy Challenges for Birth Outcomes for Women of Advanced Maternal Age

연구책임자 | 이소영
공동연구자 | 임지영

I. 연구목적

- ▣ 고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실태를 파악
 - 산모의 고령이라는 연령이 출산결과(저체중 출생아 출산과 조산)와 관련이 있는지,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에 산모의 고령은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인지, 고령의 산모와 비고령의 산모의 출산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
- ▣ 궁극적으로 고령 임신부의 출산의 질을 높여 출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고령임산부의 출산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 고찰
 - 산모의 연령과 출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 Weathering Hypothesis 고찰
 - 산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소득, 교육 등)과 출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 Epidemiological Paradox 고찰
- ▣ 현행 고령임산부 관련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및 정책 파악
- ▣ 고령 산모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03, 2006,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통계분석

▣ 고령 임신부 심층 면접

-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이용하여 문항 설계
- 서울, 울산, 경기, 제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19명의 고령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

▣ 임신부의 정의와 기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및 제언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한 변형된 델파이 전문가 조사

III. 정책제언

▣ 고령 임신부를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신뢰할 만한 자료(database)의 구축을 통해 고령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임신 전부터 상담과 교육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엽산(folic acid)나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multivitamin with folic acid) 등을 임신 전부터 임신을 계획한 고령의 가임기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신 중에는 체계적이고 적합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고령 임신이면서 다른 위험 요소로 정기적인 산과 검진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고령 임신의 고위험 임신 차등화 추가 지원 제도와 같은 체계가 필요

-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교육과 상담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준전문가(para-professionals)로 이루어진 도우미 제도를 제안함.

- 출산 후에도 산후 검진을 보다 정밀하게 하여 관절통, 산후 우울증 등 고령 산모에게 수반되기 쉬운 증세 및 질환에 대해 검진 및 이상시 치료를 지원

- 고령 산모는 산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도움의 필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되 모든 고령 산모를 그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 ▣ 무엇보다 고령 임신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고령 임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 때 쉽게 치료하여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 이후 아이 양육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연구보고서
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opulation Projections

연구책임자 | 이삼식
공동연구자 | 이지혜·최효진

I. 연구목적

- ▣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계 방법과 가정을 채택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인구추계 간 비교분석이 의미가 있음.
- ▣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8개 국가를 선정하여 가정설정방법, 시나리오설정방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구추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출산력 가정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및 캐나다는 코호트출산율방법을, 프랑스, 미국 및 호주는 기간출산율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코호트출산율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본은 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혼연령, 비혼(생애미혼율), 이혼·사별·재혼 효과, 결혼출산력변동 계수 등 많은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출산율방법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템포효과(tempo effect)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가정에 반영하고 있고, 코호트요인 방법이든 기간출산율방법이든 과거실적이나 외국사례를 고위와 저위 가정을 설정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음.
 - 비교대상국가 대부분 출산력 가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가정(중위, 고위, 저위)을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단일가정을 채택하고 있음.

- ▣ 사망력 가정에 관한 분석 결과, 장래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기 위하여 과거추세에 외삽법을 적용하고 있음.

 - 한국과 캐나다는 Li and Lee모형을, 일본은 Lee-Carter모형을, 독일과 프랑스는 단순 추세선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목표사망률을 설정한 후 과거 추세와 연계하여 추정하고 있음. 미국은 성별 평균수명을 모형으로 추정한 후 UN모델생명표를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고 있고 호주는 성별 평균수명을 추정한 후 추세선을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고 있음.
 - 한국, 일본, 프랑스 및 영국에서는 초고연령층의 빠른 사망력 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한연령을 100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10세, 프랑스는 남성 105세와 여성 106세, 영국은 남성 100세와 여성 105세로 각각 설정하고 있음.
 - 대부분 국가는 사망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가정(중위, 고위, 저위)을 설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호주는 두 가지 가정(중위, 고위), 미국은 단일 가정을 설정하고 있음.
- ▣ 국제이동가정에 관한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일정기간의 이동 규모나 이동률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향후에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국은 연령별 이동스케줄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과 미국 및 영국은 내·외국인을 분리하여 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순국제이동을 이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이입과 이출로 분리하여 가정하고 있음.
 -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및 호주는 3개 가정(중위, 고위, 저위), 독일은 2개 가정(중위, 고위), 미국과 일본은 단일가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종별로 가정하고 있음.
- ▣ 인구추계 시나리오 설정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에 관한 가정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음.

 - 시나리오 수는 미국 1개, 일본 9개, 독일 12개, 호주 18개, 영국 21개, 한국과 프랑스 및 캐나다 각 27개 등임(국내이동가정과 연구가정 제외).
 - 모든 국가들은 중위가정 조합을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간주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인구, 최저인구, 최고고령화수준, 최고부양비 등 인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가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III. 정책제언

- ▣ 향후 우리나라 인구추계의 정도와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 고위가정과 저위가정 간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인구추계 결과의 불확실성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고위가정과 저위가정을 설정하는 기준 내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망력 가정은 2010년 추계 시 100세까지 상한연령(2005년 추계 시 95세)을 확대하였으나, 초고연령층의 사망률 개선 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국제이동 가정의 미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분리추계방법, 단기간 가정은 과거 실추치를 이용하고 장기간 가정은 이동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실성이 낮은 가정들과 비현실적이거나 의미가 없는 시나리오들은 제거하고 각 가정과 각 시나리오에 대한 당위성과 용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결과를 쉽게 해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인구추계의 발전을 위하여 인구추계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Focusing on Selected Areas

연구책임자 | 오영희
공동연구자 | 정경희·이삼식·이소영·오신휘·임지영·김경래·송리라

I. 연구목적

-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결혼·출산, 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 자료 구축
 -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화정책 설계의 기초자료 구축

II. 연구내용

- ▣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 ▣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특성
 -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경제상황
- ▣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 일반 특성, 경제상황 및 경제활동, 가족관계, 거주형태, 사회적 관계망, 건강상태,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지역사회 환경
-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 ▣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

III. 정책제언

- ▣ 제1차 지역추적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보다는 사례조사지역의 특성, 응답가구 및 중고령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함.
- ▣ 또한 만혼화 및 출산 행태의 관련 요인간 경향성과 상관성을 파악하여 조사가 축적될 수록 요인간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 분석에서 교육과 직업 및 가족관계가 만혼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사회현상과 출산력 간의 새로운 인과고리들을 발견
- ▣ 본 조사는 특정 사례지역에 한정되고 그 사례수가 적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추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

연구책임자 | 이진면 (산업연구원)
 공동연구자 | 한정민·김재진·이용호·김바우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나, 가계소비나 산업생산 등 미시 경제적 분석과 산업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
 -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구규모의 양적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인구고령화는 가구의 양적 및 연령별 구성을 변화시키고, 가계의 인구적 변화는 소비구조에 변화를 통해 산업별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파급과정을 인구고령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 연구내용

- ▣ 인구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한 분석·전망
 - 출산율과 평균수명, 총인구 및 연령별 구조변화에 대한 장기적 패턴 분석 및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특성을 파악
 -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속도와 장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등 주요기관의 인구구조 전망에 대한 분석
- ▣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가계의 중장기 소비구조에 대한 패턴 분석 및 중장기 전망
 - 산업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인 가계의 소비구조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

- 국내외 주요기관의 인구구조 전망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가구구조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이에 기초한 가계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전망
- ▣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전망
 - 산업별 생산 및 연관구조의 변화, 산업별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 및 전망을 실시
 - 인구고령화의 시나리오별 소비구조의 변화가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I. 정책제언

-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동시에 요구됨.
- ▣ 제조업 부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의료 및 보건, 대개인 서비스 등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 인구고령화는 경제전반에 진전되고 있는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개인서비스 등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인력 활용
 - 수출 주력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령층과 청장년층을 연계한 핵심 기술 보유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등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적 대응 요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A Study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연구책임자 | 최병호
 공동연구자 | 이삼식·하완탁·기재량

I. 연구목적

- ▣ 인구고령화와 통일은 우리의 큰 도전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의 가속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은 중요한 고려변수가 될 것이고, 남북통일을 대비해야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 이에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2100년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이 G7국가의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통일한국을 대비한 적정인구는 남북한의 경제발전, 복지수준 및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국력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함.
-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하였고, 8개 지표(표 참조)에 대해 G7 대비 비율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종합화하여 3가지 방식으로 국력지수를 산출함.

〈표〉 국력지수의 부문과 구성지표

	인구	경제	복지	국방
양적 지표	총인구수	GDP	복지지출총규모	국방지출총규모
질적 지표	생산인구비중	1인당 GDP	1인당 복지지출	1인당 국방지출

- 국력지수 측정 결과 1990년에서 2010년까지 남한 국력을 상승하고 있으나 북한 국력을 하락하여 남북한 국력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 경제 및 사회보장, 국방 부문을 연계하여 추계하였고, 남북한 분단이 지속되는 기준시나리오와 2가지 통일방식(점진적, 급진적) 시나리오 및 3가지 국력측정 대안을 고려함.
 -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시점은 2025년, 통일비용 발생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함.
 - 점진적 통일시에는 남한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남한 GDP의 연평균 1.2%를 통일비용으로 부담하고, 급진적 통일시에는 북한의 개발과 복지지원 등을 위해 남한 GDP의 연평균 4.8%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함.
 - 양 시나리오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기술수준은 별도 비용 부담없이 2100년 남한의 6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은 통일비용 발생기간 동안은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에 비해 높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급진적 통일이 더 높아짐.
 -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국력지수의 하락은 남한의 인구감소 작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2045년까지 급진적 통일에 비해 점진적 통일의 국력이 높은 이유는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국력하락이 북한 발전에 따른 국력상승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진적 통일의 국력이 점진적 통일 대비 높아지는 것은 남한 국력수준이 통일비용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북한 국력이 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통일 방식별 통일한국의 최대 국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적정인구를 추계한 결과 2100년까지 87백만 정도 증가해야 G7 평균의 60~70%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는 2045년 79.7백만명, 2100년 87.4백만명이고, GDP 규모는 2045년 3조 2,440억달러, 2100년 6조 6,696억달러로 증가하며, 2045~2100년 동안 G7 평균대비 국력지수는 방식에 따라 55~68%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는 2045년 79.9백만명, 2100년 87.9백만명이고, GDP 규모는 2045년 3조 814억달러, 2100년 7조 1,987억달러로 증가하며, 2045~2100년 동안 G7 평균대비 국력지수는 방식에 따라 53~61%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분단한국이 지속되는 상태의 남북한 인구를 비교해보면,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남한인구는 2045년 49.8백만명, 2100년 28.1백만명이고, 같은기간 북한인구는 26.4백만명, 24.9백만명으로 남북한을 단순 합한 인구는 2045년 76.2백만명, 2100년 53.0백만명으로 나타남.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의 인구는 2045년에는 3.7백만명 차이가 나지만 2100년에는 34.9백만명의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 인구대체수준(2.1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남한도 2025년부터 인구대체수준(2.1명)에 이른 후 유지해야 함.

III. 정책제언

-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남북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함.
 - 남한의 인구감소는 남한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향후 남한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강구가 필요함.
-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인구 증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시나리오별 북한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 모색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연구보고서
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Strategies in China, Japan and Korea

연구책임자 | 이삼식

공동연구자 | 김익기·최효진·杜鵬·陆杰华·奥山正司·高橋泉

I. 연구목적

- ▣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고려할 때,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한국인구의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 ▣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에 대한 기초자료 및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 연관성 규명에 대한 근거 제시
 - 정책적으로는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 등에 기여

II. 연구내용

- ▣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율(출산율, 사망률)의 변천과정은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 경험
 -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시점은 일본(1974년), 한국(1983년), 중국(1992년) 순으로 10여년씩 차이가 나나, 출산율 감소 속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매우 빨라 2001년부터는 일본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며 최근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
 - 사망률의 경우 근대화 수준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가 좁혀졌으며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

-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은 시기와 속도만 다를 뿐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
 - 조사망률이 조출생률 상회하여 마이너스 증가가 시작된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07년으로 이미 시작,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28년, 2030~2035년으로 예측
- ▣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 패턴은 유사하나 시기와 속도에는 차이 존재
 - 인구변천 전기(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저하로 인구규모 급증)는 일본 1955년, 중국 1964년, 한국 1972년까지 진행
 - 인구변천 중기(사망률 저하와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규모증가세 둔화)는 일본 44년(1956~2010년), 중국 60년(1965~2025년), 한국 57년(1973~2030년)간 지속 전망
 - 인구변천 후기(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 감소 시작)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시작, 중국은 2026년, 한국은 2031년부터 시작 전망
 - 인구변천의 후기 진입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에서 2100년 1/10로 줄어들 전망
 - 여기에 더해 한·중·일 3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나이든 지역으로 변화 전망
- ▣ 한·중·일의 인구변동이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된 관계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약간씩 차이 발생
 - 일본이 가장 먼저 인구규모 축소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뒤이어 한국, 중국에서도 유사한 영향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인구 및 사회가 지닌 특징(성비불균형, 도시화, 대규모의 유동인구, 소수민족 해체 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와 결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나 경로가 변화될 가능성 존재
- ▣ 한·중·일의 인구변천 대응 정책으로는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장려 순으로, 중국은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억제완화 순으로 정책 추진
 - 출산억제정책은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 중국은 건국 이후 찬반논의를 거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3국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
- 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
 - 일본은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1994년 엔젤플랜 도입
 - 한국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도입
 - 중국은 출산억제정책을 완화하여 2014년부터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 실시 계획

III. 정책제언

▣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집중 필요
 -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 다만,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잠재인력 활용도 제고방안도 고려하고, 이들 대내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외국인력 유치 고려

▣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 3국의 인구문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력관계 유지 필요
- 한·중·일 공동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 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정책 포럼 등 구성), 3국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 고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10. 국민안전 보호

-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연구보고서
13-04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Attitudes towards Social Risks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미숙

공동연구자 | 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I. 연구목적

- ▣ 세계화 및 전지구화(globalization)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험정도와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한국종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국민 1,500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관련 정책에 사회구성원의 위험인식 정보를 접목하여 정책적 함의와 근거를 제공함.

II. 연구내용

- ▣ 한국사회의 위험 4차원별 추이를 영역별로 살펴보았음.
 - 취약성 차원(Vulnerability)에서는 평균 4.89로 다른 차원에 비해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는 생애주기, 경제생활, 환경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정치 및 대외관계, 자연재해, 건강에 대한 위험인식은 낮은 편임.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별 및 학력별 차이가 유의가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30~40대와 대졸자가 위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음.
 - 위험 노출정도(Exposure)는 전체 평균 4.80으로 취약성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2번째로 위험인식이 높은 차원임.
 - 경제생활과 생애주기영역에서의 위험노출인식이 가장 높았고, 반면 정치 및 대외 관계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 30~40대, 대졸자들의 위험인식도가 높았음.

-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Hazard)에 있어서는 평균이 4.04로 별로 높은 편은 아님.
 -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생활과 환경, 건강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른 차원과 달리 여자, 저학력자(중졸)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영역(자연재해, 건강 등)이 있었음.
- 위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는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차원으로 평균이 중간이하인 3.32에 불과함.
 - 특히 경제생활, 생애주기,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낮아,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영역에서 대처능력이 낮다고 보고 있음.
 - 30~40대와 대졸자가 이러한 경향이 더 많았음.
 - 건강,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간 더 높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영역의 평균도 중간 이하로 낮은 편임.
- ▣ 한국사회위험지수(KRSI)는 2013년 현재 종합 38.99점으로서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급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높고, 그 밖에 환경, 사회생활, 생애주기, 정치 및 대외관계, 건강, 자연재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우선적 관리가 요구됨.
 - 각 영역(domains)별로는,
 - 자연재해 영역 위험은 황사 및 가뭄 지수
 - 건강 영역 위험은 먹거리
 - 생애주기 영역은 노후불안
 - 사회생활 영역은 과학기술 및 IT기술위험
 - 경제생활 영역은 경기침체 및 성장
 -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 환경 영역은 자원부족 및 고갈에 대한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위험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리와 대비가 요구됨.
 - 사회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별에 있어서는,

- 남성보다는 여성, 30~40대 ‘민주화탈냉전세대’, 저신뢰군(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람들),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 인구집단특성별 복합적 차이에 있어서는,
 - 청장년(20-30-40대) 세대(에코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포함)의 경우에는 사회경제 생활 관련 위험도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현저,
 - 중노년(50대 이상) 세대(베이붐세대, 산업화세대 포함)은 건강, 환경, 자연재해 등 관련 위험도가 특별히 현저하고,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경제생활 및 생애주기 영역의 위험도가 높으며,
 - 사회계층(social class)이 높은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일수록 환경문제, 건강문제, 정치·대의 관계 문제 등과 같은 문제 혹은 영역들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 국민들은 경제생활, 생애주기 영역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 분야는 위험정도와 정부의 대처력 간의 차이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건강영역의 위험도는 본인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나 정부의 대처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환경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대처도 낮은 편으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와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 ▣ 우리 사회의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방안으로,
 - 첫째, 중산층의 안전의식 제고방안 마련
 - 둘째, 세대별 차별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접근방안 마련
 - 셋째, 정치이념적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집단에 대한 포용정책 마련
 - 넷째, 주체별 위험분산방안 마련
 - 다섯째,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 마련
 - 여섯째, 사회구성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합의
 - 일곱째, 위험사회 지수개발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 등을 제안함.



연구보고서
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Networking in the Child Welfare System

연구책임자 | 김미숙
공동연구자 | 양심영·김기현·하태정

I. 연구목적

□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요보호아동을 주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어 아동복지 서비스별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다원화되어 있음. 이로인해 체계가 분절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계가 미약한 채 파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더구나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기관이나 시설 중심이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연속성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보호대상아동 규모를 파악하고, 국외 아동보호체계의 연계현황 및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 그리고 실무자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연계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제시함.

II. 연구내용

□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FGI 결과

–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상아동의 발견 및 배치, 아동에 대한 개입과 기관연계, 연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FGI를 실시한 결과, 우선 대상 아동 발굴 및 배치상의 문제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한 사람이 아동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분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장애여부 판정 및 심리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또한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현재의 체제 내에서는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더불어 체제 간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어렵고, 인력 부족과 장애와 같은 특별한 복지 욕구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부족 등이 지적되기도 함. 즉, 기관 내에서도 서로 간 연계는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제 상에서 게이트 키퍼로서 공공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보호체제 내의 인력확충과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함.
 - 또한 대상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체제 내의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특수 복지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아동보호체제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양적조사 결과

- 아동보호체제 연계 실태 파악을 위해 FG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에서는 기관간 업무협력 정도, 기관간 연계정도, 연계 활성화 요인, 아동관련 협의 및 심의기구 여부, 연계체제 구축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조사결과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원활성 정도는 근무기관이나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는 잠재 및 위험아동 발견 및 배치단계, 서비스 계획 및 개입단계, 종결 및 모니터링 관계로 나누어 아동과 관련된 기관 간의 단계별 연계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근무기관과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다음으로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요인으로 연계를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중재할 기구 유무, 지역사회 협력을 요청할 자원 등으로 보았으며,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이해나 기관간 협력 및 이해보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환경이나 구체적 인프라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아동관련 협의 및 심의기구의 활발성과 필요도에서는 아동복지협의회가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구가 갖춰져 있지 않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임.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분명히 존재하며,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관 간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정보교환 및 공유, 협의체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연계 인력확충, 연계의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서비스 다양화, 기관운영 활성화 및 투명화 등을 지적함.

- 아울러 학교와의 연계 긴밀화, 담당사례수의 적정화,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III. 정책제언

-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간의 연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 첫째, 공공기관 중심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핵심 추진 주체가 공공이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개입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아동연계정도를 기관평가지 반영하여 연계를 활성화함.
 - 셋째, 아동복지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정기적 정보, 서비스 및 자원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넷째, 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해 아동관련 DB가 구축되어야 함.
 - 다섯째, 연계인력을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아동관리상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함.
- ▣ **중기적으로는,**
 - 첫째, 연계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및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함.
 - 즉, 연계를 의무화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여러 기관을 중재할 공식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임.
 - 둘째, 전반적으로 부족한 기관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들을 발굴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를 빈곤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확대시킨다면 더욱이 다양하고 더 많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확보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개별화된 아동 청소년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고 다양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



연구보고서
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Aspects of Child Poverty in Korea

연구책임자 | 정은희
공동연구자 | 최새은·이상균·하태정

I. 연구목적

-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으나 아동빈곤율의 감소가 빈곤아동의 삶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음. 아동빈곤율의 변화는 낮은 소득 계층의 출산률 변화 및 증위소득의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 기존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과 같은 지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빈곤이라는 현상은 생활상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결핍이나 박탈을 포함함. 따라서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화폐적인 지표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파악하기에는 빈곤한 집단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움.
- ▣ 본 연구는 아동빈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빈곤집단을 규정 및 유형화하고 각 빈곤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집단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밝히고자 하였음. 또한 유형화된 빈곤집단들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발달 및 아동양육환경의 차이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아동빈곤정책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향후 아동빈곤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II. 연구내용

- ▣ 여러 차원에서 겪는 생활상의 박탈지표들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 집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집단을 유형화하였음. 분석결과, 잠재 집단은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음.
 -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으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임.
 - 다차원 박탈집단은, 주거비부담은 높지 않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과,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겪을 확률이 높은 집단임.

- 비빈곤 집단은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 잠재집단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비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빈곤집단별 아동특성을 탐색한 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의 아동이 인지 발달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성취 수준을 보였으나, 사회정서발달 영역에서는 비빈곤 집단이 다차원 박탈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부모의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영역에서는 빈곤집단과 주거비 과부담집단이 다차원 박탈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III. 정책제언

- ▣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음.
 - 첫째,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동질한 단일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고,
 - 둘째,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집단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희박함. 따라서 임대료 보조와 같은 정책들은 비교적 넓은 소득계층에게까지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 7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과 소득기준의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이 전국데이터에서 나타난 비율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은 소득기준의 빈곤율 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들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빈곤아동집단을 과소추정 할 가능성이 높음.
 - 넷째, 빈곤가구를 위한 정책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또한 고려되어야 함. 소득을 보충하는 기존의 빈곤 정책뿐만 아니라 각 박탈 영역에 대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대안이 필요함. 또한 아동빈곤 정책은 빈곤 가구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박탈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 ▣ 현재 우리나라 아동빈곤정책은 장기적인 목표가 부족함. 2013년에 수립 예정인 아동복지 기본계획과 함께 빈곤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및 교육·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의 다차원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동에게 부정적 발달산물을 야기하는 빈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13-06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Consumer-focused Study on Cosmetics and Quasi-drugs

연구책임자 | 김정선
공동연구자 | 박은자·윤시문·이서희·배문주

I. 연구목적

- ▣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및 소비행태 조사 분석
 - 최신 트렌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동향 평가
 -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 사례를 통한 관리 개선의 쟁점 도출

II. 연구내용

- ▣ 국내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현황 분석
 - 화장품 및 의약외품 형태의 화장품의 관리체계, 규제 등의 제도 및 시장 현황 분석
 - 생산실태 분석 및 최근 생산 트렌드 분석
 -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한방화장품, 줄기세포배양액 등 신소재를 사용한 화장품
- ▣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행태 파악
 - 화장품 기능별/유형별 사용빈도 조사
 - 화장품 안전이슈에 대한 인지수준, 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법, 화장품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 등의 성별, 연령별 차이 파악
 - 구매 장소, 정보 획득 방법의 차이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파악

III. 정책제언

- ▣ 소비자의 성별 및 연령별 인식차이를 고려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 화장품 표시 및 맞춤형 정보 교육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의 최적화
- ▣ 화장품 및 뷰티 분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 소비자 행태와 불만 및 피해 사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DB시스템 구축
 - 양질의 소비자 교육 및 마스크 홍보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 수급 상황
- ▣ 산업계와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 신종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의 전문화와 산업체와의 신기술 관련 적극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 ▣ 천연 및 유기농 인증 등 인증제도 관리 개선
 - 민간인증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재검토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화장품의 원료관리, 제품관리, 유통관리, 소비자관리 등 명확한 단계별 책임소재 관리 강화
 - 특히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판매 및 유통의 책임자와 수입자들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필요 시 단계별 책임회수체계 마련 등의 사후관리의 신속한 대응
- ▣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화장품 과대포장 용기 축소 방안 마련
 - 관계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한 화장품 적정포장 기준 마련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산업계의 자율 준수 유도

2013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III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Long-term Asset Allocation Policies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연구책임자 | 원종욱
 공동연구자 | 신진영·이승호·남재우·주성철·장 철

I. 연구목적

- ▣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기금운용의 수익률제고를 위한 목표수익률의 설정, 자산배분, 허용위험한도의 평가, 해외투자의 방향설정,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와 성과평가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
 - 국민연금제도는 2060년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저부담·고급여의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금의 고갈시점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와 동시에 기금의 수익률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허용위험의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목표수익률의 설정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기본방향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II. 연구내용

-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모델의 검토 및 개선안
 - 국민연금은 현재 MVO(Mean Variance Optimization Model)를 자산배분의 모델로 사용하고 있음.
 - MVO의 단점은 기대수익률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국내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대수익률 Profile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의 위험자산투자에 따른 수익률제고가 평균분산 모형에서 차별화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에 활용하는데 제한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자산배분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Historical bootstrap, Resampled Efficiency, Black-Litterman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 국민연금이 현재 자산군별로 설정하고 있는 정책조건에 대한 검토
 - 국내주식시장대비 10%, 해외투자의 최소비중 등 정책조건의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 허용위험수준의 타당성 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허용위험은 Shortfall Risk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는 shortfall risk가 5년, 10% 이내에 있도록 관리됨.
 -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을 확률을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Shortfall risk가 높아지는 경우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Shortfall risk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10%수준의 적정성도 동시에 검토
 - Value at Risk, Conditional Value at Risk, Likelihood of Negative Return 등의 적용 가능성 또는 하부 위험지표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
- ▣ 기대수익률의 적정성 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부문(국내, 해외) 기대수익률은 실질GDP + CPI + 배당수익으로 결정되고, 채권부분은 무위험수익률 + Historical spread를 적용하고 있음.
 - 다른 자산군에 비해 채권의 기대수익률(국내채권:4.8%, 해외채권:4.5%)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채권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실제 국공채수익률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채권기대수익률은 과도하게 높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중장기 투자전략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risk-return profile의 도출이 필요함.
- ▣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지사는 직접투자 또는 위탁사선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음.
 -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기금운용의 조직체계와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함.

- ▣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 세계 4대 공적연금기금의 위상에 걸맞은 기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위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Review 방안마련이 요구됨.
 - CPPIB, CalPERS등은 위원들을 대상으로(특히, 신입 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 국민연금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대표성과 민주성이 강조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토의와 심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III. 정책제언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 개편」
 - 기금담당 부이사장직의 신설과 국내투자, 해외투자,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3개 본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조직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선
 - 기금운용직에 대한 성과급체계의 개편(IR의 하향 조정)과 허용위험수준의 상향조정 등이 동시에 진행
 - 기금운용조직의 공사화는 위와 같은 위상제고에 따른 효과를 일정기간 관찰한 후 논의 하는 것이 적절
 -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연금정책국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정책국을 신설하여 기금투자과와 기금관리과를 신설
 - 「정성적 방법에 입각한 자산배분 결정 Process 도입」
 - 정량적 방법을 지양하고 정성적 방법에 의거하여 자산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조건을 제정하면 의사결정이 용이해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 정량적 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다양한 투자환경을 모두 반영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위험수준 등을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목표 정보비율 수준의 완화」
 - 기금운용본부가 과거 달성한 초과수익 성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설정된 목표 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한 목표인 것으로 사료
 - 기금의 과거 정보비율 시계열을 보면 최소한 0.5 수준의 정보비율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목표임.
 - 기금의 초과수익률에 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에 요구하는 목표 정보비율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국민연금 위탁운용 개선」
 - 위탁운용의 성과는 지난 3년간은 직접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위탁운용의 경우 적극적 운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용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금의 초과수익률에 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에 요구하는 목표 정보비율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국민연금 적극적운용 개선」
 - 적극적 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술적 자산배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자산군의 수익률 전망 능력의 제고를 통해 market timing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국민연금 대체투자 개선」
 - 대체투자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주체와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좋은 투자기회에 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투자대상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다수 내부에 보유해야 가능함.
- 「국민연금 환헤지전략 개선」
 - 향후 기금의 해외투자자산 규모 증가를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금 전체 또는 자산군별 환헤지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필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A Study on Current Privacy Policies of Medical Institutes and Suggestions

연구책임자 | 정영철
공동연구자 | 이기호·이아리

I. 연구목적

- ▣ 정보 특성상 민감하고, 침해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의료정보를 생성, 관리,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파악, 문제점 및 취약점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개인의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념 및 특징
 - 개인의료정보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중심이 되어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이 크고, 침해시 그 피해가 더 큰 반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적절한 이용 및 활용과의 균형도 중요함.
- ▣ 의료부문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현황
 - 개인의료정보 보호관련 법·제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미국의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기업 및 개인 대상 ‘정보보호실태조사’,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 취급분야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건복지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제도로는 『개인정보 보호마크(ePRIVACY Mark)』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 Mark)』,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도(PIPL)』,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PIA)』 등이 있으며 분석 대상 사례로는 일본의 『프라이버시 마크(Privacy Mark, 일명 P 마크)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이 있음.

■ 국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현황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현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총 30,082개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 개설·운영 기관은 50.9%, 이 중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재 기관은 51.4%이며 10개 필수 기재항목 중 안전성 확보조치사항과 방침변경사항에 대한 게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 일반국민의 경우, ‘어느 정도 혹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4%, 의사의 경우는 32.4%를 나타냈으며 정보주체에 대한 5가지 권리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 일반국민의 경우, 평균 57.7%, 의원·의사의 경우는 평균 65.1%를 나타냄.
- 의원 의사의 경우, 최근 1년동안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 경험률은 8.5%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의원 의사들은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그 중에서도 모바일 앱에서의 개인건강관리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2.4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병원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5점 만점에 평균 2.66점으로 평가함.
- 조사대상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 운영기관의 77.2%가 외부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사항에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행률은 평균 59.5%,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행률은 평균 20.5%로 나타났으며 보안조치사항에 대한 수행률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62.1%,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32.1%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 ▣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한 과제 발굴과 수행
-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개인의료정보 관리현황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통계자료 등을 생산, 제공할 수 있는 실태조사 필요
- ▣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개발된 콘텐츠 보급을 위한 창구 필요
 - 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표준양식과 작성 틀 등에 대한 개발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급
-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개인정보 보호 관리현황에 대한 진단에 기반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 ▣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육성 필요
 -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주기적인 실태파악, 맞춤형 관리 지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교육체계 마련



연구보고서
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ector and Rational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연구책임자 | 정기혜

공동연구자 | 김어지나·김동우·조주연·김동영·정병규

I. 연구목적

- ▣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 식품규제정책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식품안전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
 - 식품안전 규제 정책의 연대별 변화 추이 분석
 - 외국의 식품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품질 개선 등 규제합리화 방안 제언

II. 연구내용

- ▣ 규제정책에 대한 현황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됨.
 -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음.
 - 규제는 성격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식품규제는 환경, 산업안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규제로 분류됨.

- 최근 규제적용방식은 사전명령적 규제추진에서 사후시장유인적 방식으로 전화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14,117건의 규제가 등록되어있음.

▣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선진화 전략으로 시작되었음.
- 초창기에는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일이 중심이었으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정부는 규제정책의 방향은 앞선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 하였는데 규제개혁과 국정과제 이행연계, 규제완화와 강화의 Two-Track으로 추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임.

▣ 외국의 규제정책 현황

- 외국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특히, 영국, 미국, 호주는 범정부적 규제관리체계와 법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독일은 주로 행정 입법 절차를 개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 식품안전규제 현황 및 특성

- 식품안전규제는 가장 강한 규제로 볼 수 있고, 점점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6개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의 27개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 총 14,117 등록 규제중 507개의 식품규제가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225건의 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규제를 규제방식으로 분류하면 95건이 투입, 7건 성과, 시장유인이 6건이었으며 규제영역으로 분류할 경우 108건이 소비자안전, 1건이 사회적 차별 규제로 분류됨.
- 식품규제는 총 등록규제의 3.7%에 불과하나 1개라도 타 분야와 달리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 규제개선

-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총량은 202회로 나타났으며 연대별로는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개선이 있었음.
- 식품위생법의 경우 1960년대 2건의 제·개정에서 1990년대 10건, 2000년대 이후 29건이 추진되었음.

▣ 현재 규제정책 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59명과 식품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약 2주일에 걸쳐 개발된 설문지를 직접 조사대상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잦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불만도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조사되었음.

III. 정책제언

- ▣ 식품안전규제는 사회규제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 직결되고 또한 강력한 규제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완화, 폐지 및 신설, 강화 등의 규제 품질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함.
- ▣ 식품규제는 사회규제임으로 경제규제와 달리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과의 조화,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신설도 검토되어야함.
- ▣ 여러 법령 등에 사용되는 오래된 용어와 규정의 최신화가 시급히 필요함.
- ▣ 식품안전규제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확대, 규제 일몰제 채택 및 실질적 운용, 규제의 기술적 사전영향평가 실시, 규제 최소화 등이 실천되어야함.
- ▣ 특히 규제의 효율적인 제정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 강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2013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ateway System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연구책임자 | 송태민
공동연구자 | 진달래·이중순·안지영·박대순

I. 연구목적

- ▣ 인터넷 상에서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건강정보광장)'의 운영 현황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 국내·외 보건복지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방안
 -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솔루션을 제공 및 수집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질병예측, 사회문제 예측 등 빅데이터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사례 제안
-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및 왕따 담론 분석
 - 자살 관련 사회 이슈 발생 시 자살 관련 버즈량이 급증함.
 - 연예인 자살 발생 시 온라인 버즈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연예인 등의 유명인 자살 이슈 발생 시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모방 자살을 차단 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
 -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해 정부차원의 자살예방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함.
-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및 왕따 담론분석을 통한 예측모형 개발
 -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일일 자살자수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낮을수록, 평균 습도가 높을수록 성인의 자살 검색량은 증가하였음.

- 일일 청소년 자살자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검색이 많을수록, 음주 검색이 많을수록, 미세먼지량은 적을수록 청소년 자살 검색은 증가함.
- 성인·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자살과 관련된 담론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언급이 실제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예측모형에 따른 위험징후가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게이트 키퍼 (Gate Keeper)가 개발되어야 함.
- ▣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각종 기록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성 문제 제언 및 보호방안 제시
 - 인터넷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기능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개입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선별하여 제언함.
- ▣ 2013년 건강정보광장 자료구축 현황 및 이용자 평가
 -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수집 용이성을 증대 시켜, 이용자 맞춤형 건강정보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서비스 기능 개선
 - 「건강정보광장」은 건강소식, 건강콘텐츠, 건강정책연구, 건강교육, 건강지식검색, 의료서비스 정보, 건강App등의 건강정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지식검색은 연령대별, 신체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로 분류하여 서비스 제공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한 「건강정보광장」포털 이용자의 정보욕구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콘텐츠 구성 및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III. 정책제언

- ▣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 제언
 - 보건의료분야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안 및 미래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의사 결정 모델을 도출 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위험분석센터’설립이 필요
 - 위험분석센터를 통해 질병관리 예측, 다양한 사용자의 질병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질병의 분포 및 추세 예측을 통해 국가 차원의 조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대응방안 제안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분산된 개별 정보보호 법률들의 소관 부처 감독 및 규제 통합 및 일원화 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 체계정비가 필요

▣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품질향상 방안 마련

- Web 3.0과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국민중심(사용자)의 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됨.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연구책임자 | 오미애
공동연구자 | 이연희·이상영·오영희·김문길·윤강재·진달래

I. 연구목적

- ▣ 2013년 보건복지통계포털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 통계의 최신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사이트 운영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검색기술 동향 및 통계 분류체계 분석
 - 통계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정보 검색기능(검색엔진, 색인기술, 질의처리 기술 등)과 관련된 최신 IT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활용가능성 및 국내·외 통계사이트를 중심으로 각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분석
- ▣ 장애인/자활사업/정신건강 통계 수집 방안 마련
 - 장애통계의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애관련 조사통계 지표를 비교 분석
 -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생산 현황 고찰 및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의 정신건강 통계 지표의 구성과 수집 방안 제시
- ▣ 「보건복지통계」이용자 중심의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 「보건복지통계」 포털 2013년도 추가개발 구축
 - 통계분류기준 및 DB구조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보건복지통계포털 개편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의 기능적 개선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포털 개편

- ▣ 「보건복지통계」포털 운영평가
- ▣ 「보건복지통계」포털 이용현황
- ▣ 「보건복지통계」 포털의 웹진 이벤트를 통한 홍보, 전국 보건소 및 국립병원 중심의 배너 홍보 실시

III. 정책제언

- ▣ 보건복지통계포털 이용률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관련 콘텐츠의 DB 구축은 상당한 규모가 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통계포털의 통계 포털만의 핵심 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심층 분석을 통한 지표 확대 강화가 절실함.
- ▣ 신규 회원 확보 및 기존 회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수립 및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전략이 강화되어야 함.
- ▣ 다양한 국제통계의 DB구축이 통계포털 지속 가능성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 기구뿐 아니라 OECD에 가입된 각 나라별 보건복지통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각 영역별 분류체계 후속 작업이 필요함.
- ▣ 통계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최신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 업데이트 사전예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요구됨.



협동연구 총서
13-31-0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년차)

On Improving the Institution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연구책임자 | 오영호

공동연구자 | 한국행정연구원·서울대학교·차의과대학교·국립한국교통대학교

I.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 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 조사대상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 분석
 -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AHP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비영리법인의 특성별로도 책무성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그룹별로 기본권적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 지수 값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됨. 외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그룹별로 책무성 수준이 상이하며 상당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 이상의 분석결과,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서 기대되는 보통 수준의 책무성 수준을 보여준 반면, 분석대상의 10%가 넘는 일부 기관들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여러 항목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무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 비영리법인의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분석
- ▣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항목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III. 정책제언

- ▣ 양적인 평가연구결과에 의해,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 질적조사의 결과에 의해,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차원의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무화 하거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 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IV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2013년 연구 활동

1. 2013 주요행사
2. 정기간행물

2013 주요행사

국제회의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기관
Bruno Salzmänn 교수(독일) 초청 간담회	2013. 4. 18.	·한국의 출산율 변화 및 대응정책에 관한 논의	-
A Perspective for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in Korea 세미나	2013. 5. 24.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보건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 개편 논의	-
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	2013. 5. 30. ~5. 31.	·21세기 한국, 나아가 범세계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초저출산, 결혼제도 및 규범의 전환, ICT에 매개된 일과 생활의 재편, 혼인 노동 교육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인구유동 등에 의한 경제사회정치적 적응과 사회정책적 대응의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천적 논의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 한국사회학회
Bryan S. Tuner 교수(미국) 초청 세미나	2013. 6. 4.	·저출산, 신멜서스주의의 딜레마와 사회적 다양성	-
The Fourth EWC-KIHASA Joint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ocio-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2013. 6. 17. ~6. 18.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 도출	미국 East-West Center
한국과 미국의 보건 의료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	2013. 7. 2.	·미국의 최근 보건 의료 개혁내용 및 추진 결과와 우리나라의 정책동향,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 모색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Brian Breuhaus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 초청 세미나	2013. 7. 3.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파급효과	-
싱가포르 NPTD(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대표단과의 정책 간담회	2013. 7. 10.	·한국의 결혼 및 출산 동향,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제도 제도 현황	-
201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학회(APEA) 제9회 학술대회	2013. 7. 27. ~7. 28.	·Social Welfare and Taxation 세션운영	아시아태평양경제학회(APEA)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정책에 관한 워크숍	2013. 8. 22.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정책 논의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추최기관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지원)	2013. 8.26. ~8.31.	·세계 학자 및 전문가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진단하는 기회 ·인구정책에 대한 민간, 정부 및 학계의 협조 체제 구축	국제인구과학연맹 제27차 IUSSP 세계 인구총회 국가조직 위원회
2013년 고령화에 관한 한·일 공동 학술대회	2013. 8.29. ~8.30.	·고령화 추세와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책에 관한 한·일 간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경제 연구소
아시아 10개국의 건강보장정책 비교 연구를 위한 국제워크숍	2013. 9. 6.	·아시아 10개국 건강보장정책 국가별 사례 발표 및 토론(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일랜드, 베트남, 한국 등 각국의 건강보장정책 비교 연구)	-
ICPM 기금운용 국제컨퍼런스	2013.10. 8. ~10. 9.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정책 주제발표	캐나다 토론토대학 국제연금센터(ICPM)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 회의	2013.10.31.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기준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네 국가의 가족구조, 노동 시장과 가족, 가족정책 자료를 수집 비교	-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국제회의	2013.11.21. ~11.22.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 경험 공유	-
스웨덴 복지모형에 대한 세미나	2013.12.17.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최연혁 교수 초청 스웨덴 복지모형 논의	-

국제훈련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추최기관
아세안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교육훈련 프로그램	2013. 6.30. ~7. 7.	·아세안 회원국 사회안전망 분야 공무원 초청 교육훈련	-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	2013. 8.27. ~9. 9.	·보건정책관리 강의, 실습, 기관견학, 산업시찰, 친교행사, 서울시티투어 등 - 보건정책만들기 역량강화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보건 정책 및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Health Planning과 Research & Analysis 기술 중심의 개괄 교육	-

정책토론회 등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2013. 1. 16.	·미래보건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보건복지 정책 제언 - 보건의로 부문, 복지부문, 저출산 고령화 부문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토론	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조선일보)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지향적 건축 모형 관련 정책토론회	2013. 2. 14.	·케어방식의 변화를 통한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모색	-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2013. 3. 5.	·인구변동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하여 연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출범한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
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4. 5.	·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모색 -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복지정책의 현안 및 정책과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소비자 연구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3. 4. 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최근 동향 및 관심항목 등을 현장조사중심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와 심층토론	-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 선별검사 및 정책과제 세미나	2013. 5. 9.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 선별검사 및 정책과제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2013. 5. 16.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련된 쟁점사항 논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관련 정책토론회	2013. 5. 23.	·3대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비)의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사항 논의	보건복지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과위원회 공개토론회	2013. 6. 12.	·복지분야 중기 투자방향, 복지지출 투자효과성 제고방안(민간·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013. 6. 28.	·개별급여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등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국토연구원
체계적 원가분석을 위한 패널병원제도 도입방안 워크숍	2013. 7. 5.	·원가시스템 운영현황	-
체계적 원가조사를 위한 요양기관 패널제도 도입연구에 관한 워크숍	2013. 7. 12. 2013. 8. 23. ~8.25.	·원가분석에 대한 연구진 역량강화 및 최신 정보 습득 ·카운터파트너인 심평원과의 유대강화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2013. 8. 2.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적 인구정책(가칭) 설계방안	-
미래사회 공동컨퍼런스: 복지의 미래- 복지와 기술의 융합	2013. 9. 6.	·미래변화를 대비한 복지와 기술의 융합의 함의 모색과 미래비전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은퇴전략포럼: 인구고령화와 연금의 미래	2013. 9.26.	·인구 고령화와 연금의 미래(슬로건: 100세 시대, 행복을 창조하자)	뉴스토마토 토마토TV 국민연금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심포지엄	2013.10.14.	·일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복지 위상 탐색을 통해 다양한 선진국의 복지모델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위상 제안	중앙일보 JTBC 유민문화재단 (SK텔레콤)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	2013.11. 4.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책자문 위원회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	2013.11.26.	·치매특별등급(가칭) 운영모형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공청회	2013.12. 6.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대통합 비전과 과제 ·시대적 요구로서의 국민대통합, 국민대통합의 추진경과, 국민대통합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부처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연세대공공문제연구소)
위험사회 정책 세미나: 한국 사회의 안전 및 위험	2013.12.18.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불안 및 위험의 정도 및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	성균관대서베일리 서치센터 (한국연구재단) (동아일보)
〈벼랑끝의 사람들: 진단과 대책〉 정책 토론회	2013.12.27.	·각종 생계형 사건 사고 속 생활위험 및 위기의 유형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기존제도의 대응 잠재력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함의 도출	(중앙일보)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학술대회(후원 포함)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2013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차 정책 토론회	2013. 3. 14.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	한국보건행정학회
2013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 4. 5. ~4. 6.	·“지역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복지기관의 포지셔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2013년도 공동정책세미나	2013. 4. 17.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역할 정립방안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
2013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5. 3.	·사회보장의 통합적 접근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5. 31.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권을 재조명 - 한국사회정책학회-보사연 연계세션: 사회통합	한국사회정책학회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정책연구원 고려대 좋은예산센터 (중앙자활센터) (재단법인 피플)
제4회 복지재정DB 학술대회	2013. 6. 18.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DB를 활용한 복지 재정 DB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복지경영학회
인구교육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공동학술심포지엄	2013. 6. 25.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구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내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의 보완 등 논의	국민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구교육학회
2013년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2013. 6. 29.	·경제정의, 사회복지 그리고 공법 :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2013. 7. 18. ~7. 19.	·불안정의 시대,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	2013. 10. 11. ~10. 12.	·한국의 급격한 인구변동 현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정정책 및 연구경험 공유 - 주제: 저성장시대의 재정정책 역할	한국재정학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삼성화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2013년 제3회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	2013.10.11. ~10.12.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말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연금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25주년 기념학술대회	2013.11. 7. ~11. 8.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한국보건행정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형평성학회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2013.11.28.	·국민건강보험정책의 효과 및 국민의료비, 의료 이용, 건강행태, 건강수준,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기초자료의 생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013.12. 5.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성과 공유 - 사회보장, 경제활동,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국민인식, 한부모 등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정책포럼 등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3. 2.13.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달체계 제도개편 관련 논의 ·향후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운영방식 논의	-
	2013.2.21. ~2.22.	·사업초기 포럼운영을 위한 현안 및 이슈 선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	
	2013. 4.18.	·선정기준 표준화 방안 논의 ·기초보장 모니터링포럼 사례집 구성 관련 논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달체계 제도개편 관련 논의 등	
	2013. 6.20. ~6.2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논의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사례집 발간 관련 논의 ·전달체계 관련 토론 ·2013년 하반기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운영 계획 논의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미래사회포럼	2013. 3.29.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에서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관련 발표 및 토론	-
	2013. 4.24.	·우리 사회의 전통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의 시사점	-
	2013. 5.31.	·미래복지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	-
	2013. 6. 4.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와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방안 모색-사회 복지분야	-
	2013. 6.11.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방안 모색-보건분야	-
복지포럼	2013. 4. 9.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향과 추진전략	-
고령사회포럼	2013. 5.14.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	-
	2013. 7. 9.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
	2013. 9.10.	·연령통합의 관점의 구현방안 모색	-
	2013.11.12.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
사회서비스발전포럼	2013. 5.31.	·사회서비스발전포럼 발제 및 포럼운영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2013. 6.28.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 마련-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역할 분담 방안	-
	2013. 8.30.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진단 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협력적 상생과 발전 방안 모색	-
	2013.10.16.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개선 과제 논의	-
	2013.11.22.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체계와 전망	-
민·관 복지포럼	2013. 8.28.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
	2013.10.30.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
지역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단	2013. 7.25.	·지역사회보장현장모니터링단 위촉 ·지역사회보장 제도개선 및 신규 정책개발	-
	2013.12. 4. ~12. 5.	·지역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단 워크숍 -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요약 및 설명, 분야별 논의	-
	2013.12. 6.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	-

특강 / 교육

주제	개최일자	강사
【명사초청】		
보건의료정책 구상의 기본원칙	2013. 4.25.	이규식 원장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신정부 복지정책 과제	2013. 6.28.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공직생활의 소회 그리고 보사연의 역할	2013.10.29.	노연홍 부총장(가천대학교)
【통계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	2013. 2.22.	송태민 연구위원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보건복지 패널데이터 분석	2013. 2.26.	
범주형 자료분석	2013. 2.25.	오미애 부연구위원
분산분석	2013. 2.27.	
Mean Variance Optimization Model과 Resampled Efficiency Model의 특징 및 차이점	2013. 3.12.	
STATA dialog box를 이용한 한국복지패널(KOWEPS) 데이터 활용	2013. 6. 3.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STATA를 활용한 계량분석법: 입문편(1)	2013. 6. 3.	남상호 연구위원
STATA를 활용한 계량분석법: 입문편(2)	2013. 7.24.	
STATA를 활용한 계량분석법: 입문편(3)	2013. 7.29.	
【기타】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	2013. 5.10.	최영준 부장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청렴교육	2013. 8. 5.	시청각 교육
보안교육: 알고지키자! 개인정보 보호 이해하기	2013. 9. 2.	시청각 교육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MOU

기관명	체결일자	협약내용
인제대학교	2013.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인적 교류를 위한 교육 및 특강 · 보건 및 의료 분야 융합연구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환 · 디자인연구소 주관 통합형 u헬스케어연구를 위한 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수행 · 보건 분야 홍보캠페인 관련 디자인 컨설팅 · 대국민 건강증진사업 관련 헬스케어디자인 컨설팅 · 학술행사 공동 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학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정보 표본코호트DB자료의 우수성 및 제한점 발굴 협력 · 검증결과 반영으로 자료의 정확도(Quality) 확보 협력 ·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익적 연구 활성화 협력 · 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가 강의 등 참여 협력 · 기타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호 협력 사항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2013.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hange of faculty and staff Joint research activities · Participation in seminars and academic meetings · Exchange of academic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 Special short-term academic programs · Student exchange for research and study
경남발전연구원	2013. 6.13.	·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대전복지재단		·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경북행복재단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부산복지개발원		
인제대학원대학교	2013.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 관련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 ·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연구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학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 교육 및 조사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의 교육과정 상호 협력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분야
한겨레신문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10.30.	· 지역사회복지대상 사업 수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의 교류 ·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2013.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세미나의 공동개최(저출산 관련 경제사회문화 공동연구 협력 강화) · 인구와 건강분야 관련 정보 교류

봉사활동

❖ 목적

- 사회공헌 및 의사가 있으나 개별 참여하기 어려웠던 직원에게 기회 제공
-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내용

- 일회적, 단발적 행사가 아닌 시설과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월 1회 이상 봉사 실시

❖ 실적

- 본부별 1개 시설을 전담하여 자발적 운영
- 5개본부 연간 총 81회 실시
- 봉사시설
 - 양로시설 성우회
 - 모자쉼터시설 흰돌희
 - 지역아동센터 보물섬
 - 서울 SOS 어린이마을
 - 성산지역아동센터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행합니다.

■ 제33권 제1호

논문제목	저자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정은희·최우석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염주희·정승은·주영선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영미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류연규·백승호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이금룡·조은혜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불안의 매개역할	김성희·송양민
요양보호사가 노인주거시설에서 경험한 성희롱에 관한 연구	임춘식·이인수
영국 치매노인 가족 수발자의 시설이용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이현숙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 요구	조윤경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을 중심으로	김효순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 성폭력 경험의 관계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배화옥·최재희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승배
지역 보건복지 통합접근의 연계수단: 영국 커미셔닝을 중심으로	강창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하·김원섭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	이성기·원석조
자살예방 국가전략 비교: WHO 프레임워크로 분석한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및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김정수·송인한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송태민
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	김잔디·서재희 신영전·김창엽
우리나라 하드코어 흡연 현황 및 관련 요인	조경숙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과 정서조절근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영선·이인정

논문제목	저자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 방법	차진경·김형준·김학선
의료기관 구성원의 LMX(Leader-member exchange)와 조직시민행동간 관계 분석: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김대원

■ 제33권 제2호

논문제목	저자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신동균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이현주·안기덕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비교	정순들·김유휘·최혜지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	장혜진·조윤정·윤진권 권지성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이정우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급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윤상용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장애주류화: 국제동향 및 한국의 혁신 방향	황주희·박은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김찬우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김진·이서영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금천구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윤·박경숙
서비스업노동과 관리자지원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소연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김경호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el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이재욱·김대원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자영·김두섭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노인 인지문제 개선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고령자패널데이터(KLoSA)를 이용하여	전해숙
대학생의 도박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도박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성범
희귀의약품 제도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채수미·박은자 주민희·구현민·유원곤
건강보험 가입 재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자은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to Estimat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of Insurance Premium for the Cancer Treatments in Korea: A General Population Study	조창익

■ 제33권 제3호

논문제목	저자
식위섭취상태가 사망과 질병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김혜련
소득이 담배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민희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흡연량과의 관계: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옥진·태미화·서지은 김주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 여부에 따른 알코올 정책 선호도	김형태·윤미은·천성수 김미경
지역사회 거주 조현병 환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및 수도권외의 주간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허원빈·정은주·최선영 전종설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자영·양정빈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황나미
미국의 응급피임약 판매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	조창익
고혈압 이환율의 지역 간 변이 요인에 관한 연구	석향숙·강성홍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심정지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박일수·김은주·홍성욱 강성홍
유방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 직무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영선·한인영·임정원 구혜완·문인영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연구: 한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정윤·이건직·김소희
서울시 거주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의 노후준비와 지역효과 검증	김명일·이상우·김혜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의 시기 및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가?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주림·구자훈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이내찬
주민생활지원국제계의 한계와 대안적인 종합적인 복지사무행정센터 모형에 대한 연구	성은미·백민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병주
대학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자기효능감, 직무환경,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정숙·강희순
중합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박수미·박옥임·문희

■ 제33권 제4호

논문제목	저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김연수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이상림
자녀등거가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별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김현식·황선재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 및 건강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다양한 사회 참여의 영향을 중심으로	민주홍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 및 우울관련요인의 차이	이인정
주관적 노후인식이 60대 중고령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주원·조소연
The Effect of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the Young-old, Middle-old and Old-old Elderly Koreans	손용진
자아의 위기와 한국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 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노법래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계 연구	육혜련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대처 경험에 대한 연구	김경희·권자영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창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능력이 사례관리 사정에 미치는 영향	김용민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 유형에 대한 질적 연구	김정수
기혼간호사의 일-가족 양립갈등, 조직문화, 상사지지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의 상관관계	이양숙·장수정
지니계수를 활용한 생존기간 불평등의 변화 양상 분석	우해봉
Self-Rated Health as Private Information in Predicting Mortality: A Logit Analysis Using KLIPS	이용우
운동자와 비운동자간 의료이용차이의 계량적 분석	오영호
국내 청소년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김이경·이성규·이향기 지선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수미·경수영
기후 인자를 이용한 한국의 말라리아 모형화 연구	곽재원·이종소·한희찬 김형수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보건복지포럼 Health-Welfare Policy Forum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1월호 (통권195호)	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최병호-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원장)	신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건강보장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이상영·신현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정영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 (윤석명)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쟁점과 전망 (김태완)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이삼식)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 (선우 덕)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신윤정) ·사회서비스 부문의 쟁점과 정책과제 (강혜규) ·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가능 강화 (정홍린)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고경환·강지원)	·한국의료패널의 교차타당성 검증: 스트레스와 우울의 잠재평균분석 (송태민)	·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노대명)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진재현·호혜연)
2월호 (통권196호)	사회복지지출통계 (OECD, SOCX) 공표에 즈음하여 (Willem Adema-OECD 사회정책과 Senior Economist)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의 현황과 정책적 의미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구조와 정책과제 (고경환) ·사회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유근춘)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오미애) ·가족부문 지출과 정책과제 (강지원)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태은)	·베이비부머의 노후 소득준비 현실과 정책과제 (박지승) ·식품안전분야 위해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기혜)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김혜련·여지영) ·프랑스 의약품 규제 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박실비아)
3월호 (통권197호)	빈곤의 변화와 기초보장의 미래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기초보장의 핵심 쟁점과 미래 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 개편방안 검토 (노대명) ·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전병유) ·근로빈곤층의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윤희숙)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진미윤)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강신욱)	·고용복지 대안수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 진단 (이철선) ·기후변화가 식중독 및 수인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분석 (윤시문)	·미국의 인구변동과 정책 동향 (이삼식·최효진) ·일본 국민소득 조사와 그 시사점: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김태완·김성아) ·2012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흡연과 청소년 (이성규)
4월호 (통권198호)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과제 (문창진-한국건강 증진재단 이사장)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음주정책통합지표 고찰 및 적용 (정영호)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고숙자·정영호) ·우리나라 식이섭취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변화와 영양정책의 과제 (김혜련) ·신체활동의 현황과 과제 (고광욱) ·건강검진 현황과 과제 (안은미)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이윤경) ·공중위생분야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 (정기혜)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현황 및 접근성 제고 방향 (김동진)	·중국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운영 현황과 시사점(윤강재) ·영국의 긴축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국가의 후퇴 (김기태) ·세계적 추세: 담뱃값 경고이미지 (이성규)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5월호 (통권199호)	새 정부의 바람직한 가족정책 방향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국민행복시대의 가족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행복시대의 가족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승권)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박중서)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김유경)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김연우)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헬스': 쟁점 및 정책과제 (우혜경·조영태)	·영국의 나트룸 섭취 저감화 신전략 분석 (윤시몬) ·한국과 미국의 생명 표와 생명표 활용방안: 생명확률과 생존 함수, 기대여명, 거치 연금을 중심으로 (진재현)
6월호 (통권200호)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안용민-한국자살 예방협회 회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노용환·이상영) ·일본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정진욱)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 (이해국·이보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방안 (김영택)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정책적 대응 (정경희) ·우리나라 공공보건 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오영호) ·유통보류검사제도 심층분석을 통한 항상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검토 (윤시몬)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 (Creches parentale) 운영 사례 (신윤정) ·신생아 조산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이난희)
7월호 (통권201호)	세계인구총회 개 최의 의의 (최진호-아주대학교 명예교수 IUSSP 부산총회 국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세계인구총회(IUSSPO 개최와 한국의 인구전략 ·세계인구총회 유치배경 및 개요 (김태현) ·우리나라 인구문제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욱) ·스마트 기술과 인구변동 (조영태) ·해외의 인구전략과 정책 과제 (이상림)	·한국의 모유수유 실천양상과 영향요인 및 정책과제 (김혜련)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및 연계체계 개선방안 (최은진)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치매 케어정책과 시사점 (선우덕) ·영국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알레르겐) 표시 기준 최근동향 분석 (윤시몬)
8월호 (통권202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이상일-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의 질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접근 (강희정) ·근거중심보건의료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 영역의 지식교환, 합성 및 활용 증진의 필요성 (김남순)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 방향 (황나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발전 방안 (석승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 발전 방안 (김계숙)	·고가의의료장비 공급 과잉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오영호) ·소셜 빅 데이터를 통한 자살 검색 예측 모형 개발 (송태민)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신윤정)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9월호 (통권203호)	보건복지통계의 동향과 과제 (최봉호-통계청 통계교육원장)	보건복지통계의 동향과 과제 ·보건통계의 동향과 과제 (장영식)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와 정책과제 (도세록) ·사회보장통계 관리방안: 2013년 추진계획 (김혜선)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통합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오미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통계생산 현황과 과제 (장영미) ·보건복지통계 DB 구축 현황과 과제 (이연희)	·공공과 민간 의료 기관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변량 분석: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중심으로 (송태민·고혜연) ·복지용구 그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김대중)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이주연·김미숙) ·OECD 국가의 노동 시장정책 동향 및 복지정책과 연계의 시사점 (김태은)
10월호 (통권204호)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정책방향 (이원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노후준비 현황 및 정책과제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정경희)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이윤경) ·노후준비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 및 사회참여 준비현황과 시사점 (염주희·김세진)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이소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 (노대명) ·지방자치단체 국가 승인통계 현황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진재현)	·유럽연합의 천연착향료 관리규정 최근 개정 동향 (윤시문·김정선) ·일본의 빅데이터 동향
11월호 (통권205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역할과 자원 분담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기능 및 재정 부담구조 (박인화)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연가연) ·지자체 자체복지지출에 연계한 국고차등지원 방안 (원종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고제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정영철·이아리) ·간호인력구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정영호)	·스위스 가구패널(SHP)의 발전전략 과 시사점 (오미애·최현수) ·2013~2014년 미국 FDA CFSAN의 식품 안전 및 영양분야 우선추진사업 프로그램 계획 (윤시문)
12월호 (통권206호)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방안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윤석명)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장미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윤상용)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김미숙)	·모차보건지표의 변화추이와 정책과제 (김혜련) ·기후변화와 통합적 푸드시스템 (이서희·김정선)	·경제 위기에서 유럽 국가 가족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신윤정) ·호주 의료이용통계 현황 및 시사점 (오미애)

보건·복지 Issue& Focus

주요 정책고객 및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 합니다.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171호(2013-0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강혜규	2013-01-04
제172호(2013-02)	한국 고령자의 교통 이용 현황	염주희	2013-01-11
제173호(2013-03)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정은희	2013-01-18
제174호(2013-04)	담배규제기본협약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최은진	2013-01-25
제175호(2013-05)	부모이혼이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	2013-02-01
제176호(2013-06)	지출기준 빈곤율과 계층간 이동성 분석	남상호	2013-02-08
제177호(2013-07)	EU 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 동향과 시사점	신윤정	2013-02-15
제178호(2013-08)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철선	2013-02-22
제179호(2013-09)	식품의 건강 위해-편익 평가제도 도입	김정선	2013-03-01
제180호(2013-10)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송태민	2013-03-08
제181호(2013-11)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정경희	2013-03-15
제182호(2013-12)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적연금부채의 산정	신화연	2013-03-22
제183호(2013-13)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이삼식	2013-03-29
제184호(2013-14)	이슬람 사회의 사회정책과 그 배경: 터키의 사례	이현주	2013-04-05
제185호(2013-15)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김혜련	2013-04-12
제186호(2013-16)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신현웅	2013-04-19
제187호(2013-17)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유근춘	2013-04-26
제188호(2013-18)	식품안전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기혜	2013-05-03
제189호(2013-19)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검증	이윤경	2013-05-10
제190호(2013-20)	미국의 위임제네릭 현황과 시사점	박실비아	2013-05-17
제191호(2013-21)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김은정	2013-05-24
제192호(2013-22)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황나미	2013-05-31
제193호(2013-23)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고용·복지연계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2013-06-07
제194호(2013-24)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김동진	2013-06-14
제195호(2013-25)	근거중심보건정책의 의미와 발전방안	김남순	2013-06-21
제196호(2013-26)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 외래이용을 중심으로	정영호	2013-06-28
제197호(2013-27)	EU의 식품안전·영양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곽노성	2013-07-05
제198호(2013-28)	우리나라 장사문화 현황	정영철	2013-07-12
제199호(2013-29)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중	2013-07-19
제200호(2013-30)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김태완	2013-07-26
제201호(2013-31)	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	윤석명	2013-08-02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202호(2013-32)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숙	2013-08-09
제203호(2013-3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오영호	2013-08-16
제204호(2013-34)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이상림	2013-08-23
제205호(2013-35)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김유경	2013-08-30
제206호(2013-3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황과 소비자 행태	윤강재	2013-09-06
제207호(2013-37)	일본의 자살 현황 및 대책	정진욱	2013-09-13
제208호(2013-38)	장애노인의 실태와 과제	김성희	2013-09-27
제209호(2013-39)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와 창조경제	원종욱	2013-10-04
제210호(2013-40)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남상호	2013-10-11
제211호(2013-41)	OECD 국가의 보건수준	장영식 함선유	2013-10-18
제212호(2013-42)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박인화	2013-10-25
제213호(2013-43)	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	선우덕	2013-11-01
제214호(2013-44)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함의	김문길	2013-11-08
제215호(2013-45)	여성 경제활동 현황, 결정요인 및 효과	여유진	2013-11-15
제216호(2013-46)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현황과 당면 과제: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신윤정	2013-11-22
제217호(2013-47)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	고속자	2013-11-29
제218호(2013-48)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서미경	2013-12-06
제219호(2013-49)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가제)	이상영	2013-12-13
제220호(2013-50)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추진방안	오영희	2013-12-20
제221호(2013-51)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최현수	2013-12-27

Society in Perspective (2013년 창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관련 이슈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온라인 영문저널로 계간으로 발행 합니다.

Volume 1.	
Briefing	Keeping the National Pension in Good Shape for Posterity
Book Review	Suicides in Korea: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by Sang-young Lee et al.)
Where Korea Stands	
Volume 2.	
Briefing	Middle Class Statistics and Their Discountents Keeping the National Pension in Good Shape for Posterity
Book Review	An In-depth Analysis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2012 (by Sang-ho Nam et al.)
Where Korea Stan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2014년 연구사업

1. 2014년도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3. 2014년도 사업개요

1. 2014년도 사업목표

총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보건의료시스템에 내재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체계 구축
- 공급자-수요자 상호신뢰가 작동하는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100% 행복사회” 구현
-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
- 정책 개발·결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생산
- 한국 의료의 질(quality) 성과 평가 및 건강불평등(disparity) 지표 산출
-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도입방안 연구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기전 분석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안 연구
- 생활습관병 감소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
- 자살위험도 변동과정 및 원인분석과 지역간 격차 요인 분석
- 보건복지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빅 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및 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공부부조제도 개편에 따른 학술 및 정책 기초자료 생산
-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 또는 기초 연구
- 사회통합 및 갈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도 제고방안 제시
- 국민행복시대 진입을 위한 보건복지재정 분석 및 재정 전망
- 사회서비스 연구분야 간 하이브리드적 연구성과물 생산
- 선진화된 보건복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 인구 변동에 대응한 인구전략 마련
- 저출산 대응 실효성 확보
- 고령사회 대응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제시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새 정부 국정방향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완 내지 강화
- 인구,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3. 2014년도 사업개요

기본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p>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의료의 역할을 고려한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과 주요과제 도출</p> <p>46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p>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p>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질(quality) 성과를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 제시</p> <p>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p>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p>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를 검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형평성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지표를 주기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생산 및 향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p> <p>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p>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 도입 방안	<p>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에 대한 한계와 발전적인 지불체계 개편으로 많은 논의중인 성과연동 지불제도 및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가치기반 성과보장 지불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성과분석,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 여부 및 도입방안 마련</p> <p>46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p>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미디어, u-Health 서비스의 확산으로 보건복지 관련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보건복지 관련 빅데이터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p> <p>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79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p>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p>국내의 주요 국가의 병원산업의 성장과 진화 모습, 국내외 환경변화가 병원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p> <p>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0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17 산·학·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p>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p>보건의료시장에서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과 이슈를 고찰하고,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이후 확산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여 신의료기술의 합리적 도입과 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p> <p>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p>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p>한국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슈별로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하며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 접점을 모색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발전방향 마련에 정책적 기여</p> <p>46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p>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p>생활습관병 실태를 분석하고 치료순응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생애말기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선호체계를 반영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 제공</p> <p>46 건강강한 가정 만들기 46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p>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p>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일본&영국 편</p>	<p>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 체계를 살펴보고 제도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4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4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p>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p>	<p>정부 재정지출의 고용-복지 연계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이 노동공급이나 가계부문의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4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p>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p>	<p>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시장잠재력을 비교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 정비방안과 정책과제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8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p>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p>	<p>국내 장애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장애노인 관련 프로그램 및 이의 운용방식 등을 파악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p>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유형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p>	<p>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유형 및 가족 관계별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국정과제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 건강한 가정만들기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51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p>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p>	<p>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복지 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 건전재정 기초 정착 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p>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p>	<p>동일·유사 정책목적에 따라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 사회복지 정책조합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1 건전재정 기초 정착 45 건강한 가정만들기 4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29 교육비 부담 경감
<p>수시연구사업</p>	<p>보건복지 부문의 환경변화에 따른 긴급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과제 선정 수행</p> <p>-</p>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일반사업 / 협동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모니터링·평가·환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 및 사업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39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1 건전재정 기초 정착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5 건강한 가정만들기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48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0 행복한 임신과 출산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중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건강결정요인별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책 개선방안 도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0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4대 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자살 욕구 및 충동이 생애주기를 경과하면서 누적 또는 완화되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retrospective data analysis), 이러한 패턴이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요인을 개인측면과 social settings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방향 및 전략 개발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5 건강한 가정만들기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사회보장정책 비교 연구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변화를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별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정책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재 분석가능한 사회지출과 성과를 종합하여 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유형화
	13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14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사례발굴,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진단, 각종 경제사회정책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평가,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사회통합 정책평가를 위한 DB 구축을 통해 연구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활성화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센터 운영	<p>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적 복지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영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적 복지발전을 이루어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과정을 고도화</p> <p>48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67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6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6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p>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p>자본주의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적인 패턴과 최근 복지국가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성, 철학적 기반,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탐색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한국복지국가의 경로와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 아울러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구상</p> <p>48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p>
보건복지 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p>보건복지에 특화된 통계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신규통계의 수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보건복지통계 및 보건복지분야 조사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지속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구현함으로써 통계제공을 통한 정책의 신속성 및 근거기반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p> <p>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68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p>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p>외부 연구자 및 정책관련 담당자들에게 한국복지패널자료를 공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대회 보고서 작성을 통해 패널 조사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 제고</p> <p>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p>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p>국민의 의료비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및 공급자 특성분석,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을 통해 국민의료비 산출 및 변화양상 추적, 의료비의 흐름(인과관계)을 분석,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동태적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의료비 지출항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p> <p>48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p>
가임기 여성 임신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협동연구)	<p>임신 전 건강관리 경험이 출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임신 전 여성 출산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정비 및 민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p> <p>67 행복한 임신과 출산</p>
복지와 기술 융합(W-Tech) 체계 구축 연구(협동연구)	<p>보건복지분야 미래 트렌드 및 복지육구 분석을 통해 파악한 기존 및 새로운 복지육구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활용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복지과 기술 융합체계를 재원 투입과 관리체계라는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p> <p>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p>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시안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시안

연구관련사업

과제명	개요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 서비스	외국의 보건복지 정책 및 제도 사례에 관한 국내 전문가의 지식축적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 현황에 대한 외국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이해력 제고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을 위해 복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기여도 높일 수 있는 포럼 운영
국민연금 기금관리 전문가 포럼 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금융, 연금정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금운용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향 논의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 운영	남북한 통일 및 북한 의료·사회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재의 남북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 저해요인 등을 논의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대응 수단을 정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2014년 빈곤통계연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에 2013년도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여건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중간소득계층비율, 근로빈곤층 등)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 등의 소득분배 실태를 횡단면, 종단면으로 이해하는데 기여

연구지원사업

과제명	개요
연구기획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맞는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조정,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치 및 책임성 강화
출판물 발간 및 홍보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 결과물의 생산 및 배포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구성과물 출판을 통한 기관홍보의 극대화 및 대국민 보건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전산운영	연구원에서 창출된 지식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한 IT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학술정보운영	보건, 복지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 정리,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 및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웹기반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정보와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

I. KI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Annual Report

V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3 Annual Report

부록

1.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①기본연구 ②수시연구 ③일반연구 ④협동사업 ⑤수탁연구
2. 기타 간행물
3. 연구위원 현황
4. 도서관
5. KIHASA 웹사이트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 기본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근거기반정책에 필요한 연구 근거현황 및 활용	2013.01.01.~2013.10.31.	김남순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2013.02.01.~2013.11.30.	김혜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2013.02.01.~2013.11.30.	김대중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2013.02.01.~2013.11.30.	윤강재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2013.01.01.~2013.10.31.	정기혜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2013.01.01.~2013.10.31.	김정선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02.01.~2013.11.30.	박은자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2013.01.01.~2013.10.31.	신현웅
의약품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2013.02.01.~2013.11.30.	박실비아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2013.01.01.~2013.12.31.	김동진
한국의 의료의 질 성과와 정책과제	2013.02.01.~2013.11.30.	강희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	2013.02.01.~2013.11.30.	원종욱
소득분배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2013.01.01.~2013.10.31.	강신욱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2013.02.01.~2013.11.30.	남상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2013.03.01.~2013.12.31.	김태완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2013.01.01.~2013.12.31.	김문길
2013년 빈곤통계연보	2013.01.01.~2013.12.31.	노대명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2013.02.01.~2013.11.30.	노대명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분석	2013.01.01.~2013.12.31.	이현주
한국복지 질적 패널 구축	2013.01.01.~2013.12.31.	김미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2013.03.01.~2013.12.31.	박세경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2013.02.01.~2013.11.30.	정홍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2013.03.01.~2013.12.31.	김성희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연구	2013.03.01.~2013.12.31.	박수지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2013.01.01.~2013.12.31.	고경환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2013.01.01.~2013.10.31.	고제이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2013.01.01.~2013.12.31.	신화연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2013.01.01.~2013.10.31.	유근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2013.02.01.~2013.11.30.	정영철
한국 아동빈곤의 특성: 세대간 전이, 만성적 빈곤 및 다차원적 빈곤을 중심으로	2013.04.01.~2013.12.31.	정은희

■ 수시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의(醫)·한의(韓醫) 업무영역 현황과 주요과제	2013.03.01.~2013.08.31.	윤강재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2013.03.25.~2013.08.31.	고숙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방향	2013.04.15.~2013.07.31.	신영석
국민대통합 및 추진전략 연구	2013.04.29.~2013.06.29.	노대명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3.05.01.~2013.12.31.	김미숙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 기준 연구	2013.07.10.~2013.11.30.	고제이
한국형 복지모델의 전망과 모색	2013.09.01.~2013.12.30.	신영석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13.09.01.~2013.12.31.	유근춘
사회복지정책의 현안 점검 및 중점추진과제 발굴	2013.09.23.~2013.11.30.	정홍원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 사고 유형과 원인	2013.11.22.~2013.12.31.	이현주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2013.09.01.~2013.12.31.	최병호

■ 일반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8년차)	2013.01.01.~2013.12.31.	이삼식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인구전략 연구	-	이삼식
인구예측모형 개발	-	이삼식
자녀양육 지원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신윤정
보육서비스 공급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보호실태와 정책과제	-	김미숙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	여유진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	도세록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	김유경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자질 향상 방안: 고령임산부의 출산실태와 정책과제	-	이소영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	황나미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	오영희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	(서울대)
남북한 통합시 적정인구 연구	-	최병호
중노년층의 삶의질과 정책과제	-	정경희
고령화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연구	-	이윤경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	윤석명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선우덕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자 특성 분석을 통한 역할정립방안 연구	-	김진수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	정영호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산업연구원)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국제비교 연구	-	이삼식(EWC)
국제심포지움	-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이삼식
고령사회 포럼 운영	-	정경희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윤경
2013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3.01.01.~2013.12.31.	서미경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 운영	-	서미경
건강영향평가 TWG 성과평가 및 건강행태 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를 위한 전략 평가	-	최은진
2013년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4년차): 사회보험 정책 연구	2013.01.01.~2013.12.31.	홍석표
취약위기와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4년차)	2013.01.01.~2013.12.31.	정은희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 .제 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2013.01.01.~2013.12.31.	이철선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3.01.01.~2013.12.31.	오미애
2013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3.01.01.~2013.12.31.	송태민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 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2013.01.01.~2013.12.31.	이상영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2013.01.01.~2013.12.31.	김승권
2013년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2013.01.01.~2013.12.31.	이현주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	이현주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 분석: 2012년 신규표본가구 추가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최현수
201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012년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사회복지 분석	-	이현주
2013년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2013.01.01.~2013.12.31.	최정수

■ 협동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3년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2013.01.01.~2013.12.31.	오영호
가임기 여성 임신전 출산건강관리 지원방안 연구(1년차)	2013.01.01.~2013.12.31.	이상림

■ 수탁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Analyzing Social Protection Policies: A Focus on Income Support	2011.03.07.~2014.02.28.	윤석명
2012년 기준 환자조사	2012.03.01.~2013.06.24.	도세록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2012.03.21.~2013.11.29.	김태완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방안	2012.06.12.~2013.08.11.	신영석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10.04.~2013.02.03.	신영석
장기요양 인프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2012.08.10.~2013.03.02.	선우덕
2012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2012.06.25.~2013.08.30.	장영식
2011년 기준 환자조사 심층 분석	2012.07.02.~2013.05.31.	도세록
2012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2012.10.01.~2013.02.28.	오영희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2012.11.01.~2013.01.31.	강신욱
가족변화관련 사회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2012.10.25.~2013.02.25.	김승권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전략 수립(사회적 관점)	2012.10.25.~2013.02.25.	김승권
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2012.11.26.~2013.11.25.	김정선
주요 선진국의 정신건강 관리사례 조사 분석	2012.11.19.~2013.01.31.	이상영
노후준비지원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12.11.28.~2013.04.26.	이윤경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 변화 연구	2012.11.28.~2013.05.27.	이상영
ASEAN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	2012.12.15.~2013.08.15.	홍석표
ASEAN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	2012.12.12.~2013.03.11.	박수지
간호인력 자격제도와 수급 전망	2012.12.21.~2013.03.10.	오영호
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2012.12.24.~2013.07.23.	김승권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3.01.01.~2013.12.31.	정영철
나눔문화에 대한 전화조사	2013.01.04.~2013.01.31.	이연희
2013년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2013.01.07.~2013.12.20.	장영식
IUSSP 세계인구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2013년)	2013.01.01.~2013.12.31.	이삼식
장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2013.01.01.~2013.04.30.	정영철
천연차향료 관리방안 마련 연구	2013.02.01.~2013.11.30.	김정선
식품에 대한 Risk.Benefit Analysis 모형 개발	2013.02.01.~2013.11.30.	김정선
식품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02.01.~2013.11.30.	정기혜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효율적인 의료기기광고 관리방안 마련 연구	2013.02.01.~2013.11.30.	곽노성
곤충매개 병원체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적응기술 개발	2013.01.01.~2013.03.31.	김동진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3.01.24.~2013.12.13.	고경환
2013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2013.01.25.~2013.12.06.	장영식
2013년 기준 환자조사	2013.02.04.~2013.12.06.	도세록
포항시 저출산대책	2013.01.31.~2013.09.27.	이삼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인정 내용의 표시광고 허용수준 연구	2013.02.01.~2013.11.30.	곽노성
관광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시범사업 평가 연구	2013.02.15.~2013.12.13.	정기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FCCT) 및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대응방안 연구	2013.02.15.~2013.08.14.	최은진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비교 연구	2013.02.15.~2013.08.14.	정영호
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	2013.02.28.~2013.11.29.	신영석
2013년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사업	2013.03.05.~2013.12.31.	정홍원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2013.03.11.~2013.12.10.	김남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운영	2013.03.13.~2013.11.12.	김승권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2013.03.06.~2013.09.05.	신현웅
2009~2011 영아사망 및 사산원인 분석	2013.03.19.~2013.08.16.	최정수
입양청소년 한부모 지원방안	2013.03.21.~2013.10.31.	신윤정
중국의 중앙 자원 관리현황과 세계화 전략	2013.04.30.~2013.11.29.	윤강재
2013~2017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보건복지분야)	2013.04.01.~2013.12.20.	김태완
협동조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3.04.02.~2013.09.30.	이철선
2012년도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2013.04.03.~2013.12.06.	박실비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3	2013.04.12.~2013.11.15.	최은진
국립 망향의 동산 안장시설 수급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3.04.11.~2013.11.30.	이삼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13.04.16.~2013.12.03.	박세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3.04.12.~2013.11.29.	노대명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2013.04.18.~2013.12.12.	신화연
2013년도 사회보장통계생산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2013.04.24.~2013.11.29.	이태진
에너지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2013.04.24.~2013.06.30.	이현주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	2013.04.29.~2013.08.28.	강혜규
보건료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	2013.04.30.~2013.06.25.	김대중
취업부모의 출산양육 여건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 개발	2013.05.03.~2013.12.02.	이삼식
2012년 기준 환자조사 심층분석	2013.05.07.~2013.11.15.	송태민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2013.05.22.~2013.11.29.	김성희
장기요양등급 체계개편 및 치매관리 모형 개발	2013.05.10.~2013.12.24.	이윤경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3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2013.05.07.~2013.11.30.	정영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지원 연구	2013.05.07.~2013.10.04.	정홍원
동아시아국가 가족정책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2013.05.09.~2013.10.04.	신윤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추진방안 연구	2013.05.16.~2013.12.13.	노대명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05.16.~2013.11.15.	이삼식
임플란트급여 적용방안 연구	2013.05.20.~2013.12.19.	강희정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3.05.23.~2013.11.22.	박설비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 분석 평가	2013.05.22.~2013.10.31.	정경희
체계적 원가조사를 위한 요양기관 패널제도 도입 연구	2013.05.23.~2014.01.22.	이상영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2013.05.24.~2013.12.23.	신현웅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기준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3.05.24.~2013.11.22.	신화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득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3.05.28.~2013.11.27.	박은자
건강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건강성과지표 산출에 관한 연구	2013.05.28.~2013.11.27.	고속자
2013년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평가 및 평가체계 구축 시범사업	2013.05.30.~2013.12.10.	정기혜
미래 고령사회대응 베이비붐 세대 및 전후세대 실태분석	2013.05.27.~2013.12.26.	정경희
서울복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2013.06.11.~2014.02.10.	최현수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 연구	2013.06.12.~2013.11.08.	김성희
아동종합 실태 조사	2013.06.12.~2013.12.20.	김미숙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	2013.06.14.~2013.12.13.	최은진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013.06.19.~2013.11.29.	김미숙
저소득층 건강수준제고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2013.06.18.~2013.11.14.	황도경
건강보험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 분석	2013.06.27.~2013.12.26.	신현웅
2013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2013.07.01.~2014.02.28.	오영희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2013.07.11.~2013.11.29.	황나미
인구구조의 장기전망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13.07.11.~2013.12.10.	남상호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2013.07.31.~2013.12.31.	김유경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	2013.08.01.~2013.09.30.	이삼식
OECD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2013.08.12.~2013.11.11.	김문길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1)	2013.08.08.~2013.12.13.	이삼식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2013.08.08.~2013.12.05.	박세경
국민행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방안	2013.08.13.~2013.11.29.	김미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2013.08.13.~2013.11.29.	이현주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2013.08.13.~2013.11.29.	김동진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2)	2013.08.16.~2013.12.13.	이삼식
노인건강 운동사업 비용 편익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13.08.16.~2013.12.30.	정영호
보건정책관리 다년간 연수과정	2013.08.25.~2013.10.11.	강유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역할 제고방안	2013.08.16.~2013.10.31.	김태완
기초노령연금 14년 선정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2013.08.23.~2013.12.06.	최현수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3)	2013.08.26.~2013.12.13.	이삼식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연구	2013.08.26.~2013.12.06.	이철선
사회복지 민관협력 강화방안 연구	2013.08.28.~2013.11.29.	박수지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표개발 연구	2013.09.03.~2013.11.29.	염주희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2013.09.02.~2013.12.10.	정기혜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2013.09.03.~2013.11.30.	최현수
부여군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계획 수립	2013.09.09.~2014.04.06.	최은진
2013년도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2013.09.09.~2013.12.24.	정기혜
보호자없는 병원(포괄 간호시스템)제도화 방안	2013.09.13.~2014.09.12.	황나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운영효율적 제고를 위한 심층연구	2013.09.12.~2013.11.29.	이태진
사회보장제도 관리대상사업 분류체계 구축 연구	2013.09.12.~2013.11.29.	고제이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인증표시 효율화 방안	2013.09.16.~2013.12.06.	정기혜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 분석	2013.09.26.~2013.12.26.	신현웅
2015~2030보건의료 인력증장기 공급추계 연구	2013.09.27.~2014.09.26.	오영호
경제사회 현상분석 예측을 위한 슈퍼컴퓨팅 기반 ABM 시뮬레이터와 실시간 인구현황 파악 전망 적용 SW 기술개발	2013.09.01.~2014.08.31.	이삼식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환경분석 연구	2013.09.30.~2013.12.29.	강은나
2013년 지역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성과분석	2013.10.01.~2013.11.29.	김승권
인구구조 국제경쟁력 지수산출과 정책과제	2013.10.01.~2013.11.30.	이상림
인구구조 지역경쟁력 지수산출과 정책과제	2013.10.01.~2013.12.31.	이상림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방안 연구	2013.10.02.~2013.11.29.	이철선
4대 중독등 정신건강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2013.11.01.~2014.03.31.	정진욱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2013.10.16.~2013.12.15.	여유진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 적용 방안	2013.10.17.~2014.03.16.	오영호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2013.10.25.~2014.02.28.	정홍원
국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2013.10.29.~2013.12.26.	여유진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2013.10.30.~2014.05.27.	김정선
인구교육 전문가양성 표준교육 과정 개발	2013.10.31.~2013.12.13.	김미곤
아동정책 지표개발 연구	2013.10.30.~2013.12.03.	전진아
보건복지개인정보 수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2013.11.21.~2013.12.20.	정영철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2013.12.04.~2014.06.03.	김미숙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2013.12.18.~2014.06.17.	황도경
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2차년도)	2013.11.26.~2014.11.25.	김정선

■ 연구관련사업

연구관련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2013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2013.01.01.~2013.12.31.	강유구
2013년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모색(정부 및 학계 전문가 포럼)	2013.01.01.~2013.12.31.	노대명
2013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2013년 실무자에 의한 기초보장평가 (포럼)	2013.01.01.~2013.12.31.	최현수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	2013.01.01.~2013.12.31.	원종욱

기타 간행물

■ Working Paper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Project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Total Tax Burden in Korea	원종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 National Burden and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유근춘
Analysis of the Effects of Obesity Control o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정영호
Usage of medical servic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measures to enhance accessibility	김동진
Analysis of Drinking-Related Socioeconomic Costs and Cost Effectiveness of Drinking Prevention Policy	고숙자

■ 현안보고서 / 정책자료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송태민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원종욱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과 창조경제	원종욱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방안	원종욱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원종욱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고령사회포럼	정경희
Socioeconomic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	이삼식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연구위원 현황 (2014.03.31.)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원장	신영석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재정
연구기획실장	신현웅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신보건, 의료정책
보건정책연구본부장	이상영	보건정책 및 건강보장, 보건경제, 건강증진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현주	빈곤, 사회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이삼식	인구분석, 인구정책개발, 다문화, 북한
미래전략연구실장	원종욱	기금운용, 기금제도, 사회재정, 경제성분석
사회통계연구실장	정홍원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분석, 소득보장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승권	정책평가, 가족정책, 인구정책, 아동복지
	변용찬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정경희	노인복지, 고령정책, 장기요양서비스, 가족부양
	정기혜	식품안전, 공중위생, 정책평가
연구위원	강신욱	빈곤정책, 소득분배, 사회통합
	강혜규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복지행정
	강희정	건강보험제도·급여, 부당청구 및 사후관리, 의료공급자 프로파일링 및 성과평가
	고경환	복지재정, 복지경영, OECD SOCX 추계
	김남순	근거중심보건의료, 의료의 질, 기후변화와 건강
	김미곤	공공부조, 빈곤, 소득분배, 소득보장
	김미숙	빈곤아동, 아동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일자리
	김성희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실태조사, 직업재활
	김유경	다문화가족정책, 미혼모·한부모정책, 입양정책, 정책·시설평가
	김정신	식품정책,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분석
	김진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김태완	빈곤 및 사회분배, 사회정책, 공공부조, 농어촌복지
	김혜련	건강증진, 보건영양, 다문화가족 건강
	남상호	소득 및 자산분포, 복지재정, 고령화정책
	노대명	기초보장, 자활사업, 사회통합
	도세록	보건복지통계, 통계생산방법
박세경	아동/가족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자원봉사	
박실비아	의약품정책, 의약품산업, 의료보장	
서미경	보건교육, 건강증진	
선우덕	장기요양, 노인보건복지, 노인사회활동지원, 고령화대책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연구위원	송태민	U-Health, 보건정보, 보건복지통계
	신윤정	저출산, 영유아보육, 가족, 아동
	여유진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교육불평등, 빈곤정책
	오영호	보건정책, 의료인력, 의료자원
	오영희	노인보건정책, 노인여가복지정책, 고령화정책
	우해봉	공적연금제도, 다층소득보장체계, 사망력, 혼인력
	유근춘	보건복지재정, 경제성평가, 보건의료
	윤석명	공적연금, 다층소득보장, 복지재정, 효과적 은퇴준비
	이철선	고용복지연계모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산업
	이태진	주거빈곤, 노숙인지원서비스, 공공부조모니터링
	정영철	보건복지정보화 계획 및 평가, 보건복지통합정보
	정영호	보건경제, 보건의료정책, 의료재정 및 의료비, 건강증진, 보건산업
	최은진	담배안전관리, 건강영향평가, 청소년보건교육
	최정수	공공보건의료, 모자보건, 보건정책
부연구위원	최현수	빈곤 및 소득보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정책모니터링
	홍석표	사회안전망, 복지지표, 건강보험, 의료급여
	황나미	여성과 어린이 건강정책, 통일대비 보건정책, 저출산ODA
	강은나	노인경제활동, 사회참여, 사회복지행정
	고숙자	보건경제, 보건정책, 건강증진
	고제이	조세정책, 세수추계, 복지재정, 미시모의실험모형
	김대중	보건정책, 산업조직, 복지용구
	김동진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영향평가
	김문길	빈곤정책, 불평등, 고령화, 사회보험
	김은정	보육서비스, 가계소비, 가족정책, 소비자경제
	박수지	사회서비스정책, 근로연계복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박은자	의약품정책, 약물역학, 노인건강
	박종서	가족사회학, 일-가정양립정책, 저출산정책
	변수정	가족복지, 다문화가족,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수경	의료자원정책, 지불보상제도, 만성질환관리정책, 계량경제방법론
	신화연	공적연금재정평가, 장애연금제도, 사회복지예산지출추계
	오미애	기계학습, 데이터마ining, 표본설계
	윤강재	보건의료정책, 한방의료정책, 공공보건의료
이상림	인구변동, 결혼 및 가족, 다문화 및 국제이동	

I. KHASA 현황

II. 2013년 연구사업

III. 2013년 연구성과

IV. 2013년 연구활동

V. 2014년 연구계획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연구위원	이소영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임신출산정책, 사회조사방법론
	이수형	건강형평성, 보건의료전달체계,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이윤경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기요양, 정책설계 및 평가
	임완섭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빈곤 및 관련 통계, 고용복지연계
	전진아	정신건강, 건강증진, 국제보건
	정은희	아동빈곤, 사례관리, 양육
	정혜식	비교사회정책, 사회통합, 사회보장통계, 다차원불평등
	조성호	인구경제, 노동경제, 응용미시분석
	황남희	세대간 소득이전, 세대간 형평성, 노후소득, 사회참여
	황도경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의료분야
	황주희	장애인복지정책, 직업재활
초빙연구위원	김재호	고령화, 연금, 고용, 빈곤
	박인화	사회보장재정분석, 의무지출분석
	백혜연	연생모형연구, 다층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노후생활안정효과
	송병룡	개인정보 위험관리 및 패턴분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신정우	국민의료비, 수가(상대가치, 환산지수)정책
	이아리	보건복지개인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 및 보안, IT융합기술
	장영식	보건통계, 인구통계, 사회지표
	정진욱	사회정신건강정책, 자살예방대책, 공중위생

도서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 및 가족계획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전문 발간물과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도서관입니다.
-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및 국제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756종(약 2만여 권) 및 CD-ROM, 전자저널, 학술DB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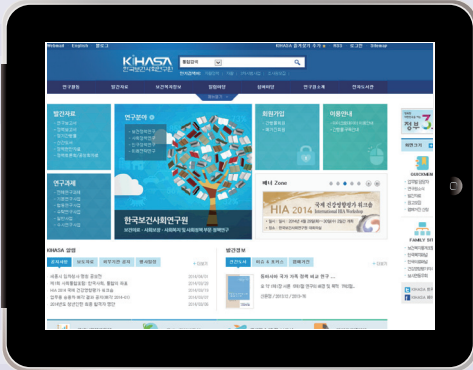
방문예약 및 문의

전화: 02-380-8229

이메일: library@kihas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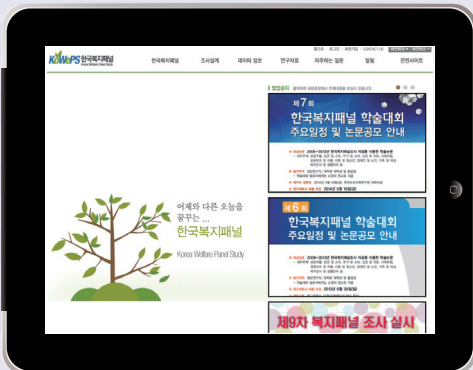


KIHASA 웹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서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최신 보건 복지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koweps.re.kr>)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개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리서치브리프 등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통계포털 (<http://hawelsis.kihasa.re.kr>)

- 보건복지통계포털은 국내외 보건복지분야의 각종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 복지재정통계, 통계관련 분석보고서, 통계뉴스, 조사사업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용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통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맞춤형 비정형통계를 서비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제별 또는 일반통계, 북한통계, 지역통계, 국제통계 등 영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이용자의 통계접근성 편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지식포털 (<http://hia.kihasa.re.kr>)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은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모바일 웹 · 앱 출시

이제 모바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웹

1. QR 코드



2. 모바일 기기에서
m.kihasa.re.kr로 접속



>> 모바일 앱

1. 안드로이드마켓(Play Store),
앱스토어(App Store)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사연, KIHASA로 검색
2. 다운로드 후 설치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014년 3월 발행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재지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문의 TEL. 02-380-8000
인쇄 경성문화사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827-126-7



www.kihasa.re.kr

KIHASA



ISBN 978-89-6827-126-7